

# 동아시아 시민성을 향하여

—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모색과 전망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편





# **동아시아 시민성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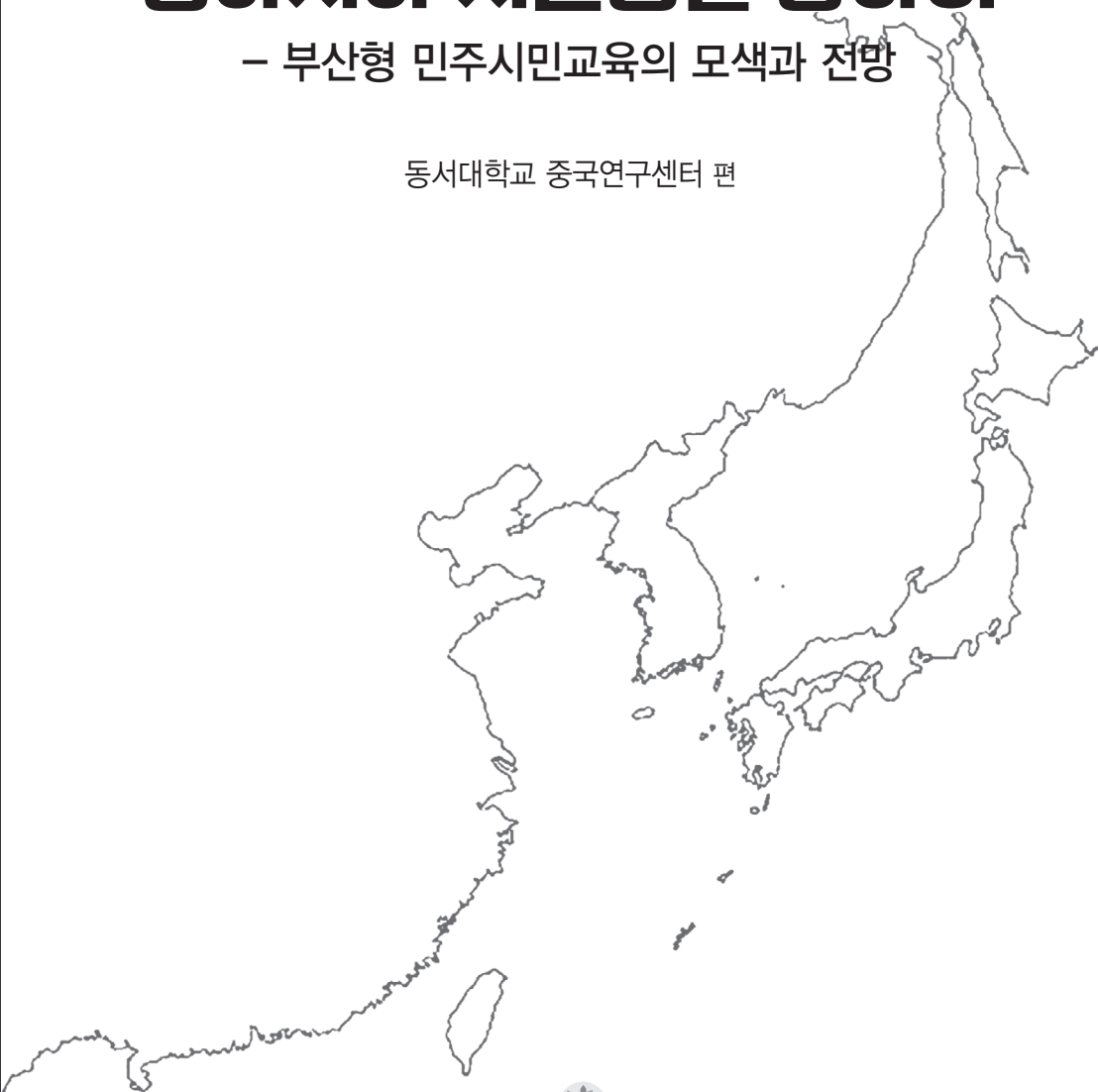
－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모색과 전망



# 동아시아 시민성을 향하여

—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모색과 전망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편



이 연구 개발 사업은 2021년 부산시 민주시민교육보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연구개발 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출판물의 저작권은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이번에 책으로 출간되는 이 연구는 2021년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연구개발 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가 진행한 것이다.

이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잠깐 언급하자면, 2018년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 시민단체 48개 단체가 함께 준비한 결과, 2019년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출범되었다. 아울러 2018년 12월 김광모 의원(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통과됐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통과되었다.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019년 2월 22일 정식 출범 후, 내부 인력 중 일부를 선발해 부산인재평생교육원의 연구원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19)를 수행했다. 이때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는 중·장기 비전의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중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교육을 기획하는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는 것, 즉 부산의 장소성에 맞는 그러나 부산 지역에 갇히지 않는 민주시민교육 연구를 지속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차별성 중 하나였다. 그간 제출된 대부분의 민주시민교육에는 장소성이 빠져 있어 폴뿌리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이 부재하거나 추상적 선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였다.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연구기획의 중점은 네 가지였다. 1) 부산이라는 장소성에 기반을 둔 민주시민교육을 제출할 것, 2) 3년간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계기를 만들 것(1년 차: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비전 마련/ 2년 차: 부산의 다양한 시민사회가 참여해 각 단체별로 실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비전을 매체론과 방법론으로 분석할 것/ 3년 차: 1년 차와 2년 차 연구를 종합하고, 다음 3년의 연구를 예고할 것), 3)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이 동아시아 시민성을 견인함으로써, 새로운 지구적 민주주의와 민주적 시민성을 위한 중요한 동기를 제공할 것. 나아가 4)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이 지역 간 민주시민교육을 견인하고,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비민주적 장소성의 중력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것 등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이 지역에 한정되지 않으면서도 장소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모델의 민주시민교육을 연구할 연구단을 찾았고, 그동안 동아시아 시민성 연구모임을 꾸려온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가 선정되었



다. 중국연구센터는 동아시아 시민성을 만드는 첫걸음으로서 부산의 장소성에 기반을 둔 민주시민교육 과제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양측의 이러한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출간되는 이 연구서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장은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의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을 먼저 진단한다. 여기서는 기존 민주시민교육이 취약한 존재들, 그리고 배제된 존재들을 도외시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 이들을 외면한 채, 설정된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모든 사람들을 주권자로 모시는 민주주의 정신에 충실한 것일까 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은 민주주의의 개념과 정신 그리고 역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역시 배제된 존재, 상처에 취약한 존재, 즉 서발터니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야 함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상처받을 수 있는 몸과 감정 그리고 정신을 가진 인간에 대한 근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며, 동시에 그런 몸들이 깃들고 생활하는 장소성을 도외시하고서 실행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연구서가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을 제안하면서 ‘부산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이유다. ‘부산형’이란 단순한 행정단위 명이 아니라 부산 안에 중첩돼 있는 다양한 장소성을 지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그 많은 장소성 중 유독 ‘동아시아’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동아시아 역사에 새겨진 복잡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구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수준을 넘어 동아시아 단위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은 동아시아 시민성임을 촉구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2장은 우선 다양한 학문적 전통에서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대표적 이론가인 에드워드 랠프의 기존 논의를 따라가면서도 기존의 장소-장소성 관련 담론의 약점과 한계도 지적한다. 바로 취약성을 지닌 이들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없다는 것으로 취약한 이들의 입장에서 특정 장소와 장소성에 접근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거주지역 특성과 이슈들을 도외시하는 기존 교육방식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장소기반교육의 기존 사례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장소 기반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상술한 장소-장소성 기존 이론의 한계를 반영하여, 취약한 이들을 중심으로 부산의 장소성이 보이는 특징과 내용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부산의 취약집단 가운데 이주민, 장애인, 독거노인을 선택하여 부산에서 그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취약함의 실태를 간략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장소-장소성 이론, 장소기반교육의 약점과 한계를 보완한 부산형 장소 기반 민주시민교육의 대략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제언하는데 특히 ‘타자, 낯선 이들, 특별히 취약한 이들에 대한 환대’의 의식을 갖추고 실천적 삶을 살도록 돕는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3장은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와 한계, 그리고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에서 참고할만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제시했다.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수립과 연결된 한국의 항일독립

운동으로부터 민주화운동에 이르는 절차적이고 제도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이었다. 다만, 정치적 자유인 정치적 민주주의에 집중하다 보니 보편적 인권과 평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의 한계는 민주화운동 이후에 본격화되었고 오늘날의 중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부산 민주주의 역사는 항일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민주화운동에서 다루지 못한 민주주의 전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관심은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진작되었다. 그간의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이른바 주입식 교육과 강의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여전히 수많은 사람을 민주주의의 주체로 여기지 못했다. 게다가 현장과 경험이 삭제된 추상적인 담론에 머물렀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현장과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동아시아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4장은 ‘동아시아 시민성’ 구현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본고는 1990년대 이후에 세계화 흐름 하에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대세가 되었고 ‘동아시아 지역주의’ 역시 등장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동아시아는 각국 내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위기와 미중 갈등의 복잡한 국제관계가 더해져 ‘민주적 지역성’ 구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민주적 지역성을 확보하는 작업에 필수적이다. ‘동아시아 시민성’이라는 개념은 현대적 의미의 동아시아의 보편적 가치가 창출되어 구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동아시아 시민성’이란 보편성은 가장 홀대받고 배제되었던 ‘동아시아 서발턴’으로 시선을 옮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야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시민성’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 기반의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서발턴을 확대/연대하는 시민인문교육, 서발턴과 관련된 시민 인문학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종합하여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서발턴의 도시, 부산에서 이뤄질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이러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5장은 부산에서 결성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바라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설문을 분석하고 있다. 이어서 이런 기대에 기존(부산을 포함한 전국 단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잘 응답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관련 제도가 현장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5장은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현재 부산을 포함한 전국 단위로 진행된 실질적 민주시민교육의 사례와도 비교하고 있다. 만약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를 잘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잘 모색할 수 있다면, 부산의 민주시민교육은 꽤 준수한 민주시민교육의 궤도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궤도가 물리적으로 인력과 척력의 균형으로 형성되는 선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궤도를 설정할 때, 부산과 한국 그리고 지구에 더하여 동아시아를 반드시 썸해 넣어야 한다. 이는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의 민주시민은 한국의 민주시민이자, 세계 민주시민이면서도, 동아시아 민주시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의 민주시민교육 역시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지구적 민주시민성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반대도 성립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짧은 기간의 연구였지만,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문 회의와 공개발표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연구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초고를 시민들께 일부 공개하고 내용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내용의 추상성과 난해함을 줄이고자 했다. 이 자리를 빌려 원고를 함께 읽으며 내용의 난이도와 어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민들, 김승완, 김영, 김진영, 박순옥, 박정선, 손경은, 윤미영, 이미숙, 전미경, 정우경, 하선미, 한춘화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연구 내용을 읽고 귀중한 조언을 자문해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최인택 선생님(동아대), 석영미 선생님(여성사회교육원), 서광덕 선생님(부경대), 원동욱 선생님(동아대)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여러 참여단체와 활동가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이 장소성에 입각해 서발턴을 환대하는 민주시민교육이자 동아시아성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이어야 한다는 지향점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연구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모자람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는 모두 필자들의 책임이다. 부산형 민주시민교육 정립과 관련하여 이제 문제제기만을 한 것이므로 여전히 다양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미진하지만 이 연구가 향후의 후속연구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2021년 가을, 집필자 일동



서문 · 5

I 문제제기: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김동규 · 17

1. 기록되지 못했던 사건들, 기억되지 못한 사람들
2. 인민, 시민, 국민의 난맥상들
  - 1) 시민의 다중적 의미
  - 2) 주체의 이중성과 시민
  - 3) 데모스(사람 또는 인민 demos)의 이중성과 그 바깥
  - 4) 주권 개념의 이중성
3.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굴곡
4. 취약한 사람들의 주권과 장소의 민주주의

II 부산의 장소성과 장소기반 시민교육 김성민 · 49

1. 장소-장소성의 개념
2. 장소기반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기존 사례
3. 부산의 장소성 : 취약한 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도시
  - 1) 부산의 지역적 특징의 형성 요인
    - (1) 시간-역사적 요인
    - (2) 공간-지리적 요인
    - (3) 변화 혹은 변색

2) 부산의 장소성 : 취약한 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도시

(1) 외국인주민

(2) 장애인

(3) 독거노인

4.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을 향하여

### Ⅲ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와 과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전성현 • 75

1.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

1) 부산 민주주의의 전사 - 항일독립운동

2) 부산 민주주의사 - 민주화운동의 흐름

2. 부산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토양

1)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건

2)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적 토양

3. 부산의 민주화운동에서 다루지 못한 '지나간 미래'

4.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적 영향과 민주시민교육

1) 민주화 이후/이면의 민주주의

2) 부산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시민교육

### Ⅳ 동아시아 시민성을 향한 모색

-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 이홍규 • 123

1.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목표,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

2. 동아시아지역주의(East Asian regionalism)와 동아시아 민주주의

1) 동아시아지역주의의 필요성



- 2)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위기
3. '동아시아 시민성(East Asia Citizenship)'의 구현
  - 1) '동아시아 시민성' 구현의 필요성
  - 2) '동아시아 시민성'의 내용과 구현 방법
4. '동아시아시민'을 바로 세우는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 V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진단    김동규 · 159

1.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바람
2. 기존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한계
3. 현행 민주시민교육의 한계
4. 동아시아 민주주의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
5. 서발터니티와 해방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 결론,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안    · 201



# I

---

문제제기 :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

김동규

## 1. 기록되지 못했던 사건들, 기억되지 못한 사람들

『유언을 만난 세계』라는 책이 있다.<sup>1</sup> 비교적 최근에 출간된 이 책은 유서를 쓰고 자살한 장애인들의 사례들을 담고 있다. 고병권은 경향신문의 한 사설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제목을 〈죽은 사람의 죽지 않은 말〉로 뽑았다. 책 표지는 최옥란이라는 분의 유서로 디자인되어 있다. 최옥란은 ‘열사’로 불리지만, 통상적인 70~80년대 민주화 투쟁으로 기억되는 열사와는 다르다. 이들을 기념하는 기념관과 기념일조차 없다. 최옥란 열사 외에도 이 책에는 김순석, 최정환, 이덕인, 박홍수, 정태수, 박기연, 우동민 등 여러 사람들이 등장한다. 고병권이 언급하고 있듯,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익명인 존재들이다. 존재감을 상실한 채 이들이 남긴 말 중, 최정환의 유언은 “복수해달라”였다.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복수해달라는 것일까? 그 복수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복수의 수단은 무엇이어야 할까? 다양한 의문이 꼬리를 문다. 고병권에 따르면 이 익명 존재들이 요구한 것은 ‘도로의 턱을 없애달라’거나, ‘기초생활수급비를 현실화해달라’거나,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해달라’거나, 하다못해 ‘노점을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거나, 그도 아니면 제발 ‘빼앗아간 스피커와 배터리라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 요구를 위해 이들은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김순석은 도로의 턱 때문에 건널 수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다고 파출소에 끌려갔다 돌아왔고, 서울시장에게 ‘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편지를 쓴 후 음독자살을 했다. 최정환은 노점 물건을 찾으러

간 구청에서 ‘병신 새끼’라는 말을 듣고는 몸에 불을 붙였다. 이덕인은 1995년 노점을 지키기 위해 망루 투쟁을 하던 중에 “두 손목이 밧줄에 묶인 채” 인천 앞바다에 떠올랐다. 최옥란은 한 달치 기초생활수급비를 들고 복지부 장관 집을 찾아가 “28만 원으로 살아보라.”는 쪽지를 남기고는 며칠 후 음독자살했다. 고병권의 다른 사설을 보면, 최옥란은 늘 음독할 약을 상비하고 다녔고, 어느 시위 장소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내다가 그 약이 함께 나와 당황하며 집어넣었던 장면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연대와 조직을 위해 애썼던 박홍수와 정태수, 우동민은 심장 마비로 죽었고, 박기연은 자신의 휠체어를 달려오는 지하철에 밀어 넣었다. 고병권은 “이들이 어긴 법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었고, 이들을 단속한 이들은公安검사가 아니라 구청 공무원이었다.”라고 한다.

익명의 존재들의 요구는 결국 청자에게 가 닿지 않기 일쑤고, 청자에게 닿지 않은 말들이 제도로 만들어지기로 더욱 어려운 노릇이다. 홍은전은 『그냥 사람』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sup>2</sup>

2005년 12월 경남 함안에서 혼자 사는 근육장애인 조모 씨가 보일러가 터져서 새어 나온 물에 얼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무렵 서울시는 시범운영 중이던 활동보조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 …… 활동 지원제도가 도입되기 전, 중증장애인들은 작은 방안에 유폐된 채 수십 년간 살아왔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지독히도 아까워한다. 서비스 시간을 제한하고 새로운 사람의 진입을 막는다. 그 벽에 가로

막혀 장애인 운동 활동가 김주영과 파주에 살던 박지우 박지훈 남매, 꽃동네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던 송국현이 불이 난 집에서 도망치지 못해 죽었고, 근육장애인 오지석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모두 활동보조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누군가는 아예 신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sup>3</sup>

이처럼 시설에 감금되거나 유폐되기를 거부한 탈시설 장애인들은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죽음과 맞바꾸어야 하는 일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탈시설을 원하는 음성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심지어 목살된다. 한국의 장애인 전국 평균 비율은 5.3% 정도이다. 부산도 5.4%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우리가 지나가다가 100명을 만나면 그중에 5명 정도 장애인을 접할 수 있다는 뜻인데, 정작 우리 일상에서는 그 정도로 장애인을 자주 만나지 않는다. 시설에 감금된 장애인은 결국 우리 주변에 있지만 없는 존재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없는 존재 취급받는 익명의 존재들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 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 등장하면, 무시와 멸시 그리고 억압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장애 시설이란 무시와 멸시 그리고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의 자유와 사회적 관계 그리고 권리를 차단한 사회적 장치다. 여기서 장애인은 처음부터 공적 영역에 등장할 수 없도록 ‘격리’, ‘유폐’, ‘감금’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없는 존재 취급을 받으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일찍이 동아시아에서는 여성을 남성의 성욕 충족을 위한 수단과 상품으로 만들어온 역사가 있다. 심지어 이런 가부장적 공모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한다. 동아시아는 이런 역사가 ‘위안부’ 문제와도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것이 ‘기지촌’ 여성의 인권 문제와 성매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 상품화의 문제로 연장된다. 우리는 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여성의 사례, 집창촌 화재 사건 당시 여성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쇠창살로 가둬둔 건물 구조로 다수의 성매매 여성이 사망한 비극적 사례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 문제를 일부 접한 바는 있지만, 이 역시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주지는 않았다.

1992년 미군인 케네스 마클이 윤금이 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그간 미군이 한국인을 향해 행한 폭력과 오만으로 인해 한국에 반미 음성이 고조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는 반미 정서가 폭발했다.(이 감정은 이후에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전의 양상과 달랐다. 윤금이 씨를 민족의 딸, 누나 등으로 부르며, 미군의 참혹한 살인 행각을 본격적으로 부각했던 것이다. 결국 케네스 마클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문은 일제히 한국 역사상 최초의 무기징역 선고 사례라고 기사를 뽑아냈다.

이에 탈 성매매 활동가인 김연자 씨는 전혀 다른 언급을 한다. 김연자는 한국 사람들이 반미의 기치와 민족 서사로 그 사건을 표면에

드리내고, 투쟁을 진행했으나, 정작 그들의 언어 안에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개선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연자는 그 사건이 민족과 반미의 서사로만 전유되고 독점됨으로써 집창촌(집결지) 여성의 인권 침해 문제는 전혀 가시화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언론은 윤금이 사건을 미군을 상대로 한국이 무기징역 판결을 얻어낸 최초의 사건이라 보도했지만, 정작 최초의 사례는 1970년대 김연자 씨의 투쟁으로 얻어낸 바 있었다. 언론조차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던 존재가 집결지 여성이었다. 민족과 반미라는 거창한 이야기(거대 서사)는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성매매 여성 개인의 인권 침해는 기억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던 것일까.

이쯤 되면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처럼 익명적 존재로 살고 있거나,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의 비극이 충분히 더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에 그들이 겪는 생사여탈의 치명적 상황과 권리 침해 역시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투명인간 취급받는 사람들이 치명적인 생사여탈의 상황에 있다고 언급하는 우리의 추정 속에도 그들의 구체적인 비극과 고통은 없다.

없는 존재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침해 상황을 사람들이 알 리 없으므로, 권리 침해와 박탈의 상황에 처한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는 국민으로 간주되나, 실제로는 국민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국민이지만 국민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들, 국가조차 보호하지 않는 국민, 국가가 모르던 국민의 권리는 과연 누가, 어떻게 지키고 돌려줄 수 있을까? 기존 민주주의의 교육은 왜 이들을 배제하고 누락시킨 채 진행되었을까? 민주시민이란 말에서 ‘시민’은 누구이며, ‘국민’은 무엇일까? 우



리는 그 무의식 속에 모종의 ‘정상성’이라는 무의식적 코드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정상성이라는 무의식적 코드를 성인-비장애-다수 인종-남성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정상성은 반드시 ‘비정상’을 규정하기 마련이다. 미셸 푸코와 같은 학자는 ‘비정상’이라는 차별적 범주에 포함된 존재들을 격리, 감금, 추방, 배제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근대 문명이 구축되었다고 주장한다. 조르조 아감벤이라는 학자는 한발 더 나아가 이런 존재들이 생사여탈의 상황에 놓이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런 존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비정상성을 향한 폭력을 방치한 가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 2. 인민, 시민, 국민의 난맥상들

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 즉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작동하는 정치 체제에서 ‘모든’에 문제가 생기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매년 그 ‘모든’에 문제가 생겼고, 이 ‘모든’을 재정비하면서 민주주의가 자신의 진정성을 갖추어 왔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언급하는 그 ‘모든 사람’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민주주의의 의미를 좀 더 면밀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구성하는 시민과 국민 그리고 인민의 개념,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자.

### 1) 시민의 다중적 의미

개념사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시민은 1)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행정단위로 규정되기도 했고, 2) 부르주아나 소시민과 같이 특정 계급을 지칭하는 계급 담론의 대상이기도 했다. 동시에 시민은 3) 고대와 중세의 귀족 정치에 저항하는 저항자로 규정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항자가 기존의 체제를 뒤집으면(혁명을 성공하면), 자신을 규제할 규칙을 모두 새로 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시민은 입법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서양의 시민 개념이 한국에서 수용될 때, 모종의 굴곡이 있었다. 한국에 수입된 대부분의 서양의 사회과학 개념들은 일본을 통해 들어왔고, 일본은 제국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데 ‘시민’과 같은 개념이 활용되는 것을 지극히 꺼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시민 개념 안에 있는 ‘전복적’이고 ‘저항적’ 성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제국 체제를 운용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일제 치하 조선에서 시민 개념이 제대로 수용되거나 활용될 수 없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시민’ 개념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국민적으로 단결하여 맞서기 위해서는 저항적 의미의 시민 개념을 쓰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운동 당시 조선에서 저항의 주체인 시민 개념이 사용된 흔적을 볼 수는 있지만, 이후 활발히 사용되지는 못했다. 심지어 해방 후 냉전과 기나긴 군부독재가 겹치면서 한국에서는 시민 개념보다는 국민 개념이 각광받았다. 그러나 국가를 우선시 한 국민 개념은 국가에 예속된 민의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

한 개념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국가를 세우고 만드는 민의 자발성과 저항성에 재갈을 물린 국민 개념으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국민 개념에 대항할 수 있던 개념은 시민보다는 민족 개념이었지 싶다. 그러던 것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저항적 주체인 ‘시민’ 개념이 적극적으로 부각되고 사용되었고, 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 개념이 한국에서도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저항적이고 주체적인 ‘시민’ 개념의 의미도 다층적이라는 사실이다. 시민은 1)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인 존재이자, 2) 이런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권자’이고, 3) 주권자 핵심 활동인 ‘입법 행위’를 하는 입법자일 뿐 아니라, 4) 이 입법 행위를 못하게 막았던 이전의 금지와 억압, 나아가 기존의 부당한 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초법적 존재’의 면모를 모두 갖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시민 개념은 프랑스혁명 이후 출현했던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 시민이 아무런 맥락 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시민의 모티브가 되는 다양한 의미들이 시민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스며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체의 개념의 의미 변화를 추적해보자. 시민들은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일상의 관용어들을 생각해 보면, 시민의 의미 안에는 ‘주체성’이 깃들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주체 개념의 의미를 살펴본 후 ‘민주주의’의 어원으로 다루어지는 ‘인민demos’ 개념의 변화를 추적해볼 것이다.

## 2) 주체의 이중성과 시민

주체는 흔히 서브+젝트(sub+ject)의 결합어로, 아래에 있는 존재를 뜻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자면, 종속된 사람 또는 예속된 사람, 아니면 신민(臣民)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삶의 주체가 되어라’는 말은 흔히 ‘삶의 주인이 돼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주체는 종속이나 예속과 어울리지 않는, 심지어 정반대인 주인과 주연의 의미로 흔히 이해된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는 나아가 ‘저항의 주체’라는 말과도 연결된다. 이런 주체는 앞서 살펴본 시민의 의미와 결합할 수 있다. 이렇듯 주체 안에는 종속이나 예속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규정하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sup>4</sup>

그렇다면 주인 같은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는 다른 사람을 우리는 주체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주체적인 행위를 따라 하겠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 것이라면, 그것 역시 일종의 ‘자기 정립’ 행위이자, ‘자기 규정’ 행위일 테니, 그 역시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유행의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이가 다른 사람보다 유행을 빠르게 ‘따라’ 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를 주체적이라 할 수 있을까? 빠르게 유행을 수용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따라 하는 행위’에 주체라는 말을 붙이긴 쉽지 않다. 오히려 진정한 유행의 주체는 유행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고 선도하는 존재 아닐까. 그래서 진짜 주체는 주체 같아 보이는 행위를 ‘따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주인 됨을 스스로 ‘창조’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를 ‘정당화’하여, 자기 자존감을 갖는 존재다. 주체 개

념에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주체적인 시민(주권자로서 시민)이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주체는 다른 주체의 생각과 행동을 그저 ‘따라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체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주인이 되겠지 하는 성찰 없는 추측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칸트에 의하면 주체는 자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와 생각을 (한계에 이르기까지) ‘극한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존재다. 그리고 그 극한의 지점에서 자신만의 기준과 규칙을 세우는 존재가 주체다. 이것이 칸트의 자기 입법자로서의 주체 개념과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주체는 기존의 그저 그런 규칙을 성찰 없이 좇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만들고, 이전의 자신을 쇄신하고 창조하는 주체는 그런 점에서 이전의 것과 결별하는 저항자이다. 푸코가 칸트를 계승하면서 극한의 성찰이 아닌 ‘거부’와 ‘저항’을 주체 개념으로 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체는 ‘예속’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어찌 설명해야 할까? 신민의 굴레를 벗은 주체는 이제 자기가 ‘세운’ 법에 스스로 ‘종속’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다. 이것이 칸트적 의미의 입법자이자 종속자라는 주체의 이중성이다. 이는 ‘자율성’의 이중성도 된다. 스스로 자신에게 규칙을 부과하는 자율성은 기존 규칙을 거부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규칙의 창조자이자, 새로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려는 순응자이다. 여기서 주체는 ‘저항자’로서 ‘주권자’이자, 자신이 세운 법에 스스로 ‘종속’되는 ‘예속인’이 된다. 주체는 이 순환 속에서 살아간다(생명을 얻는다.).

이런 주체는 자신을 둘러싼 맥락과 환경에 단순히 적응하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다. 칸트의 주체에게 맥락 초월적 지위(선형적 주체)가 부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칸트의 주체는 스스로 세운 기존 법을 새로운 법을 세우기 위해 파기할 줄도 안다. 기존 법을 파기할 줄 아는 초법적 주체가 푸코의 ‘저항적 주체’와 연결된다. 그런 주체는 초법적 성격을 가지며,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칸트의 정언 명제 중 목적 왕국의 입법적 구성원에 대한 언급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목적의 왕국은 모든 자율적인 주체들이 서로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나라다.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을 스스로 고안(입법)할 줄 아는 시민들의 나라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체의 이중성과 동시에 주체가 법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존재라는 점이다. 이제 주체는 시민과 결합할 수 있는 연계점을 갖게 되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주체적 시민을 우리는 ‘주권자’라 부르게 될 것이다.

### 3) 데모스(사람 또는 인민demos)의 이중성과 그 바깥

주체라는 말보다는 좀 더 민주주의의 어원에 가까운 개념으로 가보자. 민주주의는 어원상 사람demos이 지배kratos하는 정치체제를 뜻한다. 일단 지배 개념은 나중에 살펴보고, 우선 사람을 의미하는 데모스demos의 의미 변화부터 살펴보자. 신철희(2013)<sup>5</sup>는 그리스라는 배경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따라가며, 데모스의 의미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을 의미하는 데모스demos는 특정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데메deme를 어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아티카Attica 지방의 데

메deme를 데모스demos로 불렀는데, 이는 데메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데모스는 처음에 ‘(행정) 구역’, ‘시골’, ‘토지’를 가리키다가, 이후 그곳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을 일컫는 ‘평민’이라는 의미로 정착되었고, 이후 민주정이 본격화되면서 시민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미 변화 과정에서 갈등의 여지가 보인다는 점이다. 귀족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보다 천한 사람들을 부르려고 데모스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때 데모스는 평민이라는 뜻이었다. 반면, 평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데모스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때 데모스는 귀족과 평등한 지위를 갖는 '전체 시민'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데모스라는 말은 이미 그리스에서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과 투쟁의 흔적을 새겨두었던 것이다.<sup>6</sup>

처음부터 갈등의 여지를 새겨두었던 이 말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후 역사가 흐르면서 데모스로 간주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데모스의 범위 안으로 난입하면서, 데모스는 자신의 외연을 넓혀갔기 때문이다. 차티스트 운동 같은 개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데모스의 바깥에 놓여 있던 노동자와 무산자(가난한 자)들은 데모스의 내부로 침입해 들어왔다. 여성 역시 데모스의 바깥에 놓여 있다가 데모스의 안으로 침입했다. 유색인종의 역사도, 이주민의 역사도 그랬고, 그럴 것이다. 앞서 장애인의 사례 역시 그렇다. 최근 연령 문제와 이에 따른 정치참여 및 선거권 문제도 데모스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주요 이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신의 외연을 확장했던 갈등의 정치로 규정할 수도

있겠다. 매번 새로운 데모스의 등장과 이들의 침입으로 새로운 갈등을 소화해내면서 자신을 재정립해갔던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스스로 통치하는 데모스의 외연은 충분히 확장되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데모스의 바깥으로 밀려난 데모스 ‘아닌 존재들’이 남아 있는 것일까?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떠오른다. 도대체 데모스의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내가 만일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나는 나에게 ‘데모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까? 그럴 여지나 권한이라도 있을까? 사실 기존의 ‘아니던 존재들’, 즉 역사 속에서 데모스로 취급되지 못하던 존재들인 노동자, 가난한 자, 여성, 노예, 유색인종, 장애인, 젊은 사람들도 저 난민과 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저들은 도대체 누가 데모스의 자격을 부여했던 것일까? 아니면 부여해주지 않던 자격을 스스로 되찾아온 것일까?

이 글을 통해 제일 먼저 민주시민교육론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그들이 바로 이 ‘아닌 존재들’이라고 생각한다. 이 ‘아닌 존재들’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민주주의를 발명한 그리스 민주주의도 정작 민주주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소수의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귀족정(과두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스 민주주의를 비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는 저 아닌 존재들을 존재의 자리로 모시는 ‘환대’의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환대의 민주주의는 ‘아직 아닌’ 존재를 모신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현재 작동하거나, 지금 여기서 존재하는 자로 간



주되지 않은 잠재적 존재를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모신다는 점에서 일종의 잠재성과 가능성의 정치로 생각할 수 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존재들의 정치로서 말이다. 노동자, 가난한 자, 여성, 노예, 유색인종, 장애인, 젊은 사람들과 같이 역사 속에서 ‘아닌 존재들’, 즉 ‘추방되거나 배제된 존재들’이 ‘데모스’로 인정받는 과정을 민주주의 역사로 설명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추방되고 배제된 존재들의 귀환을 통해 민주주의가 자신의 외연을 넓혀왔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실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번 새로운 보편성을 만들어왔다. 한 사회에서 자기 자리가 없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되찾는 역사였다.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리 자리를 갖게 되는 역사였다. 여기에 사람이 있고 주체가 있으며, 시민이 있다. 주권도 이런 자리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을 추방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 4) 주권 개념의 이중성

주체적인 시민이 곧 ‘입법자’이자, 스스로 세운 법을 지키는 ‘준법자’(법에 예속된 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법과 권력을 발명하는 ‘초법자’라는 것은 주권자의 이중성을 암시한다. 즉 법 안/밖에 주권자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권자는 주체의 이중성(예속된 자와 주인)과도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데, 주권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이면서, 그 결정에 스스로 예속되는 자라는 점에서 그렇다.

주권자의 이중성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해보자. 칼 슈미트는 『정치신학』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한다.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sup>7</sup>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결정’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예외상태’라는 단어다. 결정은 특정 사회가 그 사회의 중요한 공적 가치나 공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분배와 규제에 대해서 ‘공공연히’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적인 것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공적인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결정과 판단이 민주적이면서 공정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이 공적 결정을 어느 누가 독점하게 되면, 그 정치는 독재의 길을 걷게 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결정의 범위인데, 공적인 결정이 사실 사적인 것에서 출현한다는 언급을 생각한다면, ‘결정’이 반드시 제도 정치 영역에 제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수많은 결정들 중에 ‘공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결정권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이 공적 잠재력이 제도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수용되면, 이 일상의 결정은 제도적 결정을 요구하는 ‘공적 장’으로 떠올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권적 결정’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제도권 정치로 생각하지 말고 일상의 영역에서 출발하여 제도의 영역을 아우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생활정치나 풀뿌리 민주주의도 바로 이런 생각에서 등장한 것 아니던가.

이어서 이런 결정이 ‘공적’ 파괴력을 가지는 것은 그러한 결정이 폭력을 중단시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의 영역과 사회의 영

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다른 존재와 관계하면서 인간이 행사하는 여러 가지 영향력과 행위가 다른 존재에게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규범으로서 도덕과 인간 행위에 대한 강제적 구속력을 가진 법은 그런 점에서 폭력을 저지하는 장치가 된다. 특히 법은 사적인 폭력으로 인간의 세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폭력을 독점하는 장치이다. 이런 점에서 법은 다양한 야만적 폭력에서 인간을 보호하려는 장치이고, 주권은 일상적 결정과 제도적 결정을 통해 규범과 법을 만들고,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사회 구성원의 핵심 권리라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설명은 ‘예외상태’인데, 예외상태란 그 사회의 범위 또는 그 사회의 영향력이 미치는 법적 제도적 환경의 바깥을 의미한다. 더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바깥의 영역 그리고 기존 법의 적용을 ‘중단’한 영역을 의미한다. 법의 바깥이든, 법 적용의 중지로 생긴 빈 공간이든, 이곳은 권리가 박탈된 무법 또는 초법의 영역이다. 슈미트는 독재가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이곳을 설명했고, 슈미트에 반대하던 벤야민은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영역을 상정했다. 독재자는 법을 초월해서 자의적으로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혁명가는 압제자를 보호하던 기존의 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견해와 힘을 관철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예외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라는 것은 한편으로 독재자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가의 등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주권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여기서 주권의 이중성은 초법적 영역에 가장 극단적인 압제자와 피압제자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적 압제자가 존재하는 독재적 예외상태든, 극단적 피압제자가 기존 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들고 등장하는 혁명적 예외상태든 이 모두는 법을 넘어선 무법 상태를 지시한다. 독재든 혁명이든 이 모두는 초법적이며, 탈법적(또는 무법적) 상태에서 작동한다. 독재자나 혁명가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법 바깥의 예외상태를 만들어 내지만, 이와 달리 자기 의도와 달리 예외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정말로 생사여탈의 치명적 폭력에 노출된다. 그래서 예외상태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명령과 폭력이 자행되며, 동시에 그 명령과 폭력을 통해 법적 제한 없이 특정한 인간 생명이 경각에 놓인다. 가장 강력한 가해자와 가장 치명적 피해자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예외상태의 영역이다.

감옥과 다른 수용소가 그런 예외상태를 대표하는 장소며, 난민은 그런 예외상태에 빠진 대표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감옥은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되지만, 수용소는 그런 법 자체의 적용을 할 수 없는 무법지대다. 단적인 예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그에게 전 세계 많은 기자들이 쿠바에 있는 미군기지의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어찌할 것인지를 물었던 적이 있다. 이는 관타나모 기지 내 포로수용소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결국 기자들은 인권침해 지역으로서 관타나모 수용소의 잔혹한 폭력을 오바마가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던 셈이다.<sup>8</sup> 최근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생사여탈의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의 상태를 ‘난민화’라 부르기도 한다.

혁명이 역사에서 드물게 일어났었다는 상황을 미루어본다면, 대

부분의 예외상태는 취약한 존재에게 치명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과 주로 연결된다. 우리가 이 글 맨 앞에서 들었던 다양한 비극적 사례 역시 예외상태와 관련이 있다. 예외상태는 1) 법 바깥의 초법적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2) 있던 법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래서 3) 준법과 탈법을 구분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아감벤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법의 위반과 법의 집행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규칙에 부합되는 것과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전적으로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sup>9</sup>

법 외부에 존재하던 사람이 법 내부로 귀환하는 상황을 민주주의의 역사와 결부시키면, 초법적 예외상태(생사여탈의 박탈 상태)에서 다시 법 내부로 귀환하는 존재들을 상상할 수 있다. 소위 억압받던 취약한 존재의 귀환(혁명)이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이 아닌 존재’로 배제되었던 ‘비존재’(비국민 또는 비시민)가 이 과정을 통해 ‘~인 존재’로 자신의 자리(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민주주의에 포함된 인민(demos)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있다. 민이 주인(주체이자 주권자)이 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는 곧 주권자인 모든 민들의 지배가 된다. 주권의 이중성 때문에 이 주권자들은 입법-준법-초법(법 외부)의 순환성 속에서 법 내부자(준법자이자 법 내부의 입법자)이면서 법 외부자(초법적 입법자)를 오갈 수 있다. 이 역동적 순환성이 기존 정치를 갱신하는 주권자의 저력이자, 주권자의 이중성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이런 주권자의 역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3.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굴곡

민주주의는 서양의 수입품이다. 저 멀리 그리스에서 발명되어 전 세계로 퍼진 통치 방식 중 하나다. 그렇다고 그리스의 바깥에 민주적 통치 방식이나 전통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sup>10</sup> 이는 각 지역마다 나름의 민주적 방식, 즉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다양한 정치적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그리스 사람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스 ‘민족’이자, ‘비장애’, ‘성인’,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었기에, 지금의 관점에서 그리스 민주주의는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자들의 통치(과두정: aristocracy)에 불과했다. 비록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보다 더 많은 다양성과 참여를 허용한 통치의 사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독특한 민주적 통치방식과 전통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장소성과 결부된다.

한국만 해도 동학의 전통(한국의 공공성으로 언급되는 포접제와 천즉인 인즉천 개념 등), 정조의 ‘사중지공私中之公’ 또는 ‘사중유공私中有公’과 같은 개념, 진주의 형평운동, 3.1 운동과 조소앙의 삼균주의 등의 민주적 전통이 그런 민주적 전통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장소성과 결부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연속성을 상상하려는 사람은 이것을 민주화운동이나 최근의 촛불 민주주의의 성과와 연결 지으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 및 민주

시민교육론의 소개나 적용은 서양 것을 그대로 이식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심지어 서양 것을 그대로 수입해서 이식하고 접붙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고, 우리도 서구처럼 좀 더 문명화(근대화)되어,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아시아에서 이런 식의 서구 중심주의는 일종의 집단 콤플렉스처럼 작동하기도 했다. 서양의 것이 좀 더 고도의 문명이니, 이것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식하면, 우리의 수준도 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빈곤한 상상력이 그것이다. 이에 비례하여 나름의 고유한 전통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던 경솔함이 그 콤플렉스의 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콤플렉스는 지역 민주주의의 실패를 서양의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적용한 수입상의 문제로 판단하거나, 아직은 서양식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토양이나 환경이 척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솔함으로 이어졌다.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민주주의론과 민주시민교육론이 서양에서 수입한 상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좋은 전통을 잘 수입하여 지역의 입맛에 맞게 제대로 가공하면, 그 역시 지역의 전통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나 동아시아 시민성의 역사에서 그런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의 사례만 하더라도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서 겨루는 사이 민주주의 개념이 수입되었고, 이 민주주의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냉전의 갈등 상황이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울러 개발논리를 앞세운 군부독재의 장기 집권과 지구 자본주의의 질주가 지역 민주주의의 정착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기도 했다. 근대화로 돌입

해야 한다는 집단 강박으로 인해, 서양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존재했던 기존 한국 민주주의의 전통은 전근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청산되거나 폐기되었다.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 동아시아 각국에서도 펼쳐졌다.

사람을 일컫는 말만 봐도 그렇다. 한국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던 다양한 말들이 있었다. 서민庶民, 여민黎民, 억조億兆, 중서衆庶, 만민萬民, 창생蒼生, 방민邦民, 민인民人, 중민衆民, 신민臣民, 백성百姓 등이 그것이다. 근대 초기 일본을 통해 서구 개념들이 번역과 수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식민/제국주의와 냉전 체제를 거치면서, 이후 영어권의 강력한 중력에 흡수되면서 이런 말들이 모조리 소멸되었던 것이다.<sup>11</sup> 한국에서 제출된 민주시민교육론은 정작 이런 문제를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다. 이런 역사적 굴절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이든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이든 제대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

한국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언어의 ‘근본적인 굴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한국은 전통적으로 1) 유교문화권에서 사용하던 보편 언어인 한자문화권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2) 제국의 언어로 변주된 보편 언어인 식민지 언어(일본어)에 강제 편입돼야 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어의 바탕에 해당하는 한자문화권의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이후 3)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영어를 통해 라틴어-헬라 보편 언어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한자-일본어-라틴·헬라어 전통이라는 삼중 굴절이 한국어 사용의 복잡한 배경을 이루었다. 여기서 민족어인 국어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이 등



장했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것도 그 때문이다.<sup>12</sup> 앞서 보았듯이 이 굴절 과정에서 제 명을 다한 기존 개념들은 소멸되어야 했다. 이런 상황도 동아시아에서 비슷하게 전개되었다.<sup>13</sup>

민주주의에서 ‘민’을 의미하는 개념을 수입해서 번역할 때 생긴 언어의 굴절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자면, ‘민’을 지칭하던 전통적 언어는 소멸되었고, 새로 수입된 말들은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었다. 우선 영어의 네이션nation을 번역했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일본은 네이션을 ‘국민’으로 번역했는데, 한국은 처음에 이 말을 그대로 가져와 썼다. 국민은 군주국이었던 대한제국의 맥락에서도 쉽게 수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제 강점기 일본에 대한 저항과 결합하여 ‘민족’으로 번역된 적도 있다.

네이션이 민족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피플people이 국민으로 번역되는 여파도 생겼다. 피플이 국민이 되는 과정은 냉전 질서, 그리고 남한의 권위주의적 질서와도 관련이 있다. 북한에서 피플을 인민으로 사용하면서 남한에서는 북한을 암시하는 이 개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군사독재와 개발독재 치하에서 시민의 자율성을 국가와 국가의 법 아래에 단단히 묶어두고 구속시키려던 의도가 ‘국민’이라는 번역어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런 굴곡이 국민이라는 말에 네이션nation과 피플people을 포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동시에 ‘국민’이라는 말이 갖는 예측적인 특성은 냉전의 지속으로 인해 성찰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적이고 저항적인 주권자를 의미하는 ‘시민’(시티즌citizen)이라는 말은 사용될 리 만무했다. 제국주의, 냉전, 군사 독재 및 개발 독재라는 중층적 억압 아래에

서 시민이라는 말은 잔뜩 웅크리고 숨죽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념의 문제는 한국 민주시민교육을 어렵게 한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다.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이나 물으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대답을 종종 듣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의 의미와 ‘주’의 의미를 다시 물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반사적으로 대답한 말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한다. ‘민’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정치는 독재나 과두제 같은 것임을 그때서야 감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념이 머리가 아닌 몸을 파고들었고, 논리가 아닌 일상적 습관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한국에 뿌리내리기란 쉽지 않았음도 짐작할 수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은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이라는 곳인데, 나락한알이 어느 기관의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심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사업을 공모한 구청의 과장이 나락한알이라는 단체가 ‘민주’라는 단어를 달고 있는 걸 보니, 이 단체 ‘좌파’ 아니냐고 심사장에게 묻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던 무의식적 습관은 여기서 완전히 역전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인데,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좌파라는 아이러니가 한국사회에 너무 오래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아이러니는 모두 냉전과 관련이 있고, 한국의 군부독재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장소성은 이렇게 한국만의 장소성에 더하여, 분단과 냉전이라는 국제적 상황, 아시아 식민/제국주의라는 아시아적 상황, 그리고 최근의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경제의 상황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것이 민들의 주권적 지배를 기초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한국에 적용할 때, 그 시초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 민주시민교육은 주체이자 객체인 ‘민’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지부터 어려움에 빠진다. 이 같은 언어의 난맥상에 더하여 이데올로기 갈등과 거기서 기인한 권위주의적 독재의 잔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막았고,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시행하기 어렵게 한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지역적 상황, 아시아적 상황, 지구적 상황이 복잡하게 얹힌다. 주권 개념의 이중성도 문제다. 사람들이 행사하는 결정권인 ‘주권’을 민과 결합시키면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는 더 어렵고 모호해진다. 주권 개념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권 개념이 누구를 주체로 설정하느냐의 문제에서도 그 개념의 이중성 때문에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 4. 취약한 사람들의 주권과 장소의 민주주의

앞서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시민은 특정 행정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부르주아와 같은 계급, 또는 지배자에게 저항하는 저항자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최근에도 시민이라는 개념을 이처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에서 사용하는 시민의 의미는 억압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라는 의미가 우선이다. 예컨대 ‘시민 불복종 운동’과 같은 개념에도 주체적 저항이라는 의미가 시민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시민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인 주권자이자, 그런 주권자들의 평등한 공존의 환경, 즉 정의로운 연대의 장소를 창조하는 자이다. 이러한 상호 책임과 연대의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자의 대표적 행동이 바로 입법 행위다. 이 입법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므로, 기존의 법을 초월하여 결정하는 ‘초법적 존재’이기도 하다. 칸트는 이런 시민을 ‘자율적인 주체’, ‘입법적 주체’로 간주했고, 근대적 주체의 모범으로 삼았다. 이런 주체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공존하는 곳이 그에게 ‘목적의 왕국’이었다.

민주주의의 역사도 그랬다. 기존 법을 엄밀히 반성하지 않고, 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칸트는 ‘주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기존 환경에 안주하기를 ‘과감히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관철시킬 줄 아는 사람에게 ‘주체’의 자격(자율적 주체)과 ‘시민’의 자격(목적 왕국의 시민)을 부여했던 것이다.<sup>14</sup> 입법자가 자신이 만든 법을 충실히 지키려는 준법성과 더불어, 잘못된 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기존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법성은 주체가 진정한 주체가 되고 시민이 진정한 시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중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 역시 이를 증명한다.

‘민demos’이라는 말 자체가 귀족 ‘아닌 사람’을 배제하던 힘과 대결하면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민주주의는 ‘~아니던 사람’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데모스로 간주되지 않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데모스의 영토 안으로 난입하던 과정, 즉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우하면서 데모스의 통치체제인 민주주의는 자신의 역사를 써

나갔던 것이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데모스라는 말은 저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자신의 외연을 넓혀갔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데모스의 외연이라는 것이 공동체 내부에서 배제된 사람(평민)만이 아니라, 공동체 바깥으로 추방된 존재까지 염두에 둔다는 사실이다. 그리스의 데모스 개념 안에 포함된 갈등의 사례를 떠올려 보자. 앞서 언급된 데모스를 둘러싼 투쟁은 그나마 그리스에서 사람의 범주 ‘안’에 들던 사람들 간의 우/열 갈등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하지만, 실제 민주주의의 역사는 귀족과 평민의 테두리 바깥으로 아예 멀리 밀려났던 사람들, 여성, 아이, 장애인, 가난한 사람, 타민족이나 인종 등이 자기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자.

독일이 100만 명의 난민을 받기로 결정했을 당시 경향신문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주자네 베어와 서면 인터뷰를 기사로 실은 바 있다. 헌법은 법의 정신이자 근간인데, 이 헌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조계 인사여야만 할까. 실제로 독일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법의 정신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에 법조계 인사만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주자네 베어는 법 전문가이자 성소수자로서 성 다양성 문제를 헌법과 연관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자네 베어는 헌법 재판소의 초법적 주권의 영역에 이주민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한다. 베어의 말을 잠시 들어보자.

“독일에서 성별 다양성은 이미 구현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

긴 했지만 이렇게 임계의 수준critical mass에 도달해야만 틀에 박힌 기존 사고를 깨고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여성이라고 다 똑같은 처지가 아니고 그것은 남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외관의 다양성이란) 단계를 거치면 재판소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현재에 터키나 아랍 이민자 출신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터키나 아랍 이민자는 독일 사회에서 드문 집단이 아닙니다(독일 인구의 20%가 이민자와 외국인이다). 이탈리아 출신 재판관은 이미 나왔습니다.”<sup>15</sup>

우리는 여기서 민을 ‘주권’이라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찾게 된다. 즉 시민이든, 주체든, 인민이든 민주주의에서는 ‘모든’의 범주에 들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없는 존재 취급을 받던 사람, 주권의 영역 바깥(예외상태)에 처해 있던 취약한 사람을 권리의 영역 안으로 모시는 것(환대)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성찰성이 발휘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깥의 상황이 생사여탈의 상황, 부정에 의한 폭력이 난무하거나 방치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반대로 이런 상황을 연출하거나 방치한 그들만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게 된다.

최근 팬데믹 사태를 생각해보면, 감염과 전염의 위험은 장애와 국적을 불문한 보편적인 위험이지만, 정작 해당 국가 내에서 배제된 존재를 방역에서마저 배제하게 되면, 감염과 전염이라는 위험은 내국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치명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감염이라는 보편적인 위험도

막을 수 없을뿐더러, 배제된 ‘바로 그’ 존재가 겪는 위험은 배제되지 않은 존재에 비해 훨씬 더 치명적이게 된다. 외국인을 생사여탈의 상황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일까. 실제로 이번 팬데믹 사태로 장애인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우리가 단순히 상식 차원에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차원 이상이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그렇다.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겪는 인종혐오 역시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실패를 드러내는 단적 사례라 할 수 있다.<sup>16</sup>

우리가 배제된 존재를 중심에 놓고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좀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이른다. 우리는 특정 지역의 민주주의 위기를 성찰하기 위해 그 지역에 독특한 배제가 등장했던 사회적 맥락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 교육은 철저히 장소성에 입각해야 한다. 그 시대 그 장소에는 거기만의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배제된 존재들의 권리를 되찾아주지 않으면, 배제된 존재들은 생사여탈의 상황이라는 치명적인 상황에 그대로 방치되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타인이 입을 수 있는 상처vulnerability에 민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 몸을 가진 모든 인간은 늙고, 상처받으며,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민주시민교육이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가 ‘생명’을 정치의 대상으로 삼으며 출발했다는 ‘생명정치’의 논의(푸코, 아감벤)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장소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서양의 민주주의나 민주시민 교육론을 그대로 수입하여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천편일률로 처방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동시에 몸과 감성을 배제한 채, 민주주의에 관한 단순한 지적 정보와 지식 전달, 그리고 그에 입각한 실천을 강제하는 수준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도 알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의 몸과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장소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장소성과, 그 장소에서 기록(기록)되지 못했던 취약한 존재들의 역사(시간)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성과 시간성이 동아시아에는 어떻게 펼쳐지고, 그 동아시아가 부산에 어떻게 침윤되어 있는지를 다루는 일은 국가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이 연구서의 의도처럼 새로운 민주시민교육론을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하다.

특정 지역의 취약한 존재들이 겪는 폭력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장소와 시간의 교점에서 다양한 힘들의 길항 관계를 새겨둔 중층적 모순의 결절점이다. 이 연구가 ‘부산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의 범위를 ‘부산’에만 국한시킬 수 없는 이유다. 부산이라는 장소에 살고 있는 취약한 사람들은 지방 사람이라는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폭력과 분단으로 인한 폭력, 나아가 (동)아시아의 폭력을 넘어 지구적 폭력과 상처를 모두 새겨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될 부산의 민주시민교육



은 취약한 존재들의 치유를 위하여 다른 지역을 향하여 그리고 국가를 향하여, 나아가 아시아와 지구 전반을 향하여 치유와 연대의 음성을 보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부산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부산‘만’을 가르치는 특수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비전은 지방 소멸의 시대를 낳은 수도권 중심의 권위적 풍토와 국가적 폭력의 모순, 아시아에 남아 있는 모순과 폭력의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시아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생산한 최종의 지구적 폭력의 구조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뇌관이 되어야 한다. 이후에 이어질 내용들은 그 뇌관들 중 하나이며, 후속될 연구들 역시 그 뇌관이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취약한 존재들이 제기하는 미약하지만 임계를 초래하는 민주적 잠재력(임계적 공공성)이다.

1. 정창조, 강혜민, 최예륜, 홍은전, 김윤영 저 외 3명, 『유언을 만난 세계 장애해방열사: 죽어서도 여기 머무는 자』, 오월의봄, 2021.
2.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2100300005> 고병권의 목록, 〈죽은 사람들의 죽지 않은 말〉, 경향신문, 2021.12.10 03:00
3. 홍은전, 『그냥, 사람』, 봄날의 책, 2020, 61-62쪽.
4. 에티엔 발리바르나 주디스 버틀러 등의 사상가들이 서로 다른 이론적 맥락에서 이 이중성에 접근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주체 개념의 이중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5. 신철희, 『민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2013을 참고.
6. 신철희, 위의 논문 205쪽 참고.
7. 칼 슈미트(김항 역), 『정치신학』, 그린비, 2010, 16쪽.
8. 관타나모 포로 수용소에 관해서는 마이클 윈터바텀 감독의 〈관타나모로 가는 길〉(2006)을 보라.
9. 조르조 아감벤(박진우 역), 『호모사케르: 주권과 불가침은 생명』, 새물결, 2008, 134쪽.
10. 이에 대한 언급은 아마르티아 센(이상환, 김지현 역), 『정체성과 폭력: 운명이라는 환영』, 바이북스, 2009, 103-103쪽, 140쪽, 263-268쪽 등을 참고.
11. 이에 대해서는 윤희동, 『정치 주체 개념의 분리와 통합: 박명규, 박찬송의 개념사연구』, 『개념과 소통』 제6호, 한림과학원, 2010, 88-91쪽 참고.
12. 각 문화권의 보편화에 관해서는 송호근,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11, 132-141쪽 참고.
13. 이런 사례를 보려면, 베트남의 사례를 드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이자, 유교 문화권이던 베트남이 근대에 들어 문자 표기법을 서양의 알파벳으로 바꾸었던 격변을 생각하자.
14. 칸트는 계몽의 정신을 스페레 아우데(spere aude: 과감히 알라)로 요약한다. 무제한적 지성의 추구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말을 안토니오 네그리는 '과감할 줄 알라'로 번역하면서 지성의 추구와 달리 초월성, 일종의 자기 극복의 의지를 중심에 둔다. 이와 유사하게 푸코는 칸트의 계몽주의를 '거부'할 줄 아는 비판성에 둔다. 만일 우리가 네그리나 푸코처럼 칸트 해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칸트를 단순히 앞에 대한 과감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기를 확장해나가는 과감한 '의지'의 발현으로 충분히 독해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칸트에 대해서는 임마누엘 칸트(이한구 편역), 『칸트의 역사철학』, 서광사, 2005, 21쪽 참고. 네그리에 대해서는 안토니오 네그리(정남영 외 역), 『공동체』, 사월의 책, 2014, 47쪽을 참고. 푸코에 대해서는 미셸 푸코(심세광 외 역),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 수양』, 동녘, 2016, 44-52쪽을 참고.
1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12190600035> 이 기사에서 critical mass라는 말은 결정적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해도 문제가 없지만, 원래 크리티컬이라는 말은 임계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는 이 연구서와 연관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인용자가 번역어를 수정하였다.
16. 최근 이와 관련한 차별 문제를 자세히 언급하는 책이 출간되었다. 캐시 박 홍(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 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 마티, 2021을 참고.

# II

---

## 부산의 장소성과 장소기반 시민교육

•

김성민

민주주의는 장소성이라는 말이 있다.<sup>1</sup>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 말인 듯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시민교육론은 ‘지역 밀착형’ 교육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지역 밀착형’이라는 말은 한 편으로는 ‘마을 만들기’ 운동과의 연계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다른 한 편으로 이 지역이 ‘부산’이라는 지역 전체를 의미할 수도, 아니면, 시민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생활권역 또는 행동 권역에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다. 이 장의 제목이 말하듯, 민주시민교육이 장소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 교육이 지역밀착형 역량 강화교육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 1. 장소-장소성의 개념

문학, 철학, 인류학, 지리학, 사회학, 정치학, 지역 연구, 도시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공간과 장소를 이항대립적으로 간주하며 후자에 지지를 보내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다수다.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영역의 추상적 개념<sup>2</sup>으로 이해하고, 장소는 객관적 지표(어딘가에 실제로 위치)와 맥락(즉, 인간의 경험과 시간, 문화와 가치관 등)이 결합되어 생성된 실체적 및 구체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또한, 공간을 용적물이나 이익/이윤을 측정하여 수치화한 수학적 및 경제적 합리성의 (공학 또는 산업 입지론 등) 비인간적인 곳으로 규정, 그와 반대로 장소를 (사람과 존재의 가치를 내세우며) 인간적/인본주의적인 곳으로 규정(이푸투안, 2020)하는 게 대부분의 경향이다.<sup>3</sup> 그 외에, 공간은

보편, 장소는 특수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장소는 그 성격, 의미, 특성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화되고 (재)구조되며 (재)구성된다고 파악한다. 변화와 재구성의 원인은 사회적인 것일 수도, 권력 또는 이데올로기일 수도, 개인-집단들의 행위와 실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장소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변화의 결과물만이 아닌, 특정 규범과 권력 등을 재구성하는 원천적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권력, 이데올로기, 종교 등에 의해 장소가 재구성되는 많은 사례들도 존재하는데, 첫 번째, 폴란드의 나치 강제수용소의 사례가 있다. 소련의 영향 하에, 나치 강제수용소는 (독일) 서유럽 파시스트의 호전성을 강조하는 장소로 둔갑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참상은 가려어진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폴란드 출신의 요한 바오로 교황에 의해 나치 강제수용소가 가톨릭적 화해와 용서의 장소로 전유되면서 역시 유대인들의 참상은 은폐된다. 둘째, 샌프란시스코의 엔젤섬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19세기 후반 이래 20세기 초중반까지, 샌프란시스코를 통해 들어온 중국인 이주자들을 검문검색, 추방, 강제 수용하던 곳이 바로 엔젤섬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미국 정부는 이곳(엔젤섬 및 샌프란시스코 전체)을 청나라 및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서 탈출한 중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미국을 연상케 하는 곳으로 장소성을 탈바꿈시켰다.<sup>4</sup>

이처럼 장소는 물리적-건축공학적-추상적 공간이 아닌 인간의 경험과 시간, 문화와 가치관 등이 담긴 실재적-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자, 인간 삶의 터전이다. 물론 자연·지리, 역사, 문화, 경제,

정치, 제도, 환경 등의 요인들이 모여 장소를 구성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리학자 에드워드 켈프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sup>5</sup>

장소는 생활세계이자, 인간 실존의 근본적 토대다. 그런 점에서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 산다는 것이다.换言之하면, 인간답다는 말은 곧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공간과 달리 장소는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므로,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경험하는 맥락(특정 주제나 이슈)과 상황(배경적 조건과 구조)에 따라 장소 경험의 특성이 달라진다. 실존적 인간들에게 특정 장소에 머무는 거주가 중요하다. 거주는 인간과 세계가 관계 맺는 기본적 활동이다. 자신이 뿌리를 내릴 장소를 갖는 것이고, 그곳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중심을 갖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생각해볼 때, 우리는 왜 장소를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인간이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또한 현존하는 장소를 유지 관리하고, 새로운 장소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장소 개념은 장소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실존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했다. 예컨대 장소의 공유성을 강조(지역 지리적 접근)하거나, 장소의 보편성과 일반성을 강조(계량적, 계통적 지리학)했던 것이다. 반면, 현상학적 장소 개념은 그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장소와 주체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장소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로써 장소의 정체성, 장소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장소성은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 독립된 실체성, 다양성, 물질성+비물질성+상호 관계성의 산물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가 장소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민주적 주권성이다. 그렇다면 다시 민주주의는 장소성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장소-장소성 개념과 이론의 약점 혹은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취약성'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장소성 관련 이론은 빈민, 장애인, 이주민, 유색인종 등 추방되고, 차별받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한 이들의 입장을 다루지 않기에 취약한 이들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폭력성을 은폐하게 된다. 그렇기에, 취약한 이들의 입장에서 장소성 개념과 이론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이렇듯 취약한 이들을 중심에 놓고 장소성, 민주주의 혹은 민주시민교육을 생각할 때, 어떤 지역 및 도시의 배제와 차별 등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장소성은 취약한 이들을 중심으로 고찰되어야 하고, 민주시민교육 역시 취약한 이들 중심의 지역성 혹은 장소성에 입각해야 한다. '아닌 존재들', 추방되고 배제된 자들, 부재 처리된 이들, 예외상태의 사람들, 무능하고 취약한 존재들, 취약성, 몸-상처 관련 자세한 개념과 내용은 앞의 I 장을 참고할 수 있다.

## 2. 장소기반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기존 사례

장소기반교육의 개념, 내용, 방법론은 서구(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sup>6</sup> 적절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이를 민주시민교육으로 변형 및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소기반교육은 기존 교과 중심, 학문 중심, 토론 중심, 이성 중심, 지식 습득 중심의 교육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다. 즉 인간의 삶 및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을 주창. 문화, 경제, 정치, 생태/환경 등 장소를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과 학습자를 연결하는 교육이 바로 장소기반교육이다.

장소기반교육의 ‘장소’는 인본주의 지리학에 기반을 둔 것으로 공간과학이라 비판받는 실증주의 지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 인본주의 지리학은 인간(들)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이며 실재하는—실제적인 감정, 경험, 의미, 관계 등을 중시한다. 램프의 장소성과도 유사한 장소기반교육이 상정하는 ‘장소’는 학습자들이 직접 살며 경험하고 생활하는 일상의 터전이자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실천하는 시작점이다.

장소기반교육의 개념은 미국의 교육학자인 스미스의 학술논문(2002년도)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후 학술적 및 (교육) 실천적으로 점차 확대·발전하게 되었는데, 장소기반교육은 생태교육과 지역사회지향 교육 두 가지를 지적—실천적 원천으로 한다. 장소기반교육은 문화연구, 자연연구, 실생활 문제해결, 인턴십과 취·창업 기회, 지역사회 과정으로의 유도 등 5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 문화연구 :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당 지역의 문화적 및 역사적 현상을 조사 주제로 삼아 학습하는 것.
- 자연연구 : 사회, 과학, 언어, 수학, 음악, 미술 등의 여러 교과 수업에서 해당 지역의 강, 호수, 숲, 산, 습지 및 서식생물 등을 반영하여 다루는 것.
- 실생활 문제 해결 : 교내 혹은 교외(즉 마을과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슈/현안을 발견하고 풀어나가는 데에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는 것.
- 인턴십과 취·창업 기회: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터전에서 경제적 기회를 찾거나 만들어내는 역량을 연습시키는 것.
- 지역사회 과정으로의 유도 :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습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서, 실생활 문제 해결과 겹치는 지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

장소기반교육의 강·장점 및 의의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장소에서의 능동적인 경험, 장소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장소 이해 및 장소 애착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소에 뿌리내린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결국 학습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개인의 고립과 소외를 극복하는 데에도 유익이 있다. 둘째, 시민의식, 주인의식/주체성,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시민역량의 함양을 촉진한다. 셋째, 시민적 참여의 증가는 비가시적 관계망인 사회적 자본을 확충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

들어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시작된 장소기반교육의 결정적인 약점 혹은 한계는 무엇일까. 앞에서 지적한 기존의 장소-장소성 개념과 이론의 한계와 같은 맥락이 되겠다. 미국형 장소기반교육은 자신의 터전과 장소조차 기본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가질 수 없는 자들, 즉 취약하고 주변적인 존재들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없다. 환언하면, 장소 없는 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의 관련 관점이 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구의 이론을 그대로 동아시아에 적용할 때, 간과하게 되는 중층적 모순이 있다. 동아시아의 문화, 역사, 인종, 언어적 특수성이 배제되는 것이다. 서구의 이론은 특히 제국을 경영하면서 식민성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 이런 점에서 제국주의, 냉전체제, 신자유주의 등 다양한 변화와 모순에 노출된 장소성에 이런 모순에 직면한 적이 없는 장소 기반 이론을 접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따라서 부산의 장소성과 동아시아의 장소성을 고려한 장소기반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 3. 부산의 장소성 : 취약한 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도시

대륙형 기질 · 특징과 해양형 기질 · 특징을 비교 · 대조할 때 다음과 같이 구분하곤 한다.<sup>7</sup> 대륙 관련 키워드로는 고착, 권위, 일원적, 경직, 폐쇄, 단합, 남성적 등을, 이에 반해 해양 관련 키워드로는 이

동, 민주, 다원적, 유연, 개방, 열림, 너그러움, 여성적 등이 언급된다.<sup>8</sup>

다분히 해양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듯하다. 아니나 다를까, 부산학 연구자들의 글 혹은 부산시청의 부산 홍보 관련 글 역시 대부분 위의 도식적 구분을 따르고 있다. 해양 관련 기질과 특징을 떠올려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말 그러한가. 양자의 특징이 서로 섞이고 혼종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와 변색이 발생했거나, 혹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설명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 1) 부산의 지역적 특징의 형성 요인

### (1) 시간-역사적 요인

부산은 전통적으로 중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멀리 떨어져 존재해왔다. 오늘날 부산의 역사문화적 원류는 동래인데, 동래는 일본(왜구)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조선 동남부의 대표적 군사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동래읍성, 금정산성, 부산진성, 다대포성이 대표적 사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상좌수영 역시 (오늘날의 울산으로 이전했던 잠깐의 기간을 제외하고) 오랜 기간 동안 동래에 위치했다. 방어 거점, 군사중심의 역사문화는 부산의 하층성 및 민중성으로도 연결된다. 유림의 주류 사대부, 권문세가, 고위 관료보다는 하급 무관과 민중 중심의 도시가 바로 부산 동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산 특유의 민중성은 후일 부마항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sup>9</sup>

동래와 달리, 동래에서 멀리 떨어진 현 부산의 원도심 지역에는 왜관이 설치되어 존재했다. 조선-일본 간 공무역에 의해 일본인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일본인들의 자치 조직도 존재했는데, 임진왜란 때 폐쇄되었다가 후일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재설치되었다. 이것이 영도와 두모포를 거쳐 용두산 아래, 소위 초량왜관의 설치된다. 오랜 시간 동안의 왜관의 존재로 인해 부산은 외국인, 외래 문물과 문화에 대한 개방성, 수용성, 실리적 성격을 형성하게 되었다. 초량왜관은 부산의 개항 후, 일본인들이 각 영역의 자치권을 갖는 전관거류지로 변모, 일본인들에 의해 매축 및 항만-철도-공업 건설 후 근대 부산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이처럼 부산은 일본과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서 일제의 동북아 대륙 침략의 교통-물류 군사적 전초기지로 기능했다. 이로 인해 그 어느 도시보다 근대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후 광복으로 인해 일본, 만주, 동남아 등에서의 귀환동포가 발생했고, 한국전쟁기 피란민, 1960년대 한국 동남부의 경공업 중심 역할 이후의 농촌 등 외지인들에 의해 형성된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특히, 1970년대 들어, 기존의 경공업을 넘어 중공업까지 가세되어 철강, 조선, 목재, 고무/신발산업이 1980년대까지 크게 번성했다.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산의 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 (2) 공간-지리적 요인

부산은 입지적으로 한반도 북부에서부터의 산악 축과 바다가 만나는 지대이자 고속도로와 철도의 시점 및 종점이란 특성으로 근대 이

후 사람, 물자, 정보, 문화 등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및 문화적 다양성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한반도의 끝이란 점에 서만 보면 지리적으로는 최끝단-최주변부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보와 문화의 유입 등에서 개방적이고 수용성이 높다. 지리적으로는 한반도의 끝이었지만, 정보-문화-문물의 수입에서는 주변부가 아닌 최선봉이었던 셈인데, 그런 점에서 텔레비전 등 일본의 가전제품이 가장 먼저 수입된 곳도 부산이었고, 일본 잡지가 가장 먼저 유행했던 곳도 부산이었으며, 일본의 가라오케 문화 역시 부산이 가장 먼저 수용하여 전국적으로 노래방 문화를 확산시켰다.<sup>10</sup> 이처럼 부산은 바다를 통한 교류와 혼종성을 가진 도시였고, 지리적으로 일본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개방성과 동시에 외세 침략의 저항으로 인한 내핍성/내향성 및 폐쇄성이 공존하는 곳이 부산이다.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인 외부 유입으로 인한 인구 고밀도와 난개발, 기형적 도시구조가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초반에 부산은 최대 70만 정도를 수용하는 도시로 계획되었지만, 해방과 함께 귀환동포들이 물밀 듯 부산으로 몰렸고, 한국전쟁 기간에는 전국의 피란민들이 부산에 집중된다. 이로 인해 해방 당시 30만 명가량의 부산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부산의 고질적인 인구과밀도, 공간과 인프라의 부족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박정희 시기 1960년대 들어 부산이 한국의 동남권 경공업 중심도시의 기능을 맡게 되면서 영남의 농촌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으로 대거 이주했고, 한국전쟁 및 산업화 시기 외지인들의 대거 유입과 이주로 인한 거주공간의 부족으로 부산 전역에 산비탈

무허가 주거 지대가 형성되었다. 오늘날 부산의 문화·관광상품 및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는 산복도로가 형성된 배경이 그것이다.<sup>11</sup>

### (3) 변화 혹은 변색

부산의 서민성 혹은 민중성은 역사성 및 지리성과도 일부 연관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고위 관료, 권력층, 권문세가, 대지주 가문 등이 많은 지역이 아닌 데다, 한국전쟁 이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하위에 위치한 외지인 및 이주민에 의해 형성된 도시가 부산이다. 그 결과 부산은 서민, 하층민, 민중적 성격이 짙은 곳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부산이 지니고 있던 사회적 및 사회문화적 개방성, 수용성, 다양성이 희석되고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에 더해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국가발전전략과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자원들의 서울 집중화가 진행되는 데, 그 결과 중심과 주변, 서울-수도권과 부산 간의 각 영역의 격차와 불균형이 급속도로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부산은 급격히 독자성, 특수성, 개방성, 다양성, 활력, 개성을 상실하고 보수성, 내핍성/내향성, 폐쇄성이 생겨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산은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외부인들에 의해 형성된 도시다. 개방성, 수용성, 다양성, 혼종성, 활력성 역시 부산의 이러한 역사와 입지조건에 따른 인적구성적 특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1980년대 서울-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부산은 사회경제적으로 주변부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주변부 의식, 콤플렉스, 소외의식, 차별의식은 부산 주민들로 하여금

애향성, 내향성, 폐쇄성, 부산 중심성, 공격성, 보수성을 갖도록 촉진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는 또한 타자(특히 외지인, 비주류, 소수집단 등)에 대한 수용, 이해, 환대, 공감 등을 가로막는 심리와 행태로 이어지게 된다.

그 외 한국전쟁의 요인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전쟁의 경험과 기억이 만들어낸 잠재의식과 기질적 특성<sup>12</sup>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자면 아마도 혼란, 아비규환, 궁핍, 생존, 강인함<sup>13</sup> 등이 될 것이다. 이런 전쟁의 경험 및 기억에서 비롯되고 형성된 잠재의식은 부산 곳곳의 인공물과 조형물에 반영되어 있다. 엄청난 위용을 뽐내는 50층 이상의 고층건물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서울이 아닌- 부산인 것도 우연이 아닐 테고, 또한 허남식 부산시장 시절부터의 슬로건인 ‘크고 강한 부산’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혼란과 궁핍 속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 몸부림치다 보니, 타자에 대한 관심과 공감에 필요한 심적, 시간적, 실천적 여유가 생길 수 없었으리라. 이러한 여러 배경과 요인들로 인해 부산은 낯선 자, 타자, 나와 상관없는 자들에 대해 열려 있지 않고, 호의적이지 않은 지역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특히 비주류적이고 취약한 자들이 살아가기에 팍팍하고 험악한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2) 부산의 장소성 : 취약한 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도시<sup>14</sup>

2019년 부산의 문화다양성 실태 파악을 위해 부산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5~79세 부산 시민 중 성, 연령, 지역에 비례하게 표본을 추출) 주요 인식 지표 중 하나인 소수집단 수용도 측면에서 전국 대비 성소수자, 장애인, 새터민, 외국인주민(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등에 대한 부산의 수용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터민,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주민 수용도를 점수화하면 다음과 같다. 새터민 수용도 부산 3점(전국 평균 3.8점), 장애인 수용도 부산 3.1점(전국 평균 3.8점), 성소수자 수용도 부산 3.5점(전국 평균 4점), 외국인주민 수용도 부산 3.1점(전국 평균 3.6점). 각 항목별로 전국 평균에 비해 부산의 그것이 0.5점~0.8점 낮은 상황이다.

부산 시민들의 소수집단 수용도가 낮다는 것은, 부산 시민들의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소수집단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 차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각 소수집단이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볼 때, 부산은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예컨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비율이 전국 평균 73% 일 때 부산은 38% 수준, 새터민 차별에 대한 인식 비율이 전국 평균 59% 일 때 부산은 28% 수준으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산 시민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에 둔감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산의 소수집단 중 가장 수용도가 낮고 접촉 경험이 적은 집단은 ‘새터민’, ‘난민’, ‘성소수자’로 조사된다. 외국인 접촉률은 약 10%, 새터민, 난민, 성소수자 집단과의 접촉률은 극히 미미하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수용도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낮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 같은 외국인이라도 출신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갈등 현상 중 청년층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노인은 사회의 짐이다.’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0%만 동의하였고, ‘젊은이들은 이기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문항에는 31%, ‘젊은이들은 윗세대보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항에는 25%가 동의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노인에 대한 혐오보다 청년층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크고 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 청년의 경우, 세대갈등뿐만 아니라 성별 불평등이라는 이중적 제약 하에 놓여 있게 되는데,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료 혹은 구성원의 성별은 상관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국 평균 82%였으나, 부산은 73%에 그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성별 집단 중 30대 남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 노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편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기업 최고경영자로서 일을 더 잘한다.’는 문항과 ‘엄마가 직장에 다니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보다 30대 남성이 최대 3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산의 30대 남성은 다른 연령대·성별 집단보다, 여성은 일이 아닌 육아를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배경에서, ‘취약한 자들을 환대하지 않는 도시’인 부산의 외

국민주민, 장애인, 독거노인 등 몇몇 취약집단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함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 (1) 외국인주민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거주 외국인주민 가운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은 절반 정도다.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생산·노무직 및 판매·서비스직 등의 단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외국인주민 100명 중 무려 약 36명이 월 50만 원 미만의 돈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낮은 임금’이 직장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그다음이 ‘불안정한 직업’인데, 이를 통해 저임금과 해고가 외국인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임을, 바꾸어 말해 저임금과 해고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간적인 대우 보장’과 ‘법정 근로시간 보장’의 높은 응답률이 보여주듯이, 부산의 외국인주민들이 비인간적 대우, 초과 업무 부여 등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상황 외에 부산의 외국인주민들은 의료 방면에서도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살펴보면, ‘외국어 가능 의료진 부족’ 40.8%, ‘높은 진료비용’ 21.3%,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처방전·영수증’ 19.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2016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외국어 가능 의료진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처방전·영수증’은 12.6%에서 2020년 19.7%로 증가하였다.

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최근 1년 동안 외국인주민 10명 중 2명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가 ‘의사소통 문제’, 두 번째가 ‘비용 문제’ 그다음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이었다.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어느 중국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sup>15</sup> 그녀는 부산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지난 10년 간 부산에서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외국인 주민 대표회의 멤버로도 활동했고, 얼마 전에는 부산의 한국인과 결혼을 했다.

그녀는 외국인 주민대표회의 활동을 하면서 부산 거주 외국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거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약 75명이 ‘보통’이라고 답했고, ‘만족’은 극소수, ‘매우 만족’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대부분이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첫째 외국인 특히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점, 둘째 가시적 및 비가시적 차별. 특히 코로나 발발 이후, 중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시선이 보다 더 심해졌다. 심지어 부산대 근처의 어느 커피숍은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를 붙였는데, 이는 19세기 중후반 상하이 영국 조계지의 와이탄공원(2차 대전 이후 황푸공원으로 명칭 변경)의 입구의 ‘중국인 및 개 출입금지’ 뜻말을 연상케 한다. 셋째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 문제. 외국인들은 부산에서 노동하며 세금을 납부해도,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육료 지원이 없기에 어린이집과 학교에 다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학교에 다니더라도

학급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녀는 송나라 휘종 시기 사마광이 집필한 역사서『통감절요通鑑絕要』의 ‘海納百川 有容乃大: 바다는 무수한 강을 수용하기에 더욱 커지는 것이다.’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부산도 마치 바다와 같이 다양한 인종, 사람, 계층을 포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 장애인

2021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에서 볼 때, 부산은 5.2%로서 전국 도 및 특별·광역시 가운데 경북, 강원, 경남, 대구에 이어 5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볼 때 부산에서 장애인들을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가정에 갇혀 지내며,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활동의 자유와 권리, 직업 및 사회생활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부산의 장애인들은 교육권, 생존권 등 여러 기본권의 측면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교육권에서의 차별. 세부적으로 장애인들은 입학원서 접수 거부, 편입 및 입학 거부, 장애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제한 등의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부산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학습시설과 기자재 부족, 장애 특성을 반영한 교육내용과 방식 부족 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둘째, 최저한의 생활 보장 즉 생존권에서의 차별. 기초생활 수급

신청의 어려움, 장애 수당 신청의 어려움, 장애로 인한 소득의 불충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는 부산의 장애인들에게 저소득의 문제가 가장 큰 장벽임을 보여준다.

셋째, 건강권에서의 차별. 장애인의 건강권 관련 차별의 경우, 장애 특성이 반영된 의료서비스 부족, 의료기관 의료인으로부터 진료 거부, 간병서비스 이용 제한 등이 언급된다. 항목별 차별 경험의 빈도에 있어 부산의 경우, 장애 특성이 반영된 의료서비스의 부족, 진료 거부의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노동권에서의 차별. 장애인들은 취업 원서 접수 거부, 취업 자격 제한, 업무 배치 시의 차별, (입사 동기들과 비교할 때) 임금 차별, 임금체불, 산재 보상에서의 차별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부산의 장애인들은 취업 원서 접수 거부, 취업자격 제한, 장애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기회 부족 등 취업 이전 및 취업의 과정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임금체불과 임금차별 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 (3) 독거노인

전체 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규정된다. 2021년 10월을 기점으로 부산시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처음으로 초고령 단계로 진입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불과 6년여 만이다. 6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보여주듯이, 부산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sup>16</sup>

지난 10년 간 약 21만 명이 부산을 빠져나간 데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낮은 출생률(0.75명)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가 0.8명도 안 된다는 의미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0.6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 부산의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3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평균 고령화 속도보다 약 5년 빠르다고 평가되는 부산이기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종합적인 대비 및 효과적인 노인 지원 방안과 정책이 매우 시급하다. 부산시는 2015년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2016년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조례 제정, 2019년 신중년 노후 대비 및 노인 일자리 전담팀 신설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왔지만 예산 및 행정능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로 변모된 부산지역에서의 노인의 삶, 특히 독거노인들의 삶은 어떠할까. 독거노인 가구가 8년 만에 약 45%나 증가하고, 노인인구 고용률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지표로 본 부산 독거노인들의 삶은 매우 열악하다. 2019년 말, 동남지방통계청은 동남권 노인 기초통계분석인 ‘우리 옆집에 노인이 산다.’를 발표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삶을 인구, 일자리, 복지, 소득과 소비 등의 지표로 조사 및 분석한 것이다.<sup>17</sup>

2019년 기준 부산의 독거노인 가구는 11만 6,589가구로 8년 전인 2010년의 8만 686가구보다 약 45% 증가했다. 또한 부산의 전체 가구 대비 독거노인 가구의 비율은 8.6%로 전국 평균인 7.2%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sup>18</sup>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독거노인도 저절로 많아진 것이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는 청년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일례로 청년들이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부산에 남아 황혼을 맞이한 노년 부부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독거노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sup>19</sup>

게다가 부산의 노인인구 고용률은 전국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최하위다. 부산은 전국 2위의 대도시임에도 그에 걸맞은 노인 일자리가 태부족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노인 대상 공공근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월 3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공공근로 수당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는 어려운 데다, 단순히 공공일자리 수 및 고용률에만 집착하는 부산시의 접근방식과 자세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 4.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을 향하여

위에서 언급한 미국형 장소기반 학생교육의 강·장점을 살리고 약점 및 한계점을 보완하여, 부산형 장소기반 시민교육으로 적용하여 구성하기 위해, 개략적인 방향과 내용은 무엇이고 어떠한지 하는지 초보적 차원에서 구상과 제언이 요구될 것이다.

첫째, 역사·문화연구 측면. 부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부산의 역사적 및 문화적 지역성-로컬성 관련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 성격, 현황을 한국적 차원과 더 나아가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조

망할 수 있는 시각-관점-식견의 습득을 돕는 시민교육 교과과정과 교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생태·환경연구의 측면. 초중고 각 학교의 사회, 과학, 언어, 음악, 미술 등의 여러 교과 및 비교과 수업에서, 그리고 시민교육의 현장에서 부산 지역의 자연-생태-환경 관련 이슈와 현황에 대해 부산 시민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것은 경제-사회-생태/환경의 3개 축의 유기적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연결된다. 부산의 생태-환경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동아시아 여러 도시들의 생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이슈와 상호 소통, 교류, 연대 가능해야 한다. 즉,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에 담아내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

셋째, 실생활 문제 해결의 측면. 부산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교내 혹은 교외(즉 마을과 지역사회)의 문제와 현안을 발견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인턴십과 취창업 기회의 측면. 부산의 청소년과 청년, 즉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본인들의 삶의 터전인 부산에서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를 찾거나(인턴십 및 취업) 혹은 만들어내는(창업) 경험과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인턴십의 경우, 부산의 사회복지-이주민/다문화가정-난민-장애인-젠더-생태/환경-사회혁신-사회적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소셜 벤처-마을기업 등으로의 인턴십 및 취업을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창업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들에서의 사회



적 기업-소셜 벤처-마을기업 창업을 위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시민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 해결 역량 이외에, 다양한 잠재력 경험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의 1장의 잠재적 역량 부분을 고려하면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다섯째는 부산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부모,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제도적 및 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실생활 문제 해결과 겹치는 지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부산 동구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꼽을 수 있다. 부산형 장소기반 민주시민교육은 동구의 학생 교육 혹은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삼아, 이를 보다 더 발전 및 심화할 수 있는 방향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5가지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낮선 자들에 대한 환대와 공존'의 인식 교육이다. 이것은 서발턴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시민성을 고려하는 것과 연결된다. 레비나스에 따르면, 환대는 낮선 자들을 자신의 터전과 장소에 기꺼이 맞아들여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임계적 공공성이 바로 그런 비대칭적 관계(서발턴과 주체와의 만남)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환대는 환대하는 자의 이익, 권리, 편의/편리, 관습, 패턴, 생활, 삶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위협하게 된다. 그래서 기존 주체가 자신의 것을 과감히 포기하지 않으면 환대는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환대와 공존은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부산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한다. 피란민, 해방 후 귀환한 조선인 등 많은 이방인들이

정착한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이에 더하여 부산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들,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있다. 본 장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부산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5.2%로서, 전국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도시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부산에서 장애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는 점이 문제다. 환언하면 그만큼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가정에 갇혀 지내며,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활동의 자유와 권리, 직업 및 사회생활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94.8%의 부산 비장애인들에게 5.2%의 장애인들은 일상에서 마주치기 어려운 낯선 타자/존재이기에, 낯선 타자/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교육받을 기회 역시 거의 전무하다. 이런 점에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 혹은 부산형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이 부산의 낯선 자들에 대한 환대 및 공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흔히 (정치-행정적) 분권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중심과 중앙으로부터의 (각 지역과 로컬 차원으로의) 분권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동의어로 간주되어선 안 된다. 함석헌 등이 말한 바와 같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때의 자치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 및 다른 이들의 역사와 기억을 서로 나누고, 자신 및 다른 이들의 존재와 삶을 상호 공감하고 체험하며, 다른 이들을 이웃으로 맞아들이고 그 이웃들과 연대하고 공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듯 (장소와 로컬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인문정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분권을 지향하는 시스템, 제도, 정책의 개선만으

로 각 로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살고 존재하는 삶의 터전인 장소와 공동체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와 실천 없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다.

인문정신은 타자를 대상화하거나 사물화 하지 않고, 자신만의 언어와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살아있는 주체로 서로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문정신은 자치를 지향한다. 각자가 주체로서 존재하면서도, 장소와 로컬과 공동체에 뿌리를 박고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장소가 상실되고, 장소가 공간으로 매몰되면서 인간들의 삶의 구체성, 인간성, 연대성은 점차 사라지고 추상성, 비인간성, 기계적 기능성, 화폐성 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풀이 뿌리를 내리려면(풀뿌리 민주주의) 삶의 터(장소 및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물리적이고, 추상적이며, 용적률과 이윤/이익으로만 접근되는 경제적-기술적-과학적 공간에서는 삶이 존재할 수 없다.

부산의 죽은 공간들을 존재와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일터, 놀이터, 쉼터의 장소로 전환시켜야 한다. 기계적-물리적-추상적-화폐적 공간에서 물화된 채로 살아가는 부산의 수많은 이들이 기억과 역사를 함께 나누고, 각자의 이야기와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며, 서로의 ‘몸’과 ‘삶’을 기뻐하고 환대하는 공생과 공존의 장소로 부산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장소성에 기반한 부산형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이문재, "민주주의는 장소다." 경향신문 (2011년 9월 7일)
  2. 이민아, "내가 사는 곳은 장소인가? 공간인가?". 황룡닷컴 (2015년 3월 4일)
  3. 김민수, "장소- 사람이 만들거나, 사회가 변화시킨", 인천인(in) (2021년 6월 10일)
  4. 앞의 글.
  5. 이하의 내용은 모두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식』, 논형, 2005 참조.
  6. 이에 대해서는 주로 조수진 · 남상준, 「장소기반교육의 사회과교육적 의의 및 효과 탐색」, 『한국 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23권 1호, 2015를 참조함.
  7. 김소연, 「부산학 담론으로 본 부산성의 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8호, 2008.
  8. 김태만, 「부산성 · 주변성 · 해양성」, 『오늘의 문예비평』 2001년 가을호.
  9. 건축사지 지역건축특집 시리즈② - 대담 "부산 · 경남 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2013년 12월.
  10. 앞의 글.
  11. "군대를 끌어안은 한국 제1항구도시" <https://ncms.nculture.org/legacy/story/4546?jsi=>
  12. 우양호, 「동아시아 해항도시의 전쟁과 식민지 유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2020.
  13. 장주영, 「장소성의 맥락에서 지역디자인의 특성 연구」, 2017.
  14. 이와 관련하여 주로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2018)와 〈2020 부산광역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을 참조함.
  15. "외국인 더 포용하는 부산됐으면" <https://www.busan.go.kr/news/column/view?dataNo=65652&curPage=2>
  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831141800051?input=1179m>
  17.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10619385209443>
  18. 앞의 기사
  19. 앞의 기사

# Ⅲ

---

##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와 과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

전성현

## 1.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적 흐름

### 1) 부산 민주주의의 전사 - 항일독립운동

세계사적으로 근대의 역사는 ‘서구적인’ 민주주의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서구적 근대의 역사는 국민국가 수립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분제적 질서의 극복을 통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원칙으로 했다. 물론 원칙이라고 한 것은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문제였고 이 때문에 진보, 발전의 덕목이 더 가치 있었다.

한국도 자발적인 개항은 아니지만, 일본의 개항 요구에 나름 대응하며 부산을 시작으로 개항했다. 이때부터 한국은 세계사에 편입되었고, 서구와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통해 위로부터 ‘서구적 민주주의’를 접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아래로부터 자체적인 전통적 질서의 새로운 재편도 추진되었다.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은 19세기 전후의 ‘민란’으로 시작된 농민의 반봉건적 투쟁이 1894년 동학농민전쟁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폐정개혁안을 통해 천민에 대한 차별과 노비제도의 철폐 등 신분제 질서의 혁파를 주장하는 한편, 집강소를 통한 민관 협치를 통해 ‘정치적인 것’을 실현하고자 했다.<sup>1</sup>

한편,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 개항되면서 서구적인 근대 제도와 체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간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질서를 해체하고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새로운 ‘동아시아의 서구’ 이고자 했다. 이에 따라 청일, 러일 등 두 차례 전쟁을 통해 일본은 한국을 강제 병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독립 국가의 수립을 좌절시

켰다.<sup>2</sup>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주적인 독립 국가 수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항일 독립운동 전개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근대 국가의 구체적인 실현체가 3.1 운동을 계기로 민주공화국의 수립으로 수렴되었다. 즉 전 민족적이고 전 민중적인 3.1 운동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내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귀결되었다. 임시정부는 1942년 대한민국 헌장을 토대로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주창하는 삼균주의를 내세웠다.<sup>3</sup>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세력은 정치적 이념적 지향에 따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되었지만 모두 민주주의를 독립국가의 정체로 인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독립운동의 역사는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른바 독립운동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 제헌헌법의 전문에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음을 명시(‘건국 30년’)했다.<sup>4</sup> 결국 항일 독립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토대였던 것이었다.

부산은 전근대 시기 행정구역상 동래부에 속했지만, 이 지역에는 동래 좌수영, 부산진, 절영진, 다대진 등 군사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변방/주변에 불과했다. 다만, 초량왜관을 통해 유일하게 일본(쓰시마)과 외교 관계가 유지될 뿐이었다. 그런데 세계사적인 근대와 자본주의의 공세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먼저 개항시키고, 서구를 모방하는 일본에 의해 조선도 개항되면서 부산이 한국에서 근대 개항의 첫 번째 공간이 되었다. 이를 통해 부산은 근대 세계와 접함으로써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요충지(출입구)

로 변모해갔다.

개항과 더불어 옛 초량왜관에 설치된 ‘부산구조계釜山口租界’에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그 인근에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외교관과 ‘청국조계’가 열리면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근대도시,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일본의 조선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점차 한국인 거주지역까지 영역을 넓힌 개항장 부산은 인근의 한국인 거주지역까지 행정구역에 포함하면서 대도시로 전환했다. 그렇게 국제적인 식민도시 부산이 되었다.

식민도시 부산은 식민지 모순의 결절점(제국 판도 내의 국제 무역항)이자 한국 및 대륙침략의 관문 역할을 함으로써 이른바 침략과 저항이라는 이중적인 장소성을 지닌 공간이 되었다. 강제 병합을 전후한 시기 식민지 모순을 직접 목격하며 민족주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동청년단’이 결성과 함께 해외 독립운동단체들과 연계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부산은 국제 무역항이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일본 및 중국과 상호 연결되었으며, 이와 같은 연결 통로를 통해 새로운 사상적 조류가 드나들면서 항일운동의 결절점으로 역할했다.

3.1 운동의 흐름이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는데, 특히 일본에서 전개된 3.1 운동의 흐름이 부산항을 통해 경성에 유입(김마리아의 독립선언서 운반 루트)되었다.<sup>5</sup> 그 과정에서 부산항은 국외의 독립선언서가 국내로 이동하는 중요한 결절점이었다. 또한 다시 경성으로부터 전파된 3.1 운동의 흐름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전파되기도 했다. 특히 부산진에서부터 동래, 동래에서 김해, 양산, 울산 등 경



남 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sup>6</sup>

3.1 운동 이후에도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항일의 열망이 부산 또는 부산을 거쳐 한국에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다시 3.1 운동과 같은 전민족적 전민중적 항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의열단의 첫 번째 의열투쟁(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 의거)이 중국(상해)과 일본(나가사키, 쓰시마)을 거쳐 부산에서 전개되었다.<sup>7</sup> 의열단은 진보적 민족주의로부터 무정부주의, 나아가 사회주의까지 섭렵하는 국제주의적 조직이었으며 이들의 활동지는 중국, 일본, 한국이었다. 이와 같은 국제주의적 독립운동가들이 부산을 결절점으로 이들 세계와 결합하고 연계하며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개된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와 근우회의 지부가 결성되었으며 여러 방면에서 항일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항일운동이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된 공간이기도 했다.<sup>8</sup> 그만큼 부산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항일 독립운동의 중요한 결절점이며 지역 거점이었다.

## 2) 부산 민주주의사 - 민주화운동의 흐름

1945년 해방과 함께 새로운 독립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은 미소의 냉전체제 속에서 좌절되었다. 1948년 남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거쳐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전쟁의 결과, 이승만 정권은 반공정책과 더불어 독재 통치의 강화,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발췌개헌, 사사오입)과 부정선거(5.2 총선,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고 제도적인 틀을 발전시키기는커녕 무시했다. 이 때문에 아래로부터 축적된 불만과 저항 의식이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와 반독재 투쟁인 4.19 혁명으로 발발했다. 4.19 혁명은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며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세워진 제2공화국의 민주당 정부는 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내부 권력 투쟁에 빠짐으로써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붕괴되고 말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군사 독재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의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반공을 국시로 반민주적인 행동을 지속하면서 영구 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을 처음부터 제거하기 위한 각종 억압법(긴급조치)으로 억눌렀다.

하지만 밑으로부터의 저항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 수면 위로 가장 덜 일어났던 부산의 대학가로부터 도시 전 민중으로 확대되었고 이와 같은 부산의 항거는 인근의 마산으로 옮겨 붙었다. 부마민주항쟁의 발발이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를 또한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가운데 민중의 파고를 넘지 못할 것으로 여긴 권력 내의 암투를 거쳐 무너지는 듯했다. 그런데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민중들의 염원과는 별개로 권력의 공백이라는 기회를 유신체제에서 성장한 ‘유신잔당’인 신군부가 다시 가져갔다. 이른바 전두환 정권의 성립이 그것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유신체제를 이어 계엄령 등을 통해 민주적 요구를 묵살했고 그 전면에 선 5.18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군사독재를 계승

했다. 결국 제도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대한 거대한 저항은 1987년 6.10 민주항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부산은 해방과 함께 일본인들이 떠난 자리에 해외로 (반) 강제적으로 떠났던 ‘귀환 동포’가 유입되어 5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다시 한국전쟁으로 피난민이 폭발적으로 유입되었고 임시수도가 됨으로써 한국의 통치와 정치의 중심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부산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독재의 기초가 쌓인 장소(발체개헌, 부산 정치파동, 자유당 창당 등)일뿐만 아니라 반독재의 토양도 축적된 공간이기도 했다.

이승만의 통치는 실정의 실정을 거듭했고 정권 연장의 욕망은 지속적인 부정선거로 이어져 결국 3.15 부정선거에 대한 민의 저항으로 폭발했다. 대구 2.28 시위와 마산의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계기가 된 이른바 4.19 혁명은 부산에서도 불타올랐다. 그 시작은 고등학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부산의 부정선거 규탄 시위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마산보다 더욱 격렬하게 불타올랐다.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1960년 4월의 민주화운동은 이어진 박정희 정권하에서 전개된 한일회담 반대 시위와 함께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는 한국전쟁 이후 축적된 반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억눌렸던 부산이 지닌 소외성이 분출된 부마민주항쟁으로 위기에 처했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경제적 소외에 대한 도시민, 특히 도시빈민의 저항으로 평가된다. 비로소 민주화운동의 흐름이 학생에서

도시민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도 부마민주항쟁이었다.

유신체제의 종말은 표면적인 내부 권력 암투(10.26 사건)에 의해 이루어지는 듯했지만 유신체제에서 자라난 신군부에 의해 다시 계승되었다. 부마민주항쟁 이후 전국적인 민주화의 분위기를 일거에 계엄령으로 억누르고 그에 저항한 5.18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전두환 정권은 여전히 반민주적인 통치를 자행했다. 부산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단초가 폭력적 억압 과정에서 억제되면서 광주처럼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림사건’과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폭발했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을 비롯한 부마민주항쟁의 경험적 자산을 토대로 한 학생과 시민들에 의한 개헌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6월 민주항쟁으로 폭발했다. 부산의 6월 민주항쟁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성장한 학생과 시민의 저항 운동이었다. 더군다나 전국적인 운동이 침체될 때에도 가톨릭센터 농성 등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치적 민주화의 결실을 맺도록 큰 역할을 전개했다. 이른바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것이 부산의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9</sup>

## 2. 부산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토양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건은 크게 반독재의 정치 민주화, 시민 사회의 사회 민주화, 학원 자율의 학원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국

적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와 같은 민주화의 움직임은 앞에서 흐름을 간략하게 서술했지만 크게 부산의 특이성이 드러나는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6.10 민주항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산 민주화운동의 내용과 그 지향점을 확인하고 그 한 가지 토양으로서 민주주의의 지식 축적을 위한 ‘양서 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건

### (1) 4.19 혁명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저항은 고등학생의 시위로 시작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의 불법 선거운동 및 사전 투표 등이 문제 되었다. 특히 이승만 정권은 실정과 폭정, 부정부패, 부정선거를 앞두고 교사와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는 학생들의 대대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었다.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은 3월 초부터 공명선거와 학원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운 벽보 부착, 삐라 살포, 시위 기도를 전개했다. 3월 7일 동아고 등 서부산 일대 학생들의 공명선거 호소 발기회 계획을 비롯해 12일 해동고 학생들의 ‘학원의 자유를 달라’는 가두시위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 절정은 14일 저녁 범내골에서 전개된 대규모 연합시위였다. 시내 12개 학교 학생 6~7백 명이 ‘민주 학원을 되살리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전개했다.

3.15 부정선거와 마산의 3.15 의거 소식은 학생시위를 더욱 격화시켰다.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시위가 터져 나왔다. 24일 시위는 부산지역 10여 개 학교의 연합시위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봉쇄되자 부산고가 단독으로 미리 준비한 “동포에게 호소하는 글”과 함께 시위에 나왔고 25일 동성고 학생들도 빗속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했다.

이후 시위는 4.19 혁명의 최대 고교생 시위인 4월 18일 동래고 시위로 확대되었다. 동래고 1천여 명의 학생들은 동래에서 범일동에 이르는 왕복 20km의 거리를 6시간 동안 질주하며 시위를 전개했다. 연도에는 2만여 명의 군중들이 운집하여 시위대를 지지·격려했다. 19일은 가장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었다. 특히 19일의 시위는 학생들의 연합시위에 더해 부산시민들까지 합류하면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변모해갔다.

26일에는 아침부터 노인과 어린이까지 시위에 나섰다. 이에 시민들이 합세하여 시위대는 수십만에 이르렀다. 오후에는 대학교수단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전날인 25일 서울 대학교수단이 채택한 선언문 14개 항목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낸 부산대와 동아대 교수단은 도심과 간선도로를 따라 두 대학 학생들과 함께 가두시위에 나서면서 수십만의 시위대와 하나가 되어 정권 퇴진을 외쳤다. 결국 전국적인 저항 운동에 직면한 이승만은 사퇴를 선언했고 시민들의 권력에 대한 불만은 일시 폭력적 양상으로 그간 폭력적 권력을 집행한 경찰, 자유당, 반공단체 등에 집중되었지만 이내 질서는 회복되었다.<sup>10</sup>

## (2) 부마민주항쟁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의 단초들은 이미 있었다. 특히 1979년 9월의 부산공전 시위 계획은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부산 시민들의 바람이 이미 존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본격적인 시작은 1979년 10월 16일 오전 10시경 부산대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로부터 폭발했다. 학생들 5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유신철폐!” “독재타도!”의 구호를 외치며 대운동장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경찰의 시위 해산으로 오전 11시경 도서관 앞에 다시 집결한 학생들은 세 갈래로 나누어져 온천장 방면으로 진출했다. 이들은 ‘2시 시청 앞’에 모일 것을 확인하면서 해산했다.

항쟁의 무대는 도심지로 바뀌었다. 남포동, 창선동, 대청동 일대 뿐만 아니라 동대신동, 부민동, 토성동 등 서구 일대와 중앙동, 동광동 일대로 넓어졌다. 오후 5시를 지나면서 시위의 양상은 더욱 격렬해졌다. 시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내로 인파가 몰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더 혼잡해졌다. 오후 7시 무렵 퇴근길의 회사원, 노동자, 상인,接客업소의 종업원, 재수생,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5만 명의 인파가 부영극장 앞 육교를 중심으로 시청 앞에서 충무동에 이르는 4차선 도로와 광복동 일대를 메웠다. 시위대는 시청 앞과 충무동 로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다. 시민들은 ‘독재타도’ ‘유신철폐’ ‘언론자유’ ‘김영삼 총재 제명 철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 밤 9시 이후 외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날 밤 자정을 넘어 새벽 1시까지 계속된 민중들의 항쟁으로 남포, 부평, 보수, 중앙, 제1대청, 흑교 등 모

두 11개의 파출소와 경남도청, 부산문화방송국 등이 파괴되었다. 여기저기 파출소에서 떼어온 대통령 박정희의 사진도 불태워졌다.

10월 17일 아침부터 부산 시내 모든 공장, 사무실, 시장, 가정에서 전날의 항쟁이 화제가 되었다. 부산대와 동아대 등 주요 대학의 학생들은 교내에서 시위를 전개하며 가두 진출을 추진했다. 정오 무렵부터 학생들이 광복동 등의 다방, 음식점, 술집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교수들도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나오는 등 시내 중심가는 북새통을 이루었다. 본격적인 항쟁은 날이 어두워지면서 시작되었다. 오후 6시 30분경 남포동에 모인 학생들이 ‘모여라!’는 외침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시위대열을 형성했다. 이때부터 200~300명 규모의 여러 시위대가 남포동, 광복동, 국제시장, 부평시장 등을 중심으로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광복동, 남포동의 상가는 거의 셔터를 내리고 장사를 포기했으나 국제시장의 영세 상인들은 점포 문을 활짝 열어두고 피신해 들어오는 시위대를 받아주었다.

한편 항쟁의 불씨는 서면 방면으로도 튀었다. 시위가 자정을 넘기는 가운데 10월 18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차로 제3공수특전여단과 해병 7연대가 투입되었다.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은 포고문 1호를 발표하여 일체의 집회와 시위 및 단체 활동을 금지했다. 또한 사업장 이탈 및 태업의 금지, 언론 출판의 검열, 대학의 휴교, 야간 통행금지의 연장, 포고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하도록 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계엄군이 각 대학교와 관공서에 일제히 배치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부산여자대학, 성지공업전문대학 등 학생과 시민은 계엄군에게 맞선 시위를 벌였다.



이후 저녁이 되자 또다시 시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녁 7시 20분경 부영극장 주변 거리에 짝 차게 운집한 시민과 학생들은 계엄군에게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야유는 언어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음~”하는 허밍으로 표현되었다. 저녁 8시경 수천 명의 시민들이 운집하고 있는 동명극장 앞길에서 순식간에 6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남포파출소 쪽으로 행진했다. 경찰과 함께 공수부대의 무력 진압으로 밤 8시 10분경 시위대는 광복동 쪽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하지만 시위대는 남포동, 광복동 곳곳에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밤 9시 30분경 서면의 대아호텔 앞에는 700여 명의 시위대가 운집하여 해병 7연대와 대치하였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계엄군에 대한 불만들이 표출되면서 삼삼오오 모였다가 숫자가 늘어나면서 점차 ‘유신철폐’, ‘계엄철폐’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산 시민들은 계엄령에 굴하지 않고 대담하고 용맹한 투쟁을 펼쳤다. 시가지를 장악한 계엄군은 시위가 끝난 후에도 여러 날에 걸쳐 무고한 행인들을 가혹하게 폭행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심지어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말리던 경찰관들에게까지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한 사건도 있었다. 한편 항쟁의 불길이 옮겨 붙은 마산에서는 경남대의 학내 시위를 시작으로 날이 어두워지면서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도시 전역을 휩쓸었다. 마산의 항쟁은 10월 20일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20일 정오에 위수령이 발동되었다.<sup>11</sup>

### (3) 6.10 민주항쟁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에도 불구하고

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이들에 대한 저항인 5.18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세웠다. 따라서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민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부산에서도 부림 사건과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을 통해 표출되었다. 그 결정적인 저항이 정권 말기의 6.10 민주항쟁이며, 이 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6.10 민주항쟁은 ‘2.7 추도대회’를 비롯하여 ‘3.3 평화대행진’, ‘5.18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폭로’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항쟁에의 의지는 더욱 뜨거워졌고 결국 대대적인 항쟁으로 표출되었다. 부산에서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부산지구 기독교청년협의회, 사선 부산지구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 부산교구사제단,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영남지역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산 NCC인권위원회의 7개 재야단체와 신민당이 ‘고 박종철 군 국민 추모회 부산지역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2월 7일 오후 2시 중구 신창동 대각사에서 추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추도객들은 시위대열을 만들어 ‘애국가’, ‘아리랑’, ‘우리의 소원’을 부르고 “박종철을 살려내라!”, “민주쟁취 독재타도!”, “고문 정권 타도하자!” 등을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2.7 추도대회가 끝난 후 준비위원회에서는 2월 9일부터 박종철의 49재 일인 3월 3일까지를 ‘고문 추방 및 민주화를 위한 국민결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부산에서도 3월 3일 오후 6시 대각사 앞에서 출발하는 평화대행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아쉽게도 이날의 시위는 2.7 추도대회에 비해 시위 규모는 줄었으나, 전두환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전국에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현행 헌법으로 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고 그에 따른 대통령 선거 인단 및 대통령 선거를 연내에 실시”하겠다고, 이른바 ‘호헌선언’이었다. 3.3 평화대행진 이후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주춤할 때 발표된 4.13 호헌조치는 다시금 투쟁의 대열을 가다듬게 하였다. 5월 20일, 부산 진구 당감성당에서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약칭 부민협)와 종교계, 통일민주당, 학생, 노동자 100여 명이 모여, 군부독재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저지하고, 군부독재정권의 영원한 종식, 호헌반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해 ‘호헌반대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결성된 ‘국민운동 본부’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약칭 부산국본)로 개칭하였다.

부산국본을 중심으로 6월 10일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부산시민대회」(이하 6.10 부산시민대회)가 열려 경찰의 통제에도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후 부산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졌다. 6월 16일에도 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이날 시위에서 6.10 민주항쟁 재점화의 상징이 된 부산가톨릭센터 농성은 시작되었다. 시민들도 가톨릭센터 농성 지지투쟁으로 결집되어 17일 저녁 무렵에는 대략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시청과 남포동, 광복동 일대에서 치열한 투석전을 벌였다.

6월 18일은 국민운동본부가 정한 ‘최루탄 추방 국민결의의 날’이었다. 이날 부산에서는 시민 봉기에 가까운 양상이 나타났다. 밤 10시경, 서면 시위대가 촛불을 손에 들고 범일동 쪽으로 행진했다. 촛불 시위대가 좌천동 고가도로(일명 ‘오버브리지’)를 통과하려고 했으나

경찰의 저지에 부딪혔다. 바로 그때 최루가스가 뿌영게 뒤덮인 고가도로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다. 이태춘이었다(6월 24일 사망). 이 무렵 항쟁은 전국적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는데, 부산의 시위 상황이 오히려 거세지자 다른 지역의 분위기도 덩달아 되살아났다. 부산에서는 최루탄 추방의 날 자정이 넘도록 시위가 계속되었다. 시위는 19일까지 이어졌다.

한편, 16일부터 가톨릭센터에서 농성을 계속하던 시민과 학생들이 22일 해산했다. 그런데 이들의 귀가 과정에서 학생, 시민들은 경찰의 기만적이고 계획된 테러를 받았다. 이튿날인 23일 오후 3시 부산교구사제단 전원은 긴급 사제 총회를 열고 정권의 인권 말살, 폭력적 공권력 행사 등 반민주적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발표했다.

26일 오후 6시, 보림극장 앞, 연산로터리, 개금삼거리에서 시위가 시작되어 부산역, 당감 입구, CBS방송국 앞, 진시장 부근, 서면 복개천, 태화고무 앞, 수안동로터리 등 부산 시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되면서 항쟁의 분위기는 본격적으로 상승하였다. 엄청난 규모의 대중투쟁이 전국에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자, 결국 노태우는 '6.29 선언'을 발표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6.29 선언 이후에도 부산국본에서는 7월 9일 부산역 광장에서 '고 이한열 군 추모제 및 직선개헌 쟁취 기념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군부독재정권의 즉각 퇴진, 양심수 석방, 노동삼권의 보장, 농민·도시빈민의 권익 및 생계대책, 광주 학생의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민족 통일 등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7, 8, 9월 노동자 대투쟁

으로 이어졌다.<sup>12</sup>

## 2)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적 토양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그 토양이 된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부산 민주주의의 전사로서 항일독립운동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이상과 제도 등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4.19 혁명 이후 교육의 장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더욱 반민주적이고 반자율적으로 변해갔다. 그때 그 토양의 하나로 활용된 것이 이른바 민주주의와 관련된 서적의 배급과 자생적인 독서모임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양서협동조합’이었다.

양서협동조합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결성된 양서 유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비자 협동조합이었다. 양서협동조합은 양서인 책을 상품으로 도서 보급이라는 문화운동을 추구하고, 조합원의 교육을 위한 독서모임과 공개 강연 등을 통해 민주주의 사상을 고취하는 대중문화조직의 성격도 갖췄다. 나아가 양서협동조합을 토대로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진 재야인사와 학생들이 속속 참여함으로써 대중과 만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한 조직 형태로도 규정할 수 있다.

양서협동조합은 1978년 4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서울에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복역하다 출옥하여 결혼과 함께 부산으로 온 김형기와 중부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최준영, 김희옥 등 기독교 청년들이 함께 논의해 결성을 준비했다. 처음부터 ‘건전하고 온건

한 시민들의 사회개혁, 생활 향상 운동으로 출발'하고자 했기 때문에 시민문화운동으로 알려졌다. 1977년 11월 정식 발기와 함께 12월 양심적인 법조인 등 지역사회의 명망가들을 발기위원으로 위촉했다. 1978년 2월에는 조합원 교육과 조합원 출자를 받기 시작했다. 마침내 1978년 4월 5일 부산 YMCA 예식장에서 '부산양서판매이용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 조합장에 양심적인 법조인이며 가톨릭 신자였던 이흥록 변호사가 선출되었다. 조합원 수는 107명이었다. 협동조합은 임시 사무소에서 보수동 책방골목의 2층 건물을 빌려 4월 11일 사무실을 이전하고 22일 직영서점인 협동서점을 개설했다.

양서협동조합의 창립 목적은 “양서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 보급하고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통해 부산 지방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며, 조합원 상호 간의 협동과 신뢰에 기초한 민주적 경영방식을 익히고 나아가 경제적 민주주의와 협동주의에 입각한 참다운 자주, 자립적 경제 질서의 전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했다. 더 구체적으로 ‘좋은 책을 매개로 시민들이 신뢰와 협동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우며 우리 경제의 잘못된 유통구조를 개선 개혁하고 진정으로 인간이 역사와 삶의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협동조합의 목표는 명확했다. 창립 때부터 발행한 ‘양서조합소식’의 창간호에 “현대는 민주주의 시대다. 모든 권력은 국민 다수로부터 나오고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은 있으나, 민주적 생활은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운동은 민주주의를 역사와 사회 속에 굳건히 정착시켜 가는 운

동”이며 민주주의의 내실을 충족시켜가는 운동이고 “진정한 자주·자립의 기반을 다져 가는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좋은 책(양서)을 매개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체였고 운동이었던 것이다.

양서협동조합은 창립과 함께 조합원이 차츰 늘어갔다. 창립 당시 107명이었던 조합원이 1978년 말 298명으로 늘어났다. 조합원이 증가하면서 독서모임, 독서주간, 연구모임 등 다양한 모임과 활동이 전개되었다. 여전히 양서협동조합을 통해 의식개혁과 점진적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중점을 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과학 서적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학생운동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쨌든 경찰은 더 이상 양서협동조합을 시민문화단체로 보지 않고 감시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감시를 넘어 양서협동조합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협박도 전개했다. 이 때문에 양서협동조합은 대학생들의 독서모임 등을 외부에서 하도록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의 감시와 억압은 더욱 거세졌다. 1979년 7월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일일 찻집을 열고 양서조합 이름으로 제작한 ‘농촌문제와 농촌활동’이라는 소책자를 행사장과 조합원에게 배부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책자의 제작과 배부를 긴급조치 위반으로 걸어 책자의 압수는 물론 관련자를 연행해 조사하기까지 했다.

경찰의 감시와 방해에도 양서협동조합은 계속 조합원이 늘어갔고 양서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1979년 말 최소한 600명이 넘는 조합원을 보유했다. 경찰의 감시와 방해에도 부산지역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이 계속 집결했던 것이다. 이때 부마

민주항쟁이 전개되었다. 양서협동조합이 부산의 학생운동은 물론 민주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인지 부마민주항쟁을 수사한 군경합동수사단은 양서협동조합을 항쟁의 배후 세력을 지목하고 300명이 넘는 조합원을 연행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부마민주항쟁은 조직적인 항쟁이기보다는 유신체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대학생부터 일반시민들까지 모두가 바라던 바람으로부터 촉발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양서를 매개로 한 민주화운동은 부마민주항쟁에 소중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부산의 민주화운동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부림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sup>13</sup>

### 3. 부산의 민주화운동에서 다루지 못한 ‘지나간 미래’

앞에서 확인한 부산 민주주의 역사 과정의 대표적인 사건이며 항쟁인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은 그 지향하는 바가 ‘독재 타도’라는 정치적 민주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민주화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내포한 이상과 지향은 더 깊고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부산 민주주의 역사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는 현재와 미래사회의 민주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당면한 문제이며, 민주시민교육에서도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하나의 사례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은 정치적 민주화의 주체로 호명될 수 없었던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비가시화된 자들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나아가 정치적 인권 문제를 넘어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부산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건이며 근대 국가의 반민주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근대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벗어난 부랑아/부랑인, 고아, 결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 및 ‘비가시화’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감시통제체제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설립된 형제육아원으로부터 시작된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건이 1987년 1월에야 세상에 드러났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일어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그 이후 6.10 민주항쟁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부산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제로 등장했지만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 과제로 이미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금 여기의 민주적 과제는 이미 부산 민주주의 역사 속에 내재된 것이었다.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나간 미래’가 된 보편적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지나간 미래’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중심으로 고아 및 부랑아의 사회적 배제 및 비가시화 문제와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또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 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가부장제는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서도 해제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국가를 아버지로 하는 가족 형태의 국가 가부장 체제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했다.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배제와 비가시화의 대상이었고, 한편으로 포섭과 가시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sup>14</sup> 특히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한 근대 국가는 농촌으로부터 유리된 많은 주체화의 대상을 만들어 냈고, 이 가운데 가부장 체제에서 벗어난 고아와 부랑아를 양산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당연히게도 일제강점기 식민 권력과 ‘본원적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체제의 중층적 변화로 이와 같은 고아와 부랑아가 다수 양산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식민 권력은 이들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물론 추방과 격리라는 배제와 비가시화로 대응했다.<sup>15</sup> 이와 같은 상황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은 고아, 결인, 부랑아의 폭발적 양산을 초래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부산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통계이긴 하지만 전국의 고아 수는 1957년 5만 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고아 등을 수용한 고아원 등 수용시설이 1945년 33개에서 1954년 495개로 대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가 가장 많았고 부산이 그 절반을 차지했다.<sup>16</sup> 그런데 이때 고아와 부랑아를 수용한 고아원 등 수용시설은 전쟁으로 우왕좌왕하던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전쟁 참전의 당위성을 이와 같은 대상의 구원으로 찾던 미군을 비롯한 유엔과 외원단체에 의해 설립되거나 지원되거나 후원되었다.<sup>17</sup> 그 아래에서 이른바 한국인 사회사업가들이 탄생했고, 차츰 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미군과 유엔군이 철수하고 원조기구와 외

원단체도 점차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는 1950년 말부터 이와 같은 수용시설 자체의 운영이 불안전해졌다. 이미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따라 운영하던 이와 같은 수용시설 체제는 한국인 운영 주체의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그 후원과 지원이 끊어지게 되자,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다시 고아와 부랑아가 사회로 배출되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고아와 부랑아가 4.19 혁명 당시에 참여 주체로도 등장했던 것은 단순히 정치적 민주화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둘러싼 억압과 배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아와 부랑아의 가시화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물론 정치적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국민과 시민으로부터도 배제 및 비가시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회적 문제의 한 핵심으로 지적되었고, 그러한 사고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다.

먼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이들을 ‘정상적’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른바 사회정화와 선별적 포용이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부랑인을 깡패, 소매치기, 율악여성과 더불어 대중의 습속을 오염시키는 범죄의 소질을 지닌 집단이며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정의했다. 그 범주에는 ‘겉인, 껌팔이, 앵벌이, 노변행상, 빈 지게꾼’을 비롯해 ‘구두닦이, 신문팔이, 행상, 녀마주이’ 등 길거리의 ‘직업소년’도 부랑아와 동일시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회정화운동’을 전개했다.<sup>18</sup> 그 사회정화의 수단인 단속과 검거를 통한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이었다. 대표적인 형태가 1961년 국토건설단, 1965년 대한청소년개척단, 1968년 국토건설

단, 1971년 갱생건설단 등이었으며 1980년의 삼청교육대로까지 이어진 노동력 수급을 위한 조직과 활용이었다. 다른 한편, 단속과 검거에 따른 형사사법기구(교정기구)의 활용이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진된 것이 민간 위탁 수용과 갱생보호사업이었다. 이 때문에 형제복지원과 같은 수용시설의 운영이 국가권력과 관계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19</sup>

한편, 이 시기 정치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형성도 억압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당시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으로 대표되는 학생들과 진보적 지식인 및 종교인들도 이른바 고아와 부랑아에 대한 시선이 군사독재정권과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4.19 혁명 당시 대학생은 시위대에 부랑아가 끼어 있는 것을 알고 ‘밤의 무질서’를 염려했다. 이후 진보적 지식인의 글에서도 청소년 문제와 사회정화는 물론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걸인과 물품 강매, 불량배, 도범’ 등 이들 부랑아 계층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더불어 윤락여성도 부랑인과 같은 범주로 파악하며 격리와 수용의 대상으로 여겼다. 1970년대가 되면 이와 같은 분위기가 동정론으로 바뀌긴 했다. 이른바 사회악으로 인한 부정부패는 하층 계급이 아니라 상층 계급의 문제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학생, 진보적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이와 같은 하층 계급 또는 배제되고 비가시적인 존재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노동자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사회는 부랑인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그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에 집중했고 부랑인들을 범죄의 원천

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형제복지원과 같은 배제와 비가시화의 수용시설이 군사독재정권의 비호 아래 유지되고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20</sup>

형제복지원은 이처럼 하층 계급인 도시 빈민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배제와 비가시화 과정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써 성장했고, 결국 보편적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해 오던 긴 과정 속에서 불현듯 우리 사회에 가시화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사건화는 당시의 민주화운동과 결을 달리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은 아니었다. 다만 당시 사회가 정치적 민주화에 집중함으로써 ‘지나간 미래’가 된 것이다.

1960년 부산 감만동에 설립된 미인가 육아시설인 형제육아원은 1965년 인가될 때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 60여 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수용보호 시설이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등에 규정한 시설 설치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아동들의 직업 보도 등은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형제육아원은 외부 후원단체와 외원단체의 기부를 통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격리 수용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 외원단체의 기부 등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면서 수용시설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해 사회복지법인을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직접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이고 조세적인 수단을 통해 스스로 모금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용시설들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고 수익사업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기관과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공적 사

업을 수탁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형제육아원도 1971년에서 1972년 사이 ‘사회복지법인형제원’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육아시설 이외에 ‘직업보도소’를 신설하고 사업 영역에서 ‘육아’ 대신 ‘부랑아 보호 선도’로 변경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형제원은 부산시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1975년 7월 25일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부랑아’ 수용 업무를 공식적으로 위탁받았다. 이른바 부산시 부랑인 행정의 공식적인 실행기관이 된 것이다. 부산시의 행정적 지원에 따라 주례동의 대규모 부랑인수용소를 건설했다. 이를 토대로 부랑아의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수용과 함께 부랑아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부산시에 필요한 강제노역을 비롯해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위한 노동력의 활용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군사정권의 묵인을 토대로 부산시와 사회복지법인 형제원의 ‘담합’과 ‘이해관계의 교환’이었다.<sup>21</sup>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연간 1,500명에서 4,500명에 이르는 부랑아가 이유도 모르게 강제적으로 입소해 수많은 인권 탄압과 폭력에 노출되었다. 피해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부랑인’도 ‘부랑아’도 아니었다. 수용자 중 상당수는 경범죄 혹은 불량한 복장 등을 빌미로 경찰에 잡혀 끌려왔다. 또한 형제복지원 관계자들에 의해 온 경우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도 반항하면 구타당하기 일췌였다. 입소 이후에도 군대와 같은 구조의 내무반 생활을 하며 출소 또한 불가능한 상태에서 형제복지원의 규율에 순응하는 인간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문에 항상 구타와 기합이라는 폭력에 노출되었다. 형제복지원의 규율에 순응하는 인간은 형제복지원과 박인

근 원장을 위한 돈벌이가 가능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sup>22</sup> 이와 같은 안팎의 요인들에 의해 박인근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형제복지원의 폐쇄적 지배구조와 반인권적인 폭력적 지배구조는 더욱 심화되었다. 부산시는 물론 국가의 묵인 하에 1987년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결국 전두환 정권 말기에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다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6.10 민주항쟁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른바 부랑인도, 장애인도, 여성도 부차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이미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미래’처럼 2012년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른바 소수자 운동은 진행 중인 민주주의의 한 단면인 것이다.

#### **4. 부산 민주주의의 역사적 영향과 민주시민교육**

##### **1) 민주화 이후/이전의 민주주의**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토양을 통해 대체적으로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인 정치적 민주화(민주적 제도)에 역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정치적 자유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연하겠지만 그간의 정권 자체가 정권의 영구 집권을 위한 정치적 자유의 억압에 공권력을 모조리 동원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의 당면 목표는 정치적 자유라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6.10 민주항쟁은 군사독재정권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치적 자유의 한 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공정하고 평등한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민주적 경쟁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참여 및 소통의 통로를 여는 것이었다. 시민사회가 비로소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4.19 혁명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목표는 ‘민주주의’와 ‘민권’의 수호였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부정선거에 동원하려고 한 학원의 중고등학생으로부터 시작되어 ‘공명선거’와 ‘학원 자유’가 중요한 목표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이 점차 시민 일반으로 확대되면서 ‘민권의 수호’로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정치적 약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 부녀자, 전차표 파는 사람, 음식점 종업원, 농마주이, 옛장수, 고아, 부랑아 등 도시 빈민층의 적극적인 참여는 공명선거라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수호도 목표했겠지만 ‘민권 수호’의 구호를 통해 볼 때 보편적 인권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들의 외침도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몫 없는 자의 요구가 이미 4.19 혁명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침은 정치적 민주화에 묻혀 버렸다.

또한 부마민주항쟁도 대학생들 중심으로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유신철폐, 독재타도, 민주회복 등 여전히 정치적 자유, 제도적 민주화가 핵심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자립 경제’와 ‘공평 분배’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철폐’ 등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생각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시위의 주체가 대학생에서 역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공원, 잡급직, 노동, 선원, 운전수, 무직 등 도시 빈민층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가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있는 자들, 즉 자신의 몫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정치적 민주화라는 우선적 목표로 인하여 여전히 경제, 사회적 민주화는 아직까지 요원했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은 지금까지 저류에서 흐르고 있던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와 다양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이 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소수자 및 보편적 인권 문제의 대두를 비롯해, 낙동강 하구언 개발 등과 같은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공해문제연구소와 같은 단체 등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사건들은 여전히 민주화의 중심으로 부상하지는 못했다. 6.10 민주항쟁은 그 상징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운동의 정점인 6.10 민주항쟁에서도 정치적 민주화 이외의 생각과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정치적 인권 문제는 특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고문이라든지 양심수 문제 등이 그랬다. 이와 같은 정치적, 제도적 민주화 이외의 다양한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 문제는 6.10 민주항쟁 이후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근대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자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미 ‘배제된 자’, ‘비가시화된 자’, ‘몫 없는 자’의 부상은 있어 왔다. 세 차례의 민주화운동 가운데도 면면히 저류에 흐르고 있었다. 다만 사회가 더 크다고 인식한 정치적 민주화에 집중하면서 이후로 미루어 뒀을 뿐이다. 그런데 6.10 민주항쟁 이후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

룩하자, 그 사이 돌아보지 못했던 다양한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가 주목되기 시작했다. 특히 자본주의 하의 자유라는 경제적 자유와 관련한 물결이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 ‘신자유주의’로 한국 사회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됨으로써 그간 정치적 자유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언급되고 있던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의 요구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민주주의 또 다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중앙과 지방의 차별에 대한 문제였지만 이 문제는 모든 분야의 차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치적 자유는 정치적 평등과 연결되지만 경제, 사회적 자유는 경제, 사회적 평등과 연결되지 않는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자유의 이면과 평등의 민주주의 개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화 이면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적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으로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노동, 여성, 인권과 소수자 분야에서 이미 존재하던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문제들이 도출되기 시작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 6.10 민주항쟁 이후 전개된 노동자 대투쟁으로 정치적 자유를 획득해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IMF 사태와 세계화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초래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자본에 의한 구조조정이 용이해지는 한편, 공공성을

지닌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대량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1970년대부터 여성 문제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부천 성고문 사건 이후 여성 문제 중 성폭력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 속에서의 폭력과 차별도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1년 ‘장재혁 원장 간호사 성폭행 사건’, ‘부산교대 교수 성추행사건’ 등이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 성폭력 등 여성 인권 문제와 남녀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1988년 ‘근로여성의 집’, 1991년 ‘정신대문제 대책 부산협의회’, 1992년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의 개설로 나타났다. 이후 여성 인권, 여성 노동, 보육 및 모성 보호, 성평등 의식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었다. 특히 2001년 부산대 웹진 ‘월장 사이버 성폭력사건’과 같이 여성 폭력이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여성 폭력 문제는 ‘여성 혐오’로까지 확장되었다.

한편,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과 2012년부터 진행된 진상규명운동 등을 통해 하층 계급과 보편적 인권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시위자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양심수라든지 정치범의 고문이라든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정치적 인권 운동으로부터 출발해 보편적인 인권 문제의 해결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소수자 인권으로 확대되었는데, 장애인의 차별과 권익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들이 1980년대 결성되었고 이들의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이 현재에도 전개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도래는 인적 자원의 국제적 교류로도 확대되었다. 이른바 이주 결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증대는 그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이주 결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와 국민 밖이었기 때문에 배제되고 비가시화된 존재였다. 그와 같은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현재적인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비가시화되었던 성소수자의 출현은 그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폭력으로 점철되는 등 여전히 민주주의의 과제로 대두 중이다.<sup>23</sup>

그렇다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 즉 경제적, 문화적, 생활적인 민주주의의 추진이 중심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형태를 넘어 생활 속에 공고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차별을 넘어 전 방향으로 차별의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경제적, 문화적, 생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수자 중심의 민주주의로 변모해야 했다. 보편적 인권의 대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관련해 부산에서 언급할 수 있는 역사적 영향은 일반적으로 다시 회귀하는 정치적 자유(역진적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시키는 한편, 자주 언급되는 경제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소수자와 관련된 보편적 인권과 차별 철폐와 관련된 민주 시민교육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 2) 부산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시민교육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 속에 부산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물론이고

지향하는 가치(정치, 사회, 직장, 학교)에 대한 교육을 넘어 경제적, 문화적, 생활적 민주화의 새로운 영역, 차별 철폐와 소수자 중심, 보편적 인권을 향한 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 민주주의 역사를 토대로 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수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2019년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참여단체로는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마민주항쟁 기념재단, 부산경실련 시민대안정책연구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부산교육연구소,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독립예술영화관설립추진위원회,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 부산문화재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 의숲,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양서협동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인권포럼, 부산장애인인권포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사회복지연대, 생명그물, 생명의전화 상담교육원, 시민교육연대 ‘해’, 여성인권지원센터,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 창, 이주민과함께, 인본사회연구소, 지속가능공동체포럼,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평화통일센터 하나, 포럼지식공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한국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등이다.

이들 단체들과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민주화운동을 토대

로 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서 다뤄야 할 다양한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 자유, 주권, 정의, 의사소통과 인정, 인권(장애, 난민), 역사, 정치제도의 유형, 경제민주화, 생태 및 환경(지속 가능한 에너지 교육 등), 동물권, 생명, 평화 또는 비폭력(전쟁, 군축, 탈핵), 시민권, 평등(차별과 편견 제거, 성평등, 성상품화 금지, 여성혐오 금지 등), 권리, 노동, 성(성교육, 성인지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 공동체성, 사회비판(비평), 시민적 자부심(자긍심) 함양에 도움이 되는 모든 내용, 문화다양성 교육, 미디어 교육, 언론 교육, 투표권, 헌법교육, 풀뿌리 시민참여 민주주의 의의와 사례, 지역성 이해, 이주민(소외계층) 등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부산의 민주적 토양을 바꾸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인권, 시민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환경 및 생태와 관련된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sup>24</sup>

또한 민주시민교육의 방법으로는 강의, 대화와 소통(권리 컨테이너, 권리 파빌리온 설치), 상담과 경청, 토론, 문제 해결(social fiction), 갈등 해결 및 협상력 훈련, 역량 발현(시민의 전시와 표현, 시민발언, 여성조직의 구성), 자긍심 발현, 체험식(시민법정, 민주주의 버스투어, 인권투어와 같은 기획, 여성정치세력 만들기 연습 등), 다양한 소셜 믹싱(한국인 대상 민주주의 교육을 지양하기 위해 다문화 인권 감수성 교육 및 문화다양성 교육 진행) 등을 비롯해 학교 밖과 안의 민주시민교육과 서로 연계하고자 한다.<sup>25</sup> 일반적인 강의가 중심이긴 하지만 또 다른 방식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향과 달리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은 여전히 일  
반화된 방식을 따르고 있다. 2019년에 진행된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의 실태 연구  
>는 다른 기관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동일한 연구 결과를 도  
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두 연구 모두 강의 위주가 가장 높다. 다음으로  
토론이며 이를 뒤이어 참여형 또는 현장체험활동이 뒤따른다. 그 이  
외의 방법은 강의와 유사한 강의 후 질의응답이나 세미나 또는 온라  
인 강좌 등이다. 대체적으로 강의, 강좌, 토론, 세미나 등 주입식 교  
육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인지 “상당히 일방적이고 권위  
적이며, 주입식 위주의 지식전달 방식”에 대한 교육 방법이 “민주적  
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생활 속 전반에서 체험  
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실험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기되었다.<sup>26</sup>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방법과 관련해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  
니라 토론과 참여, 그리고 현장의 체험이 가능한 방식과 지역의 특이  
성을 포함해 유사한 경험을 지닌 또 다른 현장을 토대로 한 동아시아  
의 연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  
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주목할만한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사례는 모범이 되거  
나 대표할만한 교육 방법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지금까지의 교  
육 방식과 결을 같이 하면서도 나름의 결속력과 오랜 역사는 물론 신  
선함을 지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점과 한계  
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1)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한마당’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민주공원,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교육연구소, 전국국어교사모임이 주관하는 ‘전국청소년논술토론한마당’은 ‘열린사회’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목적 아래 2000년부터 매년 1차례씩 운영되고 있다.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언론, 통일, 교육 등의 주제를 선정해 “다양성을 지향하는 창조력, 논리력, 비판력을 갖춘 종합 사고력”을 기르고자 한다. 특히 토론을 통한 자기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참여와 연대의 공동체 의식과 책임 의식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이들 주제를 통해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 교육이 지닌 일방적인 주입식 지식 교육과 모범 답안 외우기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일상의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민주 시민의 덕목과 의식을 기르는 실천적 과정이기도 하다.<sup>27)</sup>

구체적으로 운영 방식은 주제와 관련한 논술 한마당과 토론 한마당으로 나뉜다. 먼저 논술 한마당은 주제와 관련한 제안문과 필독서, 그리고 쟁점을 읽고 쟁점을 포함한 논술문을 제출하는 것이다. 2020년의 예를 보면, 주제는 ‘청소년, 정치를 말하다’이며, 제안문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의 세상은 이제 오지 않는다”였다. 필독서는 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16),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이진순, 문학동네, 2016), 『정치의 발견』(박성훈, 후마니타스, 2015) 등 세 권이 제시



되었다. 세분화된 주제와 쟁점은 2020년에는 기본소득과 정치, 진보 정치는 가능한가? 언론과 정치, 청소년 보호법, 20대 남자 등 5개였다.<sup>28</sup> 참여자는 이들 주제 제안문, 필독서, 그리고 소주제 및 쟁점을 읽고 스스로 쟁점을 포함한 글을 제시하면 심사를 통해 토론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둠을 구성해 개별 토론을 실시하기도 하고 전체가 모여 토론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참여자가 모여 난상토론을 통해 마무리한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의 방식처럼 캠프와 같은 형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제문과 함께 필독서 및 참고도서가 제시되었는데, 이를 토대로 먼저 동아리 형태로 분임 토의와 온라인 발표 등을 통해 토론 주제를 선정했다. 기존에 미리 제시된 토론 주제와 달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어 다시 동아리 활동을 토대로 토론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때 토론 한마당은 동아리 대표 간의 대면 토론이 진행되고 동아리 구성원은 관람객으로 참관하는 형태였다.<sup>29</sup>

아래는 그간의 토론과 주제이다.

- 2000 1회 개인과 사회
- 2001 2회 21세기, 과연 여성의 시대인가?
- 2002 3회 청소년에게 한국은 희망의 나라인가?
- 2003 4회 북-미 핵문제와 평화통일
- 2004 5회 광복 60년, 왜 아직도 친일청산인가?

- 2005 6회 풍요로운 삶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경제성장인가? 환경보호인가?
- 2006 7회 양극화해법, 성장이나 분배냐- 노동, 교육, 복지, 가족을 중심으로
- 2007 8회 한국사회민주주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2008 9회 경쟁, 어떻게 볼 것인가?
- 2009 10회 부마민주항쟁 30주년, 한국의 민주주의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자유주의 확대인가, 공화주의 강화인가
- 2010 11회 청소년, 자기 삶을 말하다
- 2011 12회 청소년, 한국의 정치를 말하다
- 2012 13회 청소년, 한국의 정치를 말하다
- 2013 14회 청소년, 돈을 말하다
- 2014 15회 청소년, 한국교육을 말하다
- 2015 16회 청소년, 행복을 말하다
- 2016 17회 청소년, 헬조선의해법을 말하다
- 2017 18회 청소년, 정의를 말하다
- 2018 19회 청소년, 통일과 평화를 말하다
- 2019 20회 청소년, 시민저항권을 말하다
- 2020 21회 청소년 정치를 말하다
- 2021 22회 청소년, 포스트코로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회’는 오랜 역사와 함께 심층적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리고 청소년에 직접

적으로 관계하는 현안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 독서와 사고를 토대로 논술과 토론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합리적 사고 증진은 물론이고 상호 간의 우호적 관계 형성으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주제와 쟁점 자체가 상당히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 자체가 제한적인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주제와 필독서 및 참고도서가 사전에 제시됨으로써 토론과정의 효율성은 담보할 수 있지만 스스로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제시된 틀에 제약받는다는 점에서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부산에서 진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제의 보편성과 광범위한 전국적 참여자 등으로 인해 부산만이 지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체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 민주주의 역사를 토대로 한 민주시민교육으로써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부산민주길 개발과 부마길 탐방프로그램 운영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를 위한 노정 중 부산을 중심으로 한 1979년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그 창립의 과제 중 첫 번째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가 민주시민교육이다. 즉,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시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으로 설

정했다. 특히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알리는 민주시민교육은 “부마민주항쟁을 통해 우리 현대사는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그 이후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억압은 끊이지 않았고 국민들은 무수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세계사에 찬연히 빛나는 촛불 혁명으로 대한민국은 한결 성숙된 민주국가로 성큼 도약했지만, 시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면 위기와 도전은 언제나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진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sup>30</sup>

이를 위해 부마민주항쟁재단은 현재 교육 사업으로 부마민주항쟁 교재개발 및 부산민주화운동 교수학습자료 ‘부산민주길을 걷다’ 개발을 토대로 부마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용 콘텐츠로 초등용 계기교육 자료와 중고등용 계기교육 자료를 개발해 교육용 교재로 제공한다. 이들 계기교육은 활자보다는 그림과 이미지를 중심으로 친근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당시의 역사적 사건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부산민주길을 걷다’라는 교재를 초등용, 중고등용, 교사용 지도서까지 개발했다. 이를 토대로 부마길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31</sup>

부마길 탐방프로그램은 현재 전문 해설사 양성을 토대로 연중 15명 내외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탐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에는 ‘온라인 부마 로드 방방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집에서 ‘부마 마블’을 통

해 부마민주항쟁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탐방에 필요한 탐방 키트를 따로 만들어 가족 단위, 동아리 단위, 연인 단위 등 다양한 소그룹 형태로 직접 발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가 아로새겨져 있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혼자서도 역사적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워크북을 제작 지원하고 있는데, 이 워크북은 1979 부마로드라는 제목으로 부산 코스와 마산 코스로 나뉘어져 있다. 부산편 내용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 전개일지, 가이드맵과 함께 세부 코스인 부산대길과 코스설명(퀴즈와 활동), 가자! 시내로와 코스설명(퀴즈와 활동), 보수동길과 코스설명(퀴즈와 활동), 대신동길과 코스설명(퀴즈), 끝으로 그림일기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나 길과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 돌아와 다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32</sup>

아직 재단의 출범이 오래되지 않아 시작 단계인 부마민주항쟁재단의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현장 체험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가능하도록 다양한 탐방 자료와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대상도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해설사에 의한 인솔 탐방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 등 소규모 단위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의 탐방 프로그램이 부마민주항쟁에만 한정되어 있어 민주화운동 이면의 다양한 민주주의 문제와 민주화운동 이후의 또 다른 민주주의와 관련한 또 다른 주제에 접

근할 수 있는 폭넓은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확장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

### (3) 동아시아평화인권캠프<sup>33</sup>

동아시아를 둘러싼 과거 역사의 반성적 성찰과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시민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도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시민성 구축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사례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인권 캠프’(이하 동평)이다.

동평은 일본의 리츠메이칸대학교, 한국의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2000년 대한민국과 2001년 오키나와 및 대만에서의 준비 단계를 거쳐 2002년 8월 제주 캠프로 시작되었다. 현재 2020년 2월, 제36회 동평으로 대마도 캠프를 준비하던 중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지만 20년간 35회에 걸쳐 지속되었다. 그 사이 일본의 APU대학교와 한국의 동아대학교가 캠프 구성원에 포함되었으며, 서울과 전남의 경우 한 대학을 넘어 지역 대학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중국 등 중화권 대학으로도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중일 간 역사 논쟁이 불거져 불발로 끝났지만, 연변대학교에서 중국 캠프를 진행하고자 했다. 또한, 대만의 타이난 대학교도 옵저버로 참여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평의 목적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냉전, 국가폭력의 역사와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각 지역의 현장에서 직접 발로 확인하고 서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대학생들이 동아시아 각 지역을 돌아가며 캠프를 열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 다른 시간 속에서 일어난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들을 공부하고 체험함으로써, 이 사건들이 따로 떨어진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라는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일관된 힘과 권력의 작동 방식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 지역의 경험이 개별 지역의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인식 속에서 상호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20년간 35회 걸친 캠프는 대체로 한국과 일본을 교차하며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각 지역 캠프를 관통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동아시아 근현대의 제국주의, 냉전, 국가폭력이었다. 제국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2017년 제30회 동평은 일본 나가사키에서 ‘전쟁과 근대화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주제로 열렸다. 나가사키는 주지하다시피 일본 제국주의와 긴밀한 관계가 있던 지역이었다. 현재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지만, 이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침탈에 기반을 둔 산업시설이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 과정에 벌어진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원폭이 투여되어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동평은 이 지역을 동아시아 대학생들과 함께 답사하며 제국주의하에 진행된 일본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근대적 산업이 식민지로부터 동원된 강제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고 강제노동에 동원된 사람들, 나아가 원폭의 피해를 입어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배워나가야 하는지, 나아가 이와 같은 전쟁과 관련된 산업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의 질문을 가지고 현장을 발로 확인하고 다시 캠프를 통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했다.

동아시아 냉전과 관련해서 2017년 제31회 동평은 서울과 DMZ에서 ‘냉전 속 열전: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냉전 - DMZ를 따라서’라는 주제로 열렸다. 구체적으로 먼저, 한반도 분단 속 국가폭력과 경계인들이라는 소주제 아래 강의, 답사, 토론을 통해 한국전쟁에서 벌어진 학살, 살인, 강간 등의 행위와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에 외면당한 다양한 정체성의 피해자들을 다시 돌아보고 평화를 위한 국가와 공동체의 역할을 고민했다. 둘째,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냉전의 기록이 남아 있는 필드워크 장소들을 토대로 전쟁의 참혹함과 더불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평화는 어떤 모습인지 논의했다. 셋째, 동아시아의 신냉전과 분단 극복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면서 앞으로의 동아시아 냉전 극복, 한반도 분단 극복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평은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토대로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미래에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시민성을 기르는 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앞으로로도 한국과 일본의 7개 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여름과 겨울방학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제국주의, 냉전, 국가폭력의 장소들을 함께 공부하고 답사하며 토론하고 소통할 것이다. 다만 그 지속을 위해서 더욱더 동평의 공고화는 물론이고 발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 소통의 문제 등 진행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치열한 논의 과정에 있긴 하지만, 최소한 중화권 국가의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동평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연변대학교를 통한 중국 캠프의 계획, 대만 타이난 대학교의 옹저버 참여가 진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에 대한 준비를 토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최근 중국 청년층의 역사 인식과 관련한 한국의 반중 정서 고양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동아시아 3국의 대학생들이 함께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서로 이해하며 협력하는 연대의 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심화되는 각 지역의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아래 평화와 연대가 아닌 갈등과 불화의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간 평캄 주제들이 대체적으로 가해와 피해의 역사, 즉 기억하지 않고 망각에 빠진 타자의 피해와 희생에 집중되었다. 물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민주시민교육은 또 다른 측면에서 과거의 긍정적인 역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민지 체제와 냉전체제 등으로 한계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 자유와 평등을 위한 민중들의 연대와 협력도 없지 않았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다른 민중과 시도한 다양한 협력과 연대의 모습은 물론,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 등을 조사 발굴해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 또한 동평이 서울, 전남, 부산, 제주, 일본을 잇는 대학생들의 모임이고 한 장소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이를 부산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와 연대하고 현장 체험과 상호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서로 연결되

어 있는 과거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답사하며 토론하는 연대의 장은 아직 소수이고 여전히 어렵지만, 동아시아 시민성을 구축하기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조경달, 『이단의 민중반란 :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 역사비평사, 2088 ; '정치적인 것'은 '몹 없는 자'의 '몹의 요구'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것은 자크 랑시에르 지음,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13 참조.
  2. 야마베 겐타로우, 『일제의 조선침략사』, 대학서림, 2005.
  3.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2005.
  4. 「대한민국헌법(1948.7.17.)」, 『관보』 제1호, 대한민국30년 9월 1일.
  5.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CrusaderDetail.do?goTocode=20003&mngNo=12999>
  6. 전성현, 『1919, 그날의 기록 3, 경상도|전라도|충청도』, 국사편찬위원회, 2020.
  7. 전성현, 「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 - 1920년대 초 의열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2011.
  8. 경상남도경찰부, 『고등경찰관계적록』, 1936.
  9. 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 2021.

10. 김선미, 「부산지역 4.19 민주항쟁의 주도세력」,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2010.
11. 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 2021.
12.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13. 전성현, 「‘양서’와 ‘금서’ 사이」, 『부산교육』 제99호, 2021.
14. 박선주 · 오경환, 홍양희 역음, 『고아, 족보 없는 자』, 책과 함께, 2014.
15. 예지숙,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랑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 『사회와 역사』 102, 2015.
16.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사업 4282~4291』, 1958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1955-1957』, 1958.
17. 표지영, 「1950년대 부산의 아동수용시설 연구 - 시설 급증의 계기와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21.
18. 박해남, 「한국 발전국가 시기 사회정치와 부랑인의 사회적 배제」, 『민주주의와 인권』 19-4, 2019
19. 추지현, 「박정희 정권의 ‘사회악’ 호명: 형사사법의 효율성 확보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17, 2018.
20. 박해남, 앞의 논문, 2019.
21. 김일환, 「복지는 어떻게 ‘사업’이 되었는가: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역사로 본 형제복지원」, 『민주주의와 인권』 19-1, 2019.
22. 곽귀병, 「총체적 기관 안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미시사회학: 부산 형제복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9-2, 2019.
23.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2』, 2021.
24.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9.
25.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부민시넷 출범식 자료집』, 2019.
26.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20,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민주화기념사업회, 2020 ;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9.
27. <http://toron.demopark.or.kr/>
28. <https://toron21.demopark.or.kr/01/sub01>
29.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공원, 『제22회전국청소년노술토론탐담당 지도교사 간담회』, 2021.
30. 창립선언문([http://buma1979.or.kr/new\\_buma/sub5\\_2\\_2.php](http://buma1979.or.kr/new_buma/sub5_2_2.php))
31. [http://buma1979.or.kr/new\\_buma/sub3\\_1\\_2.php](http://buma1979.or.kr/new_buma/sub3_1_2.php)
32.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1979부마로드』, 2021.
33. 전성현, 「동아시아 시민성 확보를 위한 길고 먼 여정」, 『동서중국』 11호, 2021.



# IV

---

## 동아시아 시민성을 향한 모색

–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점

•

이홍규

## 1.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목표,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

‘시민성(citizenship)’은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헌법적, 법률적 이념과 가치로 자리 잡게 됐고 시민성을 보장하는 규칙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대 이후 시민성은 본래 ‘국가시민성(national citizenship)’을 의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시민성’은 어떠한 특수한 시공간적 맥락에서도 보편적 가치, 인간 존재의 동질성,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 지향성을 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초국적인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을 추구해야 하는 숙명이 존재한다.<sup>1</sup>

더욱이 냉전체제가 완전히 해체된 1990년대 이후에 세계화(globalization) 흐름이 나타났고 해외로부터 이주민이 국민국가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대거 유입되어 이질적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시대가 전개되면서 국가시민성을 넘는 세계시민성의 구현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물론 세계 경제위기의 발생이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국가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타국이나 이주민에 대한 혐오 현상이 심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부정되는 역진적 흐름이 주류가 될 가능성은 적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국가적 범주를 넘어 같은 인간이라는 인류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의 지구촌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시민(cosmopolitan)으로서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지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인류를 인종, 민족, 종교, 사상, 문화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권을 갖는 존재로 보고 국민국가를 넘어

초국적 공동체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초국적 ‘시민성’의 이념 즉 세계 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 이념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sup>2</sup>

따라서 우리의 민주시민교육 역시 국가 시민 즉 공민公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뿐 아니라 다문화주의 시대에 맞게 초국적 시민성과 보편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틀은 근대 국민국가에서 실행되어 온 민족주의적 감성의 공민교육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sup>3</sup> 특히 세계화 국면에서도 민족주의적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화 과정에서 각국은 인접한 국가들과의 평화적 공존과 번영을 위해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나아가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까지 추구해왔다. 국경을 뛰어넘어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이뤄낸 유럽연합(EU)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아직 국민국가 체제로서 불완전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지역협력을 심화해왔고 지역통합의 목표도 상정해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이 한국이라는 영토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넓어졌으며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 등을 포함하는 인접 지역 즉 동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삶의 주요 무대가 확장되었음을 느끼고 있다. 북한 핵 문제,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 한국의 국제적 갈등의 대부분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 국제 비즈니스와 국제 문화 및 스포

츠 교류, 해외여행과 해외이주 활동 등의 다수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각종 재해 및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나 방역 협력, 교통이나 통신 및 에너지 협력 같은 문제 역시 동아시아의 주변국들과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동아시아 각국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처럼 작동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초국적 시민성의 이념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행하며 살아갈 주요 무대는 한국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라는 지역region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연합(EU)처럼 지역공동체가 공고화된 경우에는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 유럽의회 선거권 등과 같은 일정한 지역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는 오랫동안 공동의 정체성에 기반한 능동적 시민성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따라서 아직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역시민권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지만 지역시민의 자질과 의식 등 ‘지역 시민성regional citizenship’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sup>4</sup>

더욱이 한국이 위치한 ‘동아시아’의 역사적 토양은 동아시아에서 식민지를 구축한 제국주의였던 서구 그리고 서구 제국주의를 학습하여 역내 식민지를 구축한 일본에 의해 민주주의 이념이 이식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동아시아는 제국주의 시대는 물론 그 이후의 냉전체제의 적대적 분위기로 인해 ‘시민성’이 억압, 굴절되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즉 이는 ‘국가 시민성’과 ‘세계시민성’ 뿐 아니라 ‘지역 시민성’도 동시에 구현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시민교육과 세계



시민교육을 실시해야 함은 물론이고 동시에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즉, 우리는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라는 실제로 확장된 삶의 무대에서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지 성찰하고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민주시민교육 역시 이러한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동아시아 지역주의(East Asian regionalism)의 필요성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딜레마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즉, 세계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음에도 동아시아의 주요국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체제 강화 그리고 미중관계 등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복잡성으로 동아시아에서 ‘민주적 지역성(regionality)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민주적 지역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시민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장은 ‘동아시아 시민성’의 구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동아시아 시민성’의 내용과 구현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을 체계화하여 이를 한국에서 확산시키고 이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소결을 맺고자 한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이후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 2. 동아시아지역주의East Asian regionalism와 동아시아 민주주의

### 1) 동아시아지역주의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 과정에서 많은 위기들이 나타났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테러리즘,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 다양한 위기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 역시 일국적 차원을 넘어 세계 각국의 협력과 상호의존을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세계화’ 그 자체는 역진逆進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지역주의regionalism는 이러한 차원에서 인접한 국가들이 세계화의 위기를 최소화하려는 공동의 모색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EU, ASEAN, NAFTA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모색이 그것이다.<sup>5</sup> 오늘날 ASEAN+3(한, 중, 일)의 형태로 모색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모색되어 왔다.



그림 1. 세계 지역주의 현황

그림 출처: “끼리끼리 뭉치는 세계…‘지역 통합’ 거센 바람” 『한겨레』 2008. 7.22  
<https://www.hani.co.kr/arti/PRINT/300178.html>

실제로 1967년 일찍부터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ASEAN)을 설립한 이래 1989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1991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 주도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st Asia Economic Caucus, EAEC) 주창 등이 있었지만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큰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지역주의 모색에 적극 동참한 것은 <표 1>에서처럼 90년대 후반 아시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아세안+3’ 정상회담이 계기가 되었다. 한중일 3국은 2010년대 이후에는 2011년 한중일 협력사무국 설립 등 동북아 지역

<표 1> 동아시아지역주의의 형성

자료원) 각종 자료를 저자가 정리

| 시 기     | 내 용                                                                                      |
|---------|------------------------------------------------------------------------------------------|
| 1967. 8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출범: 동남아시아 국가 간 경제·사회적 협의체                                               |
| 1990.12 | ‘동아시아경제회의(EAEC)’ 주창: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가 NAFTA, EC에 대항한 동아시아경제블록 주창                           |
| 1994. 5 | 제1차 아시아안보포럼(ARF) 개최: 아태지역 안보협력 문제에 대한 협의체 결성                                             |
| 1997.12 | ASEAN+3 시작: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에 한중일 3국 첫 참가                                           |
| 2000. 5 | ASEAN+3 재무장관회의: 역내 금융위기 예방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채택                                            |
| 2001.11 | ASEAN+3 정상회의: 한국 김대중 대통령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주창<br>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을 통한 동아시아공동체(EAC) 추진에 합의 |
| 2005.12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창설: 동아시아공동체 번영을 위한 ‘쿠알라룸푸르 선언’                                             |
| 2008.12 | 1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일본 후쿠오카)                                                                  |
| 2009. 2 | ASEAN+3 재무장관회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 1200억 달러로 증액                                             |
| 2010. 5 | 한중일 3국협력 인제 육성을 위한 캠퍼스아시아(CAMPUS Asia) 시작 결정                                             |
| 2011. 9 |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설치                                                                          |
| 2012.11 | 한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                                                                          |
| 2014.11 | 한중 FTA 타결                                                                                |
| 2019.12 | 8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중국 청두)                                                                   |
| 2020. 9 | 한국, 동북아 방역협력체 제안                                                                         |

에서도 동아시아지역주의를 독자적으로 추구해왔다.

더욱이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 및 통일 문제 등 한국의 정치 경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미국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경제, 외교안보,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은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동아시아 역내域內 국가나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에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를 강화시켜 왔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또한 미국 발 금융위기와 중국의 부상 등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읽고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을 동시에 조율하는 새로운 상상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추구는 최소한 이러한 요구들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색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경을 뛰어넘어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이뤄낸 EU의 사례는 지역주의가 역내 국가 사이의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형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데 상당한 의견 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 구축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sup>6</sup>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바람직한 즉 민주적인 동아시아 지역공동체는 단지 하나의 '환상'이나 '신화' 혹은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주지하디시피 동아시아 핵심 국가들은 여전히 국민국가이념과 주권에 젖어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한다거나, 강렬한 민족주의 심리, 영토분쟁, 역사문제, 현실주의적 안보관 유지, 핵심 국가들의 역내 리더십 부족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 때문에 지역공동체 구현 그 자체에서 심각한 균열상을 보여 왔다.<sup>7</sup>

EU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비교해봐도 과연 동아시아에 민주적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세계적인 국제정치경제학자 카제인스타인Katzenstein은 유럽과 동아시아가 똑같이 미국의 절대적 지배권the American imperium 하에 있었지만 민주적 지역공동체를 구성한 EU와 달리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법치주의 수준이 낮고 비공식적 관행이 과도하게 많아 투명하지 않으며,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공식적 제도화가 크게 결핍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민주적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체제와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지역갈등이 형성되어 있어 지역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sup>8</sup>

동아시아에는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동아시아 각국 내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주의 특히 민주적 동아시아 공동체 추구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 2)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위기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을 견제해왔다.<sup>9</sup> 동아시아

아 국가들의 독자적인 지역 공동체 시도로 미국의 세계 패권 체제를 위협할 신흥 세력이 동아시아에서 출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가 미국에 대항하는 지역주의 세력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특히 중국의 부상이 뚜렷해지자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억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동아시아 역내 동맹국들인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중-일 갈등과 한-중 갈등 요인들을 활용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억제하고자 했다.

중국은 20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고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중화제국 재현의 꿈 즉 중국몽中國夢도 제시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리더십을 행사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드러내 왔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등 다른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 미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미국의 역내 동맹관계 약화에 주력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등장한 미 트럼프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등 대중국 압박을 본격화했고 새로 등장한 바이든 정부도 전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패권경쟁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데 이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추구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시사한다.

한편,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위기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

에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다. 우선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거론해야 할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식 권위주의 체제가 자체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sup>10</sup> 시진핑 집권 이후부터 중국 당국은 ‘안정 유지’를 명분으로 인터넷과 시민 사회에 대한 통제 정책을 강화해 왔다. 특히 중국 공산당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보아온 소수민족 세력, 진보적인 여성 NGO, 노동운동 세력 등의 저항을 강력하게 탄압하여 중국의 시민사회는 크게 위축되었다. 예컨대 2017년부터 위구르인 11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재교육 캠프’로 불리는 시설에 갇혀 있거나 수감된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sup>11</sup> 또한 2017년 세계적인 ‘미투 운동’에 호응하여 중국에서 나타났던 여성단체와 진보 페미니즘 그룹의 ‘미투 운동’ 핵심 활동가가 체포되거나 감금됐으며, 2018년에는 비인간적인 처우에 저항해 노동조합 설립에 나선 농민공 즉 신노동자들과 이에 연대한 대학생들이 탄압을 받았다.<sup>12</sup>

이러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나아가 홍콩의 민주적 자치 체제를 와해시켰다. 본래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의 민주 자치는 중국으로의 반환을 앞두고 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진한 “위로부터의 민주화”로 시작된 한계는 존재했다.<sup>13</sup> 하지만 이렇게나마 고양된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의지는 중국 당국과의 대립국면을 낳았다. 특히 홍콩의 완전한 민주적 자치 선거 실현을 요구하는 홍콩 시민사회의 민주화 운동은 2014년 우산혁명 그리고 2019년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 등 계속되었다.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항”을 철회했지만 민주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020년 6월 중국 당국은 일방적으로 홍

콩의 시위자들을 강력하게 탄압하는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홍콩의 민주자치를 외쳤던 민주화 시위는 중국과 홍콩 당국의 강력한 탄압 하에서 점차 좌절되고 있는 상태이다.<sup>14</sup>

2021년에는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민주선거로 집권한 문민 세력을 부정하고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자 문민 세력의 실질적 최고지도자 아웅산 수지를 구금하였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군 쿠데타 세력이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 유흥진압을 고수하여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에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은 군부 쿠데타 세력에 맞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시민군을 조직하여 무장 투쟁에 나섰다. 군부 쿠데타 이전에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주장하며 미얀마 정부와 대립하던 미얀마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시민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미얀마의 일부 군인들도 탈영하여 시민군에 합세함으로써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은 이제 내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위기들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인권탄압과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을 비난하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맹국의 참여를 주도해왔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비난이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임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 움직임이 패권적이며 위선적이라고 거꾸로 비난해왔다. 미국은 또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군부 세력이 중국 당국과 연계되어 있다고 의심하지만 중국당국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노력해왔음을 내세우며 반박해왔다. 더욱이 미얀마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큼 미얀마 정권의 성격은 미중 갈등 구조 하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중 갈등 구조가 심화될수록 중국 내 애국주의가 확산되고 중국 공산당의 보수화는 심화되어 중국 내 정치 개혁파의 입지는 약화되고 홍콩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갈등 구조가 심화될수록 동아시아 민주주의 위기도 더욱 해결되기 어려운 딜레마 국면이 나타났고 이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움직임에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논의는 사실상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일본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역사적 필연으로 보았던 정치세력이었던 민주당이 완전히 퇴조하였고 그 반대의 입장에 있던 자민당 집권이 지속되면서 미-일 동맹체제는 강화되었다. 2012년 이래 등장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집중하기보다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구상인 일대일로 구상을 제시하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경유하여 유럽까지 연결되는 서진西進 전략을 공식화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이후 등장한 정부들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북방, 신남방 정책’ 등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는 지역 전략에 중점을 두거나 남북한 관계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독자적인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추구는 희미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구하되 동아시아의 ‘민주적 지

역성regionality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민주적 지역성'을 구축하는 것 즉 민주적 '동아시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이다. 동아시아 국제 관계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을 주창해온 역외 국가 미국 그리고 공산당 일당 지배 하에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역내 국가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동아시아국제관계와 민주주의 사이의 딜레마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민주적 지역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시민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의 필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체계 특히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을 한국에서 확산시키고 이를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이후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 3. '동아시아 시민성East Asia Citizenship'의 구현

#### 1) '동아시아 시민성' 구현의 필요성

민주적 동아시아 지역을 만드는 것 즉, 동아시아에 민주적 지역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민주적 지역성을 핵심 요소로 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현재의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단기적으로 성취하기는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적인 과제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주의’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동아시아 협력의 주체를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지역) 단위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물론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주체로서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도시들을 단순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각 도시의 시민네트워크로 구성된 동아시아 지역주의이다.

사실 동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은 다양한 위기들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면, 홍콩이나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사례에서 보듯 주로 도시에서 발생한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운동은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진압되었다. 또한 한국, 일본, 타이완 등 산업화가 이뤄진 각 도시를 중심으로 자본이 집중되면서 근대적 산업화가 이뤄졌지만 계급의 구조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나 고령화 사회로 인한 도시 위기 그리고 각종 테러리즘이나 범죄 등 동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근대화의 부작용이라 할 다양한 위기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도시들의 다양한 위기는 그동안 국가와 자본이 주도해온 것으로 기존의 동아시아지역주의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들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위기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공익이나 공공선 추구의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자본들은 자신의 자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구해왔

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가운데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주도하게 되면 주변국의 우려와 반발을 심화시켜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동아공영권의 부활을 꿈꿨던 일본이나 중화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중국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FTA 등 경제적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기능적으로 추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흐름이 동아시아 각국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기도 했다. 예컨대 동아시아 국가 간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 협정은 금융가나 기업가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나 일부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국가와 자본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흐름을 타고 나타난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불거질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의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거나 파열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도시의 시민네트워크 그리고 동아시아 도시 사이의 시민 네트워크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형성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가 아니라 인격적인 개인들의 자발적인 결합체로서 각 도시 단위의 시민참여형 네트워크로 구성된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참여형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의 즉 민간 네트워크 형성과 각 도시 차원의 제도적 협력 움직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도시들 사이의 시민네트워크는

일종의 생활공동체(living community)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동아시아의 각 지역 주민들이 거주, 여행, 학습, 문화, 취업 등 다양한 생활상의 목적으로 서로의 지역으로 교류와 이동이 용이하고 장려되어 사실상의 하나의 공동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동아시아 도시 시민공동체 사이에 일방적 이익 중심의 경제협력이 아닌 평화와 환경,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경제협력과 상호 연대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물론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들 사이에는 국가나 자본이 주도해온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문제뿐 아니라 오랜 역사적, 문화적 요인들로 인한 갈등 심리도 만연해있다. 특히 전통적인 동아시아에는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근대로의 전환기에는 일본에서 제국주의가 흥기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역사적 상처들을 남겼다. 따라서 국가나 자본의 문제를 떠나서도 동아시아 시민들 사이에 오랜 불신과 적대감도 오랫동안 쌓여왔다. 기능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추구하던 동아시아의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민족주의 감성을 자극하기도 한다.

더욱이 동아시아에는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였다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양분된 냉전 체제하에서 그리고 탈냉전 시기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배제되고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차별받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출현해왔다. 예컨대, 제국주의 국가권력 및 자본권력으로부터 배제되고 차별 받은 식민지 민과 소수민족 그리고 귀환자와 잔류민, 전쟁 과정에서

의 피난민과 전쟁포로 그리고 냉전 체제의 국가권력 하에서 배제된 사상범과 비전향 양심수, 탈냉전 이후에도 국가권력이 배제해왔던 탈북자와 난민 그리고 디아스포라, 신자유주의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해 배제된 하층민들,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해당된다. 이외에도 ‘군 위안부’, 혼혈아, 장애인과 병자들, 홈리스, 고아 등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배제되어 차별받은 존재들은 매우 많은데 이들은 모두 동아시아의 서발턴subaltern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동아시아의 ‘지역 시민성’의 온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중층적 모순을 배태하고 있는 이러한 동아시아 서발턴들의 목소리가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환대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현실적인 문제와 역사 문화적 갈등뿐 아니라 이러한 동아시아 서발턴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동아시아 시민사회 속에서 환대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다룰 동아시아의 시민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의 구축은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기존의 민족주의적 감성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적 쟁점과 문제들을 가장 아래로부터의 시선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플랫폼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동아시아의 시민네트워크 구축 자체가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시민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동아시아 공동체적 사고’의 ‘실천’을 계속 그리고 더욱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 시민 사이의 신뢰가 공고하게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들이 국가를 초월한 시민적 가치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실현되도록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시민성’ 구현에 힘써야 한다.

## 2) ‘동아시아 시민성’의 내용과 구현 방법

‘동아시아 시민성’이란 동아시아 시민들이 소통과 연대, 협력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공통된 인식, 가치, 규범, 비전 등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시민성의 형성은 첫째, 동아시아 각국의 국가성과 민족성에 매몰되어 있는 배타적 정체성을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 시민성의 획득을 의미한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평화적 질서이자 시공간적 범주로서 이해하고 공동의 동아시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집합적 시민성의 창출을 의미한다. 셋째, 동아시아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두터운 공적 시민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sup>16</sup>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 시민성’이라는 개념은 ‘동아시아시민주의’의 East Asia cosmopolitanism’라는 현대적 의미의 동아시아의 보편적 가치가 창출되어 구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시민성’의 내용이 되는 ‘동아시아시민주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예컨대, 세계시민주의 Cosmopolitanism의 보편성과 동아시아 정체성 East Asia identity 문제를 결합할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시민들 사이의 보편적 규범을 발굴해 공유하는 동아시아의 ‘규범적 지역주의’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국가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른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거리감을 줄이고 상호 이해와 소통의 능력을 배양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 이념이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동아시아의 ‘규범적 지역주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sup>17</sup>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문화의 지배와 근대화를 거쳐 국민국가로 성장해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화 시기 서구 이념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를 과도하게 숭상하고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등 동아시아 사람들의 인간관과 역사관 그리고 세계관을 변질시켜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구를 극복한 동아시아 정체성에 기반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에 남아있는 전통 가치 가운데 미래적 의미가 있는 가치들을 보존하고 동아시아 공동의 정체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예컨대, 유가 사상의 공동체주의 속성을 밝혀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이상을 발견해내는 작업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사상적 전통과 문화적 공통성에 주목한다면 동아시아의 가치와 사유 속에서도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주의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한 동아시아 시민도 가능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실, 전통 동아시아 사상체계와 정치담론에는 통치가 국민의 의사와 권익에 근거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민본주의(民本主義)’의 전통이 뚜렷하게 존재했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 명말청초의 황종희(黃宗羲), 한국의 경우 조선 후기의 정약용과 같은 사상가들은 민본주의를



넘어서 서구적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민권론(民權論)’에 가까운 정치 체제를 구상했다는 평가도 있다.<sup>18</sup> 또한 1894년 동학혁명을 한국적 민주주의의 뿌리로 보아서 동학을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사상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주장<sup>19</sup>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시민성’ 개념은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국민국가 체제와 민족주의 하에서 정작 그 목소리가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때에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즉 ‘동아시아 시민성’이란 보편성은 가장 홀대받고 배제되었던 동아시아 서발턴으로 시선을 옮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야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제국주의 국가에 의해 강제로 성노예가 되었던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노역을 당했던 징용 노동자 문제 해결은 동아시아 시민성의 구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방역 협력을 해야 하는 정당성은 코로나 환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환대하는 동아시아의 시민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국가 폭력에 놓여있는 소수민족 문제나 난민들, 동아시아에 횡행하는 자본의 폭력 앞에 무력화되어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들, 동아시아의 가부장 문화에 억압되었던 가장 많은 소수자인 여성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의 차별 문제 역시 동아시아 시민성의 구현 차원에서 그 해결점을 모색해야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공공성과 통치성을 구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아시아 시민성’ 구현을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를 구성

하고 있는 집단들 사이의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자는 동아시아 각국의 국적을 강조하기보다는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민간 집단 사이의 시민교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시민사회 중심의 동아시아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와 소비니즘적 유혹을 방지하고 국가주의적 기획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sup>20</sup>

이는 기능주의적이고 인위적인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쉽게 와해될 수 있는 만큼 아래로부터, 점진적으로 시민교류와 지적 대화를 확장시켜 공동의 이해와 합의를 모색하여 느리지만 단단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구축해가는 것이다. 시민단체, 지식인, NPO/NGO, 지방정부 등이 주도하는 교류 증가가 불규칙적이고 복선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지역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 내 한중일 양국의 시민들과 시민단체가 양국의 역사, 영토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환경문제, 지역개발, 다문화 교육,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기업, 개발원조(ODA)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의견을 교환하며, 비교와 학습을 통한 상호발전에 노력하는 것이다.<sup>21</sup>

보통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나 경제협력 문제와 같이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영역에서도 더욱이 다양한 시민 주체들 사이의 시민교류와 지적 대화를 모색하여 이러한 문제 해결에서 평화를 향한 동아시아 지역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배타적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군비증강을 독려하는 동아시아의 현실 속에서 평화체제 정착은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의 연대가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한국에 축적된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중 노동시장 통합과 인구 유동의 가속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즉 이주 노동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국제적 공장 이전, 국제결혼, 인신 매매 문제 등에서 사람을 위한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도 동아시아 민간연대가 필요할 것이다.<sup>22</sup>

둘째, 동아시아 시민 사이의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여 ‘더 좋은 동아시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아시아 시민인문교육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동아시아는 근대의 새로운 형성과정에서 ‘서구의 충격’으로 인한 분열과 침탈의 경험을 통해 상호 원한의 국민감정이 착근된 상태이다. ‘서구의 충격’으로 식민지, 반식민지, 아류 제국주의 등의 형태로 분화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서로에게 큰 역사적 상흔을 남겼다. 더욱이 과거 전통 질서의 중화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중국의 우월감이 남아있고 거꾸로 근대 이후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형성된 일본의 우월감도 남아있다. 냉전 시기의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 상호 적대시했던 기억과 이념적 흑백논리도 여전히 남아있다. 탈냉전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속에서 경제성장에 성공한 국가들의 우월감도 작용한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역사 문제, 영토 분쟁, 정치경제적 갈등이 더욱 첨예해져 국수적 민족주의가 크게 고양됨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상호 혐오도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동아시아 공동의 시민인문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를 추구하는 지식인들의 많은 담론도 풍부하게 논의되어 왔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연대도 모색된 적이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인문교육을 하고 나아가 이들이 동아시아 교류와 연대의 주체가 된다면 이는 향후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시민인문교육의 기본 목표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동아시아를 보는 시각의 기초적 확립이다.

특히, 동아시아 시민인문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시민들이 타자와 공감하고 타자에게 환대/연대하는 인문학 교육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그동안 동아시아 역사에서 침묵을 강요받거나 배제되어온 동아시아의 서발턴의 입장에 서서 타자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을 구성해야 한다. 즉 동아시아 시민인문교육은 동아시아의 제국과 국가 정권, 자본권력, 가부장주의 문화로부터 억압, 배제당하는 동아시아의 서발턴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아파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동아시아 시민인문교육은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타자’를 이해하는 눈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동아시아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새롭게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연습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이렇게 동아시아의 서발턴에 환대/연대하는 시민인문교육을 위해서는 그 텍스트가 되는 동아시아 시민 인문학의 내용을 잘 구

성하여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학은 민족주의로부터 벗어나 ‘시민적 역사학’의 정립과 ‘시민적 역사교육’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 보편 가치의 실현 주체로서 시민의 관점에서 역사 서술과 역사교육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sup>23</sup>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 자국의 역사와 동아시아사를 함께 배우며 비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동안 동아시아사를 정규 교과로 편성한 한국의 사례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2022년도부터 동아시아사 교과목이 한국에서 사실상 폐지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sup>24</sup>

한편,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는 대화를 나누며 동아시아 역사를 정립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사이에 역사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2000년대 이후 한중일 시민과 시민사회 주도로 공동의 동아시아 관련 역사서를 함께 기획하여 출판한 풍성한 성과들은 매우 소중한 실천이다. 『조선통신사』(2005), 『미래를 여는 역사』(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2005), 『마주보는 한일사』(2006), 『한일교류의 역사』(2007),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2012) 등의 공동 역사서가 그러한 동아시아 시민 역사 대화의 산물이다. 지금도 시민 역사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 시민을 주체로 한 공동의 역사상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sup>25</sup> 이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적 사고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쌓은 한중일 등 동아시아 각국 시민들 사이의 신뢰라는 자산이다. ‘시민의 동아시아 공동체적 사고’를 구현해내는 이러한 실천 과정은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기에 힘들겠지

만, 신뢰라는 공동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무척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의 서발턴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동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동아시아 역사를 정립해온 노력은 존중받아야 할 것이지만, 주로 한중일의 3국의 관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데 그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침묵을 강요받고 배제되어 온 서발턴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들의 목소리를 발굴하여 동아시아 역사를 재정립한다면 이는 상술한 것처럼 가장 온전한 방향으로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아시아 시민성’을 구현하는 역사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희생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아온 서발턴을 모티브로 하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 및 연극, 미술 작품 등을 동아시아 시민 인문학을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텍스트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작가들과 연출가들은 동아시아의 서발턴 문제를 자신의 작품 활동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지식인들은 이와 관련된 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예컨대, 오랫동안 금기어였던 제주 ‘4.3’ 사건이 현기영의 『순이삼촌』(1978) 등의 출간을 계기로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의 담론들을 생성하여 마침내 관련 특별법 제정, 진상조사, 국가를 대표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제주 4.3 평화기념관 건립 등의 과정을 통해 공식 기억official memory인 된 한국의 사례는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넷째, 이러한 동아시아 시민 인문학과 시민인문교육에 기반하여 동아시아의 다양한 만남과 협력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상상을 현실화시킬 ‘동아시아 시민’을 등장시키려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CAMPUS Asia 프로그램’처럼 동아시아를 이해하고 동아시아의 협력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차세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 심화시켜야 한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은 한중일 3국 정상들이 아시아지역의 연대와 통합, 갈등 해소를 위한 동아시아 미래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0년 5월, 3국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3국간 교육 협력 사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공동체적 사고’를 가진 시민을 한중일 3국에서 함께 길러낸다는 차원에서 매우 소중한 실천이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배출되는 인재는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국가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고 한중일 협력을 선도하는 전문가이자 시민이 될 것이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는 한중일 졸업생들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여는 동아시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와 세계의 접점이 되는 동아시아 지역의 의미를 평화와 공생의 단위로서 인식하여 ‘동아시아 시민성’이 갖는 의미를 탐구하고 이러한 ‘동아시아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동아시아 민주시민 교육’ 방안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동아시아 갈등 상황을 보편적 시민으로서 인식하고 공동 책임을 가지

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초국적 시민 주체를 바로 세우는 글로벌 시민교육의 성격을 갖는다.<sup>28</sup>

이러한 점에서 현재 한국에서 보편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범주화시켜 동아시아적 모델의 세계시민교육 체계를 만드는 것도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9월 UN의 개발정상회의(UN Development Summit)에서 합의된 이른바 ‘지속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서 공식적으로 전지구적인 교육개발협력 목표이자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정해져서 사회주의 사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국가 예컨대 중국 등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이 형성, 확장되고 있다.<sup>29</sup> 따라서 여전히 국가 주도의 세계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만들어 실행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민주적 질서와 규범이 하나의 정치원리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특히 민주주의가 정치과정을 움직이는 유일한 ‘게임의 규칙’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의 규범이자 관행으로 만들어나가는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sup>30</sup>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동아시아 민주주의 위기도 더욱 확대되는 딜레마적인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환경에서는 우선적으로 동아시아의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면서 각국의 사정에 맞는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 체계 구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후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그리고 동아시아의 협력 확대와 통합을 대비하면서 전통과 근대를 아우르며 민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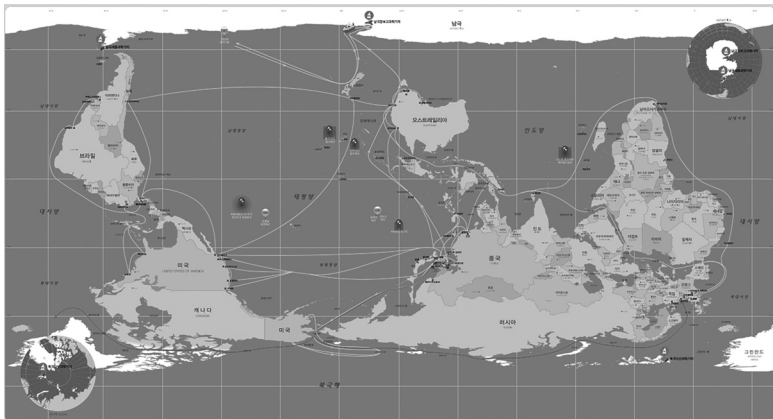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동아시아 시민’을 배양하는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 체계를 점차적으로 완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 4. ‘동아시아시민’을 바로 세우는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상술한 것처럼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이 민주적 동아시아의 주체가 될 ‘동아시아 시민’을 등장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동아시아시민’을 바로 세우는 핵심 내용 중의 하나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부산의 장소성<sup>locality</sup>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백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한다면, 부산은 동아시아 시민성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도시가 될 수 있다.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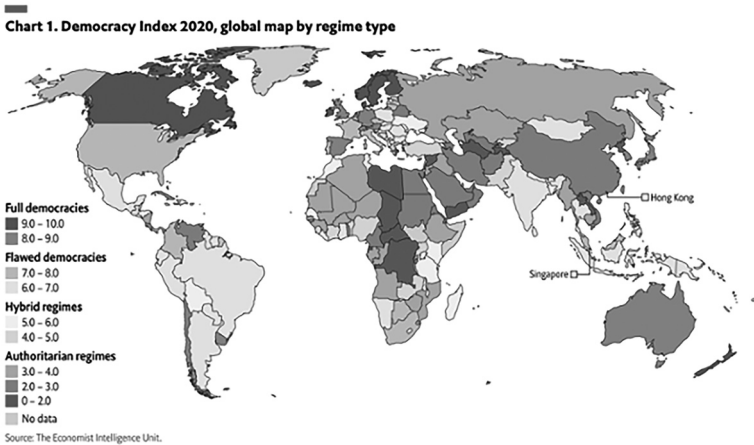
〈그림 1〉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

자료원)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s://www.mof.go.kr>)

계지도를 거꾸로 보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부산은 태평양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접점에 위치한 관문도시(gateway city)이면서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의 중간에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은 민주화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한 곳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20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0)’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됐다.<sup>31</sup> 아래 그림에서 보듯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완전한 민주국가’에 포함된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세 나라뿐이다.

더욱이 앞 장에서 서술된 것처럼 부산은 한국의 민주화 역사에서



〈그림 2〉 2020년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 세계지도

자료원) I.U. 2020, 『Democracy Index 2020: In sickness and in health?』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4, Chart 1.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근대 개항의 공간이자 국제적인 식민도시로서 부산은 민주주의 사상 조류가 유입되면서 민주적 독립운동의 결절점 역할을 했으며 해방 이후에 부산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 도시 가운데 한 곳이 된다.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시위가 인근의 마산에서 발생한 후 부산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대거 폭발하여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다. 부산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맞선 민주세력의 주요 근거지 가운데 하나로서 부마민주항쟁이라는 유신독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6.10 민주항쟁이 부산 출신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시작된 만큼, 부산은 6.10 민주항쟁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민주화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산 출신의 인사가 3명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는 등 부산은 한국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의 부산의 역사성을 고려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부산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부산은 동아시아에서 시민성을 구축하는 출발점이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부산은 한반도의 산악 지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인 동시에 근대 이후 건설된 도로와 철도의 종점이자 해양에서 대륙으로 들어오는 기점이기도 하여 근대 이후 사람과 물자 그리고 정보와 문화가 교류되는 장소였다. 따라서 부산은 한국, 동아시아 그리고 글로벌을 매개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 민주적 동아시아를 구현하기 위한 동아시아 시민성 구축에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

부산은 조선시대 때 왜관이 위치해 있었으며, 일제강점기에 부로

승격된 대표적인 도시였기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국제 도시로 성장했고 일본인과 재일조선인이 유입되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북한 지역의 피난민들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대거 유입되었고 베트남 전쟁 시기에는 보트피플이라고 부르던 베트남 난민들이 유입되었던 도시였다. 또한 부산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주둔기지가 존재했고 냉전 이후에는 미군 주둔기지가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었다. 1990년대 탈냉전으로 한중수교, 한러수교 이후에 부산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밀접해지면서 차이나타운과 러시아 거리가 조성되면서 화교와 조선족 등 중국인 그리고 러시아인, 고려인들이 부산으로 유입되었다.

이처럼 부산은 해양 세력이 유입되는 해양도시라는 지역적 특징에 더해 한반도가 경험한 식민지, 전쟁과 분단, 경제발전, 민주화의 역사적 경험을 오롯이 겪은 지역으로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많은 이방인과 서발턴<sup>subaltern</sup>들에 의해 도시가 건설되고 구성되었다. 즉 부산은 식민지 시기부터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거주했던 지역 가운데 한 곳이며 해방 이후 귀환 동포, 한국전쟁기의 피란민과 전쟁포로들, 산업화 시대의 외지 출신 노동자들, 베트남 보트피플,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유입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등이 힘겨운 과정을 거치면서 부산에 정착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이방인과 서발턴들이 부산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부산은 동아시아 시민성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부산과 상하이, 홍콩, 가오슝, 후쿠오카와 같은 동아시아 각

국의 관문 지역에 위치한 동아시아 국제도시들의 시민들이 동아시아 시민사회 구성을 위해 민간교류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문 지역의 동아시아 국제도시 시민들이야말로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지향점이 개방성과 포용성이니만큼 어느 지역보다도 민족 국가 중심에서 초월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적 사고에 더해 시민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동아시아 시민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동아시아의 협력과 번영에 힘쓰며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되 동아시아에서 세계시민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시민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형성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이방인과 서발턴의 목소리를 복원 혹은 발굴하여 그들이 겪었던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시민사회의 쟁점으로 삼고 이들의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관문도시 중 한 곳으로 이방인과 서발턴을 배제하기도 했던 부산에서 이들을 시민으로 환대하는 시민교육 체계를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1. 박성인, 박명림. 2020, 「동아시아 시민성 교육의 구안」, 『글로벌교육연구』 12집4호, pp.37-39
2. 이 개념은 다음의 글을 참조했다. 서병훈 · 김비환 · 장현근 · 심승우 · 김현주. 2014, 『동서양의 통섭과 동아시아 시민주의의 이론적 토대』, (세종:경제 · 인문사회연구원).
3. 즉, 근대 국민국가에서 실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목표는 일국 내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었으며 그 핵심 내용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시민이 갖춰야 할 민주주의적 지식과 가치 그리고 기술과 태도 등이었다. 진시원 · 홍익표 · 오승호. 2021, 『시민주권과 민주시민교육』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p.34.
4. 조일수. 2017, 「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성 형성 방안」, 『윤리연구』 제115호, pp.49-50; 권숙진. 2011, 『유럽 연합의 능동적 시민성 연구』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이러한 지역주의적 대응은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중간에 선 온건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지역이 국가를 대체하는 국제정치경제의 기본 단위로 등장할 수도 있으며 또는 최소한 지역이 국가를 보완하는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희욱 · 김재관 · 주장환 · 양평섭 · 이홍규. 2009, 「한중 FTA와 동아시아지역주의」 (서울: 풀빛), pp.15-16.
6. 이홍규. 2020, 「동아시아지역주의와 평화: 역사, 구조, 함의」, 『아시아연구』 23권4호, pp.114-115.
7. Gilbert Rozman, 2007, "Reshuffling Priorities for Northeast Asian Security: Revisionism, Regionalism, Reunification, and Realism," Korea Observer, Vol.38, No.2, Summer.
8. P. J. Katzenstein, 2005,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9. 예컨대, 미국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91년 주도했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st Asia Economic Caucus, EAEC)의 추진이라든가, 97년 일본이 주도했던 '아시아통화기금'(AMF), 중국 주도의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을 모두 반대한 바 있다.
10.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중국공산당 체제는 일정한 정치개혁을 추진해왔고 2000년대 이후 후진타오 집권기에 들어서는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다시 중국 사회에 확산된 바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좌우의 급진주의가 다시 성장하고 소수민족의 독립 및 자치 요구, 노동자의 파업시위 증가, 권력 상층부의 부패 증가로 인해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이 크게 훼손되자 중국공산당은 다시 정치사회 안정을 목표로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한다.
11. 박민희, "사라진 위구르인들...중국판 테러와의 전쟁", 『한겨레』, 2020년 9월2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0277.html>
1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리타 흥 핀체(저), 윤승리(역). 2020, 『빅브라더에 맞서는 중국 여성들』 (부산: 산지니); 하남석. 2020, 「시진핑 시기 중국의 노동운동 탄압과 저항의 상상들」, 『도시인문학연구』, 12권1호, pp.87-112.
13. 홍콩이 반환되기 직전에 영국은 홍콩에서 민주화 조치를 실시함으로 홍콩의 정치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다. 1982년 홍콩은 구의회 의원 선거 일부에 대해 보통 선거를 실시하여 홍콩 역사상 최초의 선거를 실시했고 1985년에는 직능대표제라는 입법평의회의 간접선거를 실시했다. 1991년 최초로 의회 일부 의석에 직선제를 허용했다가 1992년 최후의 홍콩 총독 패리스 힐튼이 취임하여 의회의 임명직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설립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사회단체와 외국의 연계 금지를 철폐하는 등 는 등 홍콩의 민주화를 대폭으로 추진했다.
14. 본래 영국 정부에 의해 시작된 홍콩 민주화 조치는 1997년 반환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무효화 됐다. 이로써 홍콩인들의 인식 속에는 짧고 강렬한 민주주의 기억과 더불어 중국 정부에 대한

- 반감이 강력히 자리 잡았다. 이러한 가운데 홍콩 당국이 중앙 정부의 명령에 따라 사실상 홍콩의 정치적 자유, 사상적 자유를 제한하는 추진했던 “국가안전조례”가 홍콩 시민들의 반발과 시위로 인해 철회되었다. 이후 홍콩 시민사회에서는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의원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고 중국 당국의 애국주의 교육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특히 2014년 중국 당국이 친중 인사만이 홍콩 행정장관이 되도록 제도화하여 사실상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가 무산되자 이른바 ‘우산혁명’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가 홍콩에서 발생한다. 2014년 우산혁명은 시위의 장기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내부 균열과 응집력의 부재 등으로 중단되지만, 2019년 2월 범죄인의 중국 인도를 반대하는 시위가 계기가 되어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를 포함하는 민주화 시위가 더욱 대규모로 그리고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2020년 6월 중국 당국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이라 불린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고 홍콩 당국이 이에 근거해 물리력으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강력하게 탄압함으로써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결국 진압된 상태이다. 손인주,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29권1호(2020), pp.1-29; 이종화, “홍콩의 집단기억과 시위 그리고 정체성 정치” 『중소연구』 제42권 제3호(2018), pp.157-189; 장정아, “홍콩의 법치와 식민주의: 식민과 토착의 뒤틀림” 『한국문화인류학』 38권1호(2005), pp.3-44.
15. 본래 서발턴(subaltern) 개념은 그람시는 하위계급, 스피박은 제3세계 여성으로 범주화한 것이지만 여기서 서발턴은 서양, 파워엘리트, 남성 등의 중심으로부터 주변으로 배제되어 억압당하고 수탈당하는 타자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쓰였다. 이도흙, 2019, 『동아시아문학,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론』, 『비교문학』 77집 p.86
  16. 박성인, 박명림, 앞의 글, p41.
  17. 규범적 지역주의는 지역 내 갈등해소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공동체를 조직하고 형성하는 원칙을 세우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규범들을 조정하고 지역적 정체성과 가치를 확립함으로써 규범적 사고와 행동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서병훈 외, 앞의 책, pp. 10-11.
  18. 함규진, 2016, 「전통 동아시아 사상의 민주주의적 가능성-정약용과 황중희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통권 63호 pp.7-29.
  19. 정해정, 2017, 「민주 사회를 위한 시민교육과 한국적 인문학: 동학·천도교를 중심으로」, 『Oughtopia』 32권1호, pp.73-100.
  20. 이희옥, 2004, 「동북아 시민사회 교류와 공동체적 지역통합」,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p. 348.
  21. 양기대, 2013, 「동북아 군비경쟁과 지역통합의 대안 모색」,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33호, p.4,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14612&c=1&m=11>
  22. 임우경, 2007,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한국 동아시아론의 전개」, 『중국현대문학』 40호, pp.35-36.
  23. 이러한 점에서 국민국가의 폐쇄적 관점을 넘어 평화의 공존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역사상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사와 한국사 교육에 있어서 한민족과 한반도를 넘어서는 확장된 역사로서 동아시아시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동아시아사 차원에서의 한국사 서술과 한국사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 경로로서 의미를 갖는다. 김정인, 2014,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 경로로서의 동아시아사」, 『史林』 47집, pp.63-93.
  24. “中·日 역사왜곡 심해졌는데 ‘동아시아사’ 과목 폐지한다고?», 『조선일보』 2021년 11월24일,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ion-academia/2021/11/24/4D22RSCL3ZC6JAQSRE6A3E27JE/>

- 
25. 김정인, 앞의 글, p. 72.
  26.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이 공동의 역사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젠더의 시각으로 한일 근현대사를 서술한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는 이와 관련된 선구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나라 양국의 여성 역사학자, 사회학자, 활동가들 67명이 참여해 4년여에 걸쳐 목차부터 내용까지 공동 집필했다. 「한-일 여성이 함께 쓴 '질곡의 여성사'」, 『한겨레』, 2005년 11월1일. 자세한 내용은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편), 2011,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서울: 한울)을 참조하라.
  27. 이도흠, 앞의 글, pp.105-106.
  28. 박성인, 박명림, 앞의 글, p.36.
  29. 유승상, 2016, 「아시아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아시아교육연구』 17권 특별호, pp.1-4; Song, Gilsun, 2016, 「Shift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roadening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Global Events in China」, 『아시아교육연구』 17권 특별호, pp.81-105.
  30. 이동윤, 2020,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교훈: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글로벌교육연구』 12집2호, pp.85-113.
  31. 순위는 평가 대상 167개국 중 23위이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수준 지수를 산출해왔다. 미국과 프랑스가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된 것만 봐도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EIU, 2020, Democracy Index 2020: In sickness and in health?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V

---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진단

•

김동규

동아시아 시민성을 위한 시도로 우리는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이 어느 지점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에서 취약성이 갖는 중요성을 추출했고, 취약한 존재들이 살고 있는 장소성, 그 장소의 역사성을 통해 부산의 특성을 개괄했고, 거기서 부산의 아시아성과 아시아 속의 부산성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2018년~2020년 사이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바람, 부산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보고 그리고 최근 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현행 민주시민교육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이 연구의 결론인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안으로 이어질 마지막 사전 작업에 해당한다.

## 1.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바람

부산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꼽은 것은 다음과 같다. 시민의 합리적 비판의식 함양, 연대적 공감과 공존의 감수성 획득, 현대의 민주주의 등을 통해 권리 없는 소수자들을 존중하는 것, 지역과 국가의 전통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민주적 전통과 지구적 정의를 조화시킬 수 있는 것 말이다. 이는 보편성과 다양성 또는 차이에 대한 감각을 키우려는 것이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아우르는 민주시민역량을 함양하려는 것이다. 앞서 강조했듯,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감수성(감각성)을 동시에 기르는 교육이어야 하며, 미래의 민주적 비전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 연장선에서 부산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 1) 근본 가치(평등, 자유, 주권, 정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
- 2) 민주시민성의 기본 역량(의사소통능력, 타인에 대한 인정과 배려, 공동체성 등)에 대한 교육
- 3) 장소성과 민주주의(지역, 국가, 지구)에 대한 교육
- 4) 민주주의 제도(독재, 숙의, 선거 유형, 시민 참여 유형, 저항권, 헌법과 권리, 민주주의 제도 내 다양한 하위 제도 등)에 대한 교육
- 5) 다양성과 소수성(장애, 젠더, 난민, 이주민 등)에 대한 교육
- 6) 다른 영역과 민주주의와의 연계(경제 민주화, 환경과 민주주의, 동물권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생태주의, 생명권과 민주주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 등)에 대한 교육.<sup>1</sup>

이러한 교육 내용을 담아낼 방식과 체계에 대해서 부산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언급한 내용도 3장에서 언급되었다. 그 내용을 이전에 제안된 「부산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과 연결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sup>2</sup>

「부산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이

수행되는 방향성을 우선 수렴형과 발산형 그리고 이 둘을 매개하는 매개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그 보고서에서 제출된 인간의 역량과 연결시켜보자. 세 가지 분류에 역량이 개입되는 이유는 수렴과 발산 그리고 매개의 교육에 시민의 종합적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 수렴형에 지성의 역량과 감성의 역량에 더하여 교육에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신체적 역량이 포함될 수 있고, 2) 발산형에는 지성과 감성 역량을 실제로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 매개형은 1)과 2)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도 인간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교육의 수렴과 발산을 매개하기 위해 지성, 감성, 참여와 체험 그리고 표현과 실천의 역량 모두가 동원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소성과 사회적 관계성이라는 배경과 자원도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창출하는 소셜 믹싱이나 교육을 위한 학교 안팎의 연계성이 그런 배경과 자원의 사례에 해당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주로 지식을 습득하는 전통적 방식인 말하고 토론하는 시민의 기술뿐 아니라 의제를 생산하고, 현장의 현실을 체험하며, 나름의 의견과 표현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동시에 수직적 방법이 아닌, 수평적 방법으로, 교류와 소통을 중시하는 강의도 선호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세대, 인종, 젠더 등 다양성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셜 믹싱(Social Mixing)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한 점은 취약성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서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접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sup>3</sup>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이를 위해 기존의 1회성 이벤트성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반대로 상설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 필요하다는 욕구를 표출했다. 그래서 기관 및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교육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지역 내부의 각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청과 교육청, 대학, 시민단체, 공공도서관, 주민복지센터, 평생학습센터, 구청문화관이 그렇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결합된 리빙랩 실험도 제안했다.<sup>4</sup>

이렇게 실행된 강좌를 더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학교 및 시민 민주주의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고,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매개하기 위한 교육사 및 교육 기획자 그리고 이런 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양성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는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나아가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가치를 가진 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의 민주적 현실성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지역의 보수단체와도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길게 놓고 고민하자는 언급도 있었다. 이 연구의 관점과 유사하게 소외계층(이주민, 난민, 장애인, 노숙인, 성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매뉴얼 확보가 시급하다는 요구도 있었다.<sup>5</sup>

부수적으로 문화적 감수성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연계되고, 재미도 가미된 민주시민교육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의견

을 일부를 소개하자면, 부산 노무현재단은 어린이청소년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이 직접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서 난민 문제를 다룬 교육 연극과 놀이를 통해 공감과 다양성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 지식이나 민주주의의 이념과 개념을 교육시키는 지식 중심의 주지주의 교육을 넘어서 인간의 다양한 역량과 연결시켜 진행된 사례는 많다.

예컨대 과테말라 인종학살을 치유하기 위한 연극교육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산타 마리아 테자 마을에 방문한 미국의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테자 마을학교 교장 선생님이 공동으로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대본을 쓰고, 마을 사람들이 그 대본에 써진 대로 연기를 한다. 연극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연극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내/외부의 거대한 연대를 형성했던 것이다.<sup>6</sup>

이와 달리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이야기한 것을 채록하고 그림을 그려서 지역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엮어서 대중화하고, 그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오래된 장소(강서구 문화창고)를 지켜낸 일이 있다. 또한 시민, 예술가, 연구자가 결합하여 <아젠다 메이커스>(2020)와 <너와 나의 만찬>(2021)이라는 민주시민교육 보드게임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지식 중심의 교육일 필요가 없으며, 딱딱하고 지루한 정치교육에 한정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민주시민교육이 인간의 총체적 역량과 결합되면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여 진행될 수 있다. 나락한알과 과테말라의 사례는 그중에서도 문화예술을 매개로 진행된 민주시민교육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려면 어떤 장소가 필요할까. 부산의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그 장소가 2원적 모델로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한 편으로 민주시민교육에 특화된 전문공간을 활용하여 그 공간에 특화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다른 한 편으로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복지관, 학교, 마을의 공공장소 등 접근성 좋은 지역의 건물과 장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 친화적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는 이론교육과 체험교육, 추상적 교육과 구체적 교육, 지적 역량의 함양과 감성-감각적 역량 강화 등 다방면의 인간 역량의 함양을 위해 개인의 자부심, 자율성을 통한 주권적 시민의 탄생 및 타자와 소수자를 인정하고 환대하는 다양한 기회와 체험을 확대하여, 이를 기반으로 피교육자가 매개자가 되고 새로운 교육자가 되는 순환성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구체적으로 부산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외국인 혐오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자료와 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의 관련 단체가 연대해야 하며, 이 연대를 실질적으로 꾸려갈 실무진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도달했다.

이런 주장을 고려한다면, 부산에는 부산의 장소성을 담고 있는 탈핵 운동, 젠더 차별 반대 운동, 세균 실험실 반대 운동 등 꽤 강렬하고 유명한 운동이 있었지만,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자만 관심을 가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폭발력이 늘 아쉽기도 했다. 이런 폭발력이 있더라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역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문제를 민주시민교육이 그 긴장감을 충분히 연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고유한 과제이면서, 지역의 민주적 소통과 미디어 공론장의 문제를 새롭게 고민하도록 자극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 2. 기존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한계

그동안 여러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위 바람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을까?<sup>7)</sup> 우선 타 지역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분석해보자. 이 조례들이 우선 민주주의 가치와 기본원리 표명할 때, 교육내용과 범위에 국가와 지역 그리고 지구적 가치를 거론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지역 정체성(국가, 시-도, 구-군)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지구적 보편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민주적 정체성을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시민의 주권성 그리고 권리와 책임 의식 함양, 시민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때, 지켜야 할 유의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 1) 편파성 금지(불편부당한 내용), 2) 제압 금지, 3) 다양한 의견 존중, 4) 공익지향, 5) 보편적 접근성(다양성, 공익성, 개방성, 자발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을 누가 받아야 할까? 실제로 대부분의 조례는 지역 시민, 즉 내국인만을



거론한다. 광명시와 김해시만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자로 지역 외국인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은 독특하다.

여기서 보이는 문제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 즉 헌법이 갖고 있는 국가주의적 성향과 보편적 인권성 사이의 문제가 서로 모순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여기서 누가 시민인가?” 하는 질문에 대부분의 조례는 지역 거주 내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 시민이 아니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한때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을 시도했을 때,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 했었던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민이라는 말이 주는 예측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국가와 국적이라는 범위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나 시민이라는 말 대신, 지역 거주민으로 말을 바꾸면 되는 것일까? 그래서 내국인뿐 아니라 이주민, 난민, 외국인 등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한국인이란도 지역 바깥의 시민이 한시적으로 부산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더라도 민주시민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해 두어야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 모든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각 지방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언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보편적 접근성과 참여의 개방성이” 정당하게 만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민주시민 교육조례에 언급된 민주시민교육 운영 조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각 지방의 조례는 시장 또는 구청장과 같은 지자체 단체장, 운영위원(광명시, 김해시, 부산시)

또는 자문위원(경기도, 서울시,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도봉구, 전라북도,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담당 공무원을 언급하고 있다. 그 조례들은 시장 또는 구청장의 역할도 구체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자체 단체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의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특이하게 광명시만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으로 분리해서 시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어서 담당 공무원은 교육을 위한 행정 지원, 이를 위해 전보를 최소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운영을 위해 1) 목표 설정, 추진계획 및 교육 방법 수립, 재원 조달 및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이어,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온-오프라인)를 지원하고, 3) 지역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광명시), 타 지역과의 연계 및 교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끝으로 4) 교육을 운영할 주체는 지역 단체가 위탁 운영한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운영된 민주시민 교육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2) 지방 분권 정치에 대한 참여 교육과 생활민주주의 교육, 3) 민주적 역량과 자질 함양(물론 대부분 토론, 결정, 갈등 조정, 문제 해결 중심이다.),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에 관한 교육,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끝으로 이런 교육이 모두 진행되고 나면 4) 이수증 또는 수료증 발급 및 포상(민주시민교육 관련 공로가 있는 단체에 상을 수여)에 대한 규정도 있다.

이렇게 진행될 민주시민교육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조례를 위탁 운영할 단체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조례의 실질적 사문화 방지를 위함인데, 현재 부산은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이 일을 맡고 있다.
- 2) 관련법들과의 실질적 연계가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법교육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 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 3) 토론과 의사소통적 합리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합리적 발화의 장애(disability)를 가진 사람들이나, 지적 역량이 뛰어나지 않는다고 간주된 사람의 참여가 배제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권리에서 배제된 소수자와 약자의 다양한 참여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 부산은 문화다양성 조례가 있으니 이 조례를 참조하여 부산의 민주시민교육조례 중 문화 다양성 조례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서로 조율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적 도시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선진적 인권조례도 참고하여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더 잘 다듬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 조례에 나오는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명시적 언급과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방법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발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존재나 발언권을 갖지 못해 배제된 존재들이 내세우는 민주적 참여 문제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차별을 금지하는 민주적 공공성의 원리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새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sup>8</sup>

4) 합리적 의사소통을 넘어서 감수성 교육과 감각 교육 등 좀 더 다양한 인간의 역량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에 활용되어야 한다. 문화 민주주의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생활문화 조성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식의 보급과 상호 토론을 넘어선 공감 교육이나 다양한 체험의 제공, 나아가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성남시와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조례 7조 6항 3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 각성, 시민 위상 강화 등에 관한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 학습을 비롯하여 강연, 학술대회, 회의, 축제, 박람회, 전시회, 연수 여행, 경연, 영화 세미나, 문화이벤트, 언론 연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나 김해시는 방금 언급된 다양한 사례들이 초안에는 언급되었다가, 확정안에서는 누락되기도 했다.

5)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가 각 조례에서 누구인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일까? 시장인가? 구청장인가? 운영위원회인가? 자문위원회인가? 자문위원회는 그 명칭상 결정권

자가 될 수 없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례에 자문위가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조례의 운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시민이나 시민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한 시민이나,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부산은 분명 자문위원회의 수준을 넘기고 있으나, 실제로 구성된 초대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해산했다. 결국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결정권은 지자체 장이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아래 7)항의 결정권의 편파성 문제를 더 심각하게 부각한다.

6) 심지어 민주시민교육조례에 정작 시민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 조례 거의 전부가 이렇다고 봐도 무방하다.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이 추후 교육을 설계하거나 관련된 제도의 운영과 실행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은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질적 제도와 교육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직접 실현해보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현재 만들어진 조례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7) 결정권자의 편파성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이 편파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례의 내용을 위배할 수 있는 요소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의 위촉이 지자체 장에 집중되어 있을 때, 다

양한 편파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자체 장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결정권을 지자체장이 행사한다면, 마땅히 그런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하는데, 정작 각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에는 그런 결정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실질적 결정권은 시민 추천과 요구, 운영위원회의 검토, 시장의 결재와 같은 상향식이 조례를 통해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지역성과 의회의 성향에 따라 조례의 내용과 강도가 조절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지역의 비민주적 풍토나 성향을 고려하여 조례의 내용과 강도가 조절된 것인데, 이는 편파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이 문제 역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 8) 교육 장소와 장소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장소네트워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지원 차원에 그칠 일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교육을 위한 적절한 장소가 없을 경우, 장소 지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다. 예컨대 평생학습원, 도서관, 학습지원센터, 지역 문화센터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장소를 네트워킹하면 지역 방문형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기 용이하다. 이는 현장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이자, 생활 기반형 풀뿌리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이나 학교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직-간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도 좋다. 우리는 이런 실험을 동경대의 리빙랩에서 본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지역 분산형 민주시민교육을 보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집중형 장소도 필요하다. 따라서 분산과 집중의 이원적 장소성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 지원도 필요하다.(김해시가 초안에서 언급하고 있었지만, 확정안에서는 누락되었다.)

9) 민주시민교육법 입법의 지연과 관련해 예상되는 한계도 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지자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려 할 때 문제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민주적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보자. 상위법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조례들이 새로운 법 제정을 요구한다는 현장의 절실함을 보여준다. 이런 요구에 입법으로 응답하는 것이 국가와 입법 기관 존재의 이유라 할 때,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례를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안일한 핑계라 하겠다. 이에 더하여 이런 식의 입법은 상향식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공고화 그리고 지역 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얻어낼 수 있다.

10)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개인-국가-지구 차원으로만 한정될 때

생기는 문제가 있다. 이상의 조례들이 아시아라는 장소성을 하나 같이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에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서 풀어야 할, 그리고 국제사회

나 서구 사회에 책임을 요구해야 할 아시아 차원의 모순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아시아 민주적 시민성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슈는 앞으로 부산이 여러 다른 지역과 연대하여 선도해야 할 중요한 아젠다라 할 수 있다. 아시아 없이 지역과 국가가 지구적 가치와 바로 결합하는 것은 장소성과 장소의 취약한 존재에 대한 망각이다. 아시아 없이 지역과 국가의 특수성도, 아울러 지구적 보편성도 없다. 그러므로 글로벌이라는 말은 아시아를 망각한 일종의 개념 논리적 비약이다.

### 3. 현행 민주시민교육의 한계

앞서 언급한 조례의 문제와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도 살펴보자. 한국에서 많이 인용하는 보이텔스바하 합의의 내용과 뮌헨 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공론장을 활용한 속의 민주주의에 맞게 그 내용이 조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토론 위주의 민주시민교육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의 교육은 주지주의적 성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인간의 다양한 역량발휘와 결합된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대립한다. 한국에서 모범사례로 종종 언급되는 보이텔스바하 합의와 뮌헨 선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 보이텔스바하 합의<sup>9</sup>



1. 제압 금지와 교화 금지의 원칙 : 학생은 특정 견해를 가지도록 강압받아서는 안 되며, 교육자는 학생에게 자신의 견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논쟁성 재현의 원칙 : 어떤 것이 공론장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수업 중에서도 논쟁적으로 토론되어야 한다. 즉,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교육에서도 논쟁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3. 학습자 지향 원칙 : 정치교육을 할 때, 학습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특정한 정치 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교육이 학습자를 도구화하는 것을 막아 학습자를 보호하고, 정치 교육이 자칫 정치 캠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보완 합의 : 공적 연대성의 원칙] 학습자 정치행위의 연대성 원칙  
학습자가 공적·정치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할 때는 다른 시민과 공적으로 연대하여 자신의 이익이 공적 이익이 되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sup>10</sup>

이후 1997년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치교육원이 연합하여 21세기 정치교육을 요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뮌헨 선언>이다. 이 선언의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7가지 정치교육의 방향<sup>11</sup>

1. 공적으로 위임된 정치교육은 다원적, 초당적이며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연방정치교육원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3. 연방정치교육원은 전 지구적 미래의 과제를 준비해야 한다.
4. 연방정치교육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구 동독지역에서 정치교육은 특별한 과제를 갖는다.
6. 독일 역사의 비판적 석명은 정치교육의 중심과제다.
7. 정치교육은 다양한 방법과 작업방식을 가진다.

#### 정치교육의 방법<sup>12</sup>

1. 회합, 세미나, 포럼, 총회, 수학여행
2. 중요한 주제에 대한 출판
3. 정치교육을 위한 교재 편찬
4. 새로운 교수법 개발과 새로운 매체 활용
5. 전시회 및 경연대회
6. 정치교육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
7. 다원주의적 교육프로그램의 지원과 장려

앞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독일 민주시민교육 운영의 원칙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면, 뮌헨 선언의 정치교육 방법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민주시민교육이 주지주의적 성향<sup>13</sup>을 갖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앞서 언급된 부산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바람과도 대립된다. 토론 교

육 역시 다양한 감각과 감성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이 합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논변 교육이라는 점은 이성중심의 주지주의적 성향을 근본으로 한다. 한국의 상황은 여기서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토론 교육과 매체를 통해 접하는 토론이 대부분 논파debate라는 점 때문이다. 논파는 토론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는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주지주의적 성향의 폭이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속의 민주주의의 주지주의적 성향은 지식 엘리트 중심의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지만, 한국이 서구의 영향을 받아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방식은 서구의 속의 민주주의보다 더 협소해질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전국청소년논술토론평의당’이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론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자 업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좀 더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런 사업의 주지주의적 성향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업이 1회성 이벤트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한 다양한 지역의 사례들이 있다. 앞으로 진행될 부산형 민주시민교육 역시 이런 사례들을 적극 참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시민교육은 포괄적 역량 교육 성격을 잃어버리고 매우 협소하고 상상력 없는 빈약한 민주시민교육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진행될 민주시민교육은 감각과 감정 그리고 지성 모두를 총동원하는 총체적 역량 교육이어야 한다.

지성적 역량에 초점을 맞춘 주지주의적 역량 교육의 문제를 좀 더

살펴보자. 흔히 주지주의적 상향의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의 유능함을 계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십상이다. 지적 능력을 수량화하여 측정해야 한다는 강박은 지구적 무의식이 될 정도인데, 미셸 푸코는 설명 없이 사람의 몸에 새겨지는 권력으로 훈육 권력을 제시하고 있다. 훈육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시험’이다. 설명 없이 인간의 몸에 권력을 새기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지만, 입시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은 이런 식의 교육 외에 다른 방식의 교육을 상상하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의 지적 유능함을 계발하는 수준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유능한 사람들이 서로 배우는 수준, 다시 말해 교육의 권리를 마땅히 누릴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행해지는 교육에 그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교육의 권리를 마땅히 누릴 권한이 없는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교육의 기회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의 민주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역량의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방식을 한계의 민주시민교육으로 놓을 수 있다. 한계의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개인이 자기 입장에서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개인주의적인 민주시민교육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개인들이 자신의 한계를 더 엄밀히 점검하려면 그런 역량을 갖춘 다양한 개인들이 서로의 역량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민주시민교육을 경계의 민주시민교육으로

놓을 수 있다. 경계라는 것이 원래 하나 이상의 항이 만나서 형성하는 ‘접선’이므로, 나와 너의 경계에서 서로의 민주적 역량을 증폭시킨다는 의미로 경계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두 교육은 교육을 받을 유능한 사람과 그들 사이의 관계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취약해서 배제된 사람, 권리와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간주된 사람들의 민주시민교육을 다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가 취약한 존재에서 출발하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취약한 존재가 주체이자 주권자로 귀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식의 민주시민교육도 언급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그것을 임계의 민주시민교육으로 부르려고 한다. 임계의 민주시민교육은 취약한 존재를 통해 유능한 기존 주체가 직면하게 되는 민주적 자각이다. 임계의 민주시민교육은 한계와 경계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성장한 민주적 시민, 즉 유능하다고 간주된 민주 시민을 무능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취약성의 등장에서 출발하는 민주시민교육이다.

다시 말해 임계의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무능(disability)을 자각하는 임계점에 설 줄 아는 교육이며, 여기서 스스로의 무능과 장애를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교육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취약한 존재가 제공하는 임계의 긴장 앞에서 스스로 각성하고, 자신의 모자람과 무능을 인정하는 열림(배움)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은 취약한 외부가 제공하는 임계의 긴장에 열리고 떨리는 순간을 창조하면서 시작하는 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유능한 존재의 현실적 역량을 계발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잠재성(잠재적 역량 교육)에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sup>14</sup>

앞서 언급되었지만, 조례에도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할 때 행정의 우선시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국가와 시 행정단위의 시민만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우선시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지역 시민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사람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민<sup>15</sup>이나, 심지어 난민도 민주시민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보편성은 국가 단위의 사유와 상상력 그리고 실천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인권, 생명권, 기후 문제, 환경문제는 이미 초국적 관심을 동반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주제라는 점을 생각하자.

국가가 사람들의 필요로 만들어진 장치라는 점을 생각할 때, 민주시민교육은 국가를 넘어서 인간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 침해, 생명권의 위협, 기후 재앙과 같은 위험 앞에서 사람들은 국가를 넘어서 인간의 삶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민주적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즉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인간존재도 넘어서 상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국적 민주시민교육만이 아니라 **초인적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하다.

인간은 이제 인간을 위해서라도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상상해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민주시민교육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를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되어야 한다. 동물의 권리, 생명의 권리, 생태주의가 민주시민교육과 결합해야 하는 당위적 지점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역시 이 연구의 핵심인 취약성의 민주시민 교육과 연계된다. 즉 민주주의는 인간을 넘어선 비인간 존재의 '취약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은, 특히 관의 행정 관성에 의존해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민주시민교육은 잠재적 역량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에 맹목이다. 잠재적 역량은 가시적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정량적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음 교육을 기획하거나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지주의적 관성에 익숙한 행정은 새로운 가치와 감각을 제기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데 인색한 반면, 익히 성공을 거둔 바 있고, 다른 곳에서 실험을 거쳐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익숙한 교육만을 진행하려는 관성이 있다. 심지어 익히 배우고 터득한 것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실천하는 데도 인색하다. 이것이 결국 소모적으로 반복되거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행정보다 삶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경향에서 눈여겨볼 점은 시민이 교육의 주체로 적극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들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에 비례하여 실제로 수용자가 생산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교육 내용의 수용자에서 교육 내용을 공급하는 생산자로 변모하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더욱 중요하게 요

구되는 것은 교육의 공급과 수용을 원활히 하는 매개자의 역할이다.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소홀하다. 부산의 민주시민교육 비전에는 그런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만이 아니라 기획사의 양성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준비는 덜 되어 있다. 교육사, 기획사를 넘어 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도 점점 중요해질 것인데, 앞으로 시행될 민주시민교육에서도 이점을 매우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sup>16</sup>

다행히 최근 취약한 존재, 경계 밖에 있는 존재들에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시도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작 취약한 존재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이어지는 일은 적다. 민주시민교육이 정녕 주지주의적 방식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런 일상적 접촉 경험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여타 사업이나 실천들과 결합해보는 일이다. 예컨대 최근 지역의 문화재단이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무지개다리 사업<sup>17</sup>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사업은 취약계층과 소외된 계층을 이해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마련하고 있다. 이런 유의 사업은 낯선 존재와 만나는 가운데 자신의 감각-감정-이성 모두를 활용하여 자기 변화 및 쇄신의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이미 작동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이나 실천을 활용하여 취약한 존재와 여러 모로 만나고 접촉하면서, 새로운 민주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겠다.



결국 낯선 존재들, 배제된 존재들, 취약한 존재들과 만나면서 지역 민주주의의 역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소수성, 취약성에 대한 고려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시 접속된다. 이는 기존 민주시민교육이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없거나, 취약한 존재들과의 만남 없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취약성(vulnerability)과 무능성 또는 장애(disability)를 중요한 요소로 택했다.

인간의 합리성을 통해 인간적 삶의 진보를 믿었던 하버마스라는 사상가가 있다. 그는 이 진보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간의 합리적 의사소통, 이런 소통이 발생하는 영역인 공론장, 그리고 이 공론장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방식인 속의 민주주의를 모두 이론적으로 정당화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사실 하버마스 자신은 이러한 영역에서 가장 곤란을 겪는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입천장 열림증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하버마스는 어렸을 때 이 장애를 치료하고자 2번의 큰 수술을 거친바 있으나, 모두 실패했다. 실제로 그의 강연을 들어보면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발음은 좋지 않다. 그런 그가 자신의 장애로 차별받던 경험, 장애를 숨기려 했던 경험을 최근 어느 학술대회에서 토로한 바 있다.<sup>18</sup>

의사소통 이론과 공론장 이론, 그리고 여기에 기반을 둔 속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하버마스 자신도 배제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다. 장애와 취약성에 맹목인 민주시민교육은 결국 장애와 취약성을 배제한 차별적 민주시민교육으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다음 인용을 보자.

장애인 인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모토 중 하나는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해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주주의 모델들은 지적 장애인과 정서적 장애인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장애인은 프랭크 할러의 사례에서 보듯 추한 사람법 Ugly law으로 인해 공적 장소에 등장해서도 안 되었고, 선거권도 없었을뿐더러, 장애 그 자체의 극심함으로 인해 선거 자체를 금지당했다. 심지어 서구 정치사상 자체가 장애를 통상적으로 배제하면서 전개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심의민주주의 이론가들은 포용을 전제로 합리적인 발화 행위를 참여의 조건으로 생각했는데, 장애인들은 이러한 생각에 크고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심의민주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육체에 대한 무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민주주의는 비발화적 의사소통이라는 대안적 모델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다양한 발화 가능성을 처음부터 불가능disable하게 만들었다.<sup>19</sup>

심의 민주주의 또는 속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폭력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소수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있다. 속의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된다면, 그 민주시민교육은 정작 몸이 없는 민주시민교육이자, 그 몸이 깃들 장소마저 없는unrooted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약한 사람과 그가 있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결국 현실적이지 않은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주장만을 남발할지도 모르며, 구체적 현실을 모른 채 현실의 취약성을 고친답

사고, 최악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구체적인 몸과 장소에 기반을 두고 출발하되, 그 몸과 장소의 취약성에 중점을 두고 출발을 해야 한다. 결국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민주시민교육은 유능한 특권 집단의 민주시민 교육론에 불과하다.

몸과 몸이 깃든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몸이 깃든 장소의 복합성과 민주시민교육의 문제를 살펴보자. 흔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명사에 지역 명을 붙일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부산에서 연구하는 우리들 역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론”이라고 붙이면, 이 담론이 결코 지역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특수한 담론에 그치게 될지 모른다는 불편함을 갖게 된다. 이 불편함에 보편성을 자처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지역 차별의 기운이 어려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여자고등학교 대 ~고등학교 사이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은 특수성으로만 부각되지만, 남자 고등학교는 남고라 불리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라 불림으로써 보편성과 특수성의 자리를 모두 차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론 앞에 ‘부산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부산이라는 장소성이 다양한 특수성을 통해 보편성에 이르는 중층적인 측면이 있고, 이러한 측면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뮌헨 선언〉을 다시 끌어와서 생각해보자. 〈뮌헨 선언〉의 5항과 6항은 독일의 특수한 장소성과 결부되어 있다. 그렇다고 독일에 특수하다는 그 장소성이 독일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독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독일의 상황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유럽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국제적 냉전의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이 독일의 특정 지역에서 진행된다면, 그 교육은 반드시 교육이 진행되는 특정 장소의 특수성도 반영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독일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는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은 중층적인 장소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면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본다면 부산 역시 특정 국가의 주변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만으로 장소성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부산은 한국의 행정 영역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항구도시라는 점에서 초국적 특성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이는 항구도시의 성격이 접경지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인데, 조계지나 면세지역, 자유무역 지구가 항구에 존재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항구도시는 사람과 물류가 수렴되고 발산되는 결절점이다. 그런 점에서 항구는 관문<sup>gateway</sup>이자 전초기지다. 항구도시의 이런 특성 때문에 부산은 일제 강점기에 동아시아 제국주의의 모순을 품고 있던 강제 개방되었던 동아시아 대표적 식민지 근대화 도시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항구도시의 관문성은 아시아적인 것, 지구적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부산과 인근의 로컬한 가치와 한국의 국가적 가치를 외부로 토해내는 이중적 활동의 결절점과 결부된다.<sup>20</sup>

장소가 이처럼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장소성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론에서 장소성은 매우 복합적인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산이라는 장소성은 ‘중앙/지방’이라는 국가주의적 이분법을 타파하여 장소 다양성의 문제를 국가에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장소 개념이 갖는 중앙집권성을 비판하고, 그 비민주성을 극복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부산의 장소성을 이런 식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지방 소멸시대의 모순을 넘어서기 위한 시도와도 결부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서울과 수도권을 지방화하려는 전략과 연결됨으로써 장소 민주주의의 실천과도 결부될 수 있다. 이는 장소성 관점에서 시행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이자, 상향식 민주주의다.

아울러 부산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부산이라는 행정권 단위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장소와 몸에 친화적인 지역은 행정이 아니라 일상적 삶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론도 행정 단위의 상상력을 벗어나 지역 사람들의 삶과 생활의 단위로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장소성에 기반을 둔 민주시민교육 역시 차이와 다양성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론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산은 중층적 장소성이라는 차이의 결과 다양한 모순들이 교차하는 결절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부산은 국가의 특징과 (동)아시아의 특징 그리고 지구적 특징을 동시에 배태하고 있는 장소다. 이런 장소성이 민주시민교육에 투입되려면,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종축과 횡축을 그어보면 된다. 종축은 부산을 중심으로 “부산 내의 작은 지역<sub>local</sub>-부산지역<sub>city</sub>-한국이라는 국가<sub>nation</sub>-(동)아시아 권역<sub>regional</sub>-지구<sub>global</sub>”로 분류할 수 있겠고, 횡축은 각 지역 단위 사이의 관계, 즉 지역 간<sub>interlocal</sub>, 도시 간<sub>intercity</sub>, 국가 간<sub>international</sub>, 권역 간<sub>interregional</sub>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이 교차점에서 취약한 존재의 주권

성을 생각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장소적 민주시민교육은 초국적 차원이자 중층적 장소성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몇 년 간 자주 언급되었던 글로벌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권역regional의 특성과 모순을 무시한 채 성급히 지구적으로 비약한 결과 고안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권역에 대한 고려 없이 로컬이 곧장 글로벌과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권역은 지구상에 서구밖에 없을 것이다. 아시아는 북아메리카를 포함한 유럽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 아메리카와는 전혀 다른 상처와 모순을 안고 있는데, 지역을 바로 지구와 연결시키면 이 문제와 모순에 직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순을 해결할 수조차 없게 된다. 덕분에 아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많아도, 이 문제를 아시아 단위의 문제로 상정하지 못하고,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엄두조차 못 내게 된다. 심지어 로컬과 글로벌로 양극화된 비약적 장소성은 그런 점에서 중심(지구적 보편성)과 주변(지역적 특수성)의 구도를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비민주적 권력구조를 배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치유해야 할 동아시아의 상처들이다.

#### 4. 동아시아 민주주의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

앞서 아마티아 센을 인용하며 언급했듯, 민주주의는 서양의 발명품이자, 수입품이긴 했지만,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는 정작 지

금의 서구가 아닌 오리엔트 지역을 바라보며 활발히 교류/갈등했다. 심지어 그리스에서 발명된 민주적 제도가 오리엔트에서 꽃을 피운 흔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민주주의와 유사한 절차를 가진 다양한 제도와 정신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국과 아시아에도 나름의 민주적 삶의 방식이 있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동학의 접과 포(공공성), 정조 이후 민의 개념이 강력해지는 자생적 흐름<sup>21</sup>, 형평운동과 같이 취약한 존재(백정)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기존 체계를 전복(의 임계를 부여)하려던 역사적 과정도 있었다.<sup>22</sup> 쑨원의 삼민주의와 일본의 아주화친회 등 동아시아적 교류의 영향 하에서, 한국에서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등장했다. 이 삼균주의는 추후 대한민국 헌정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의 사용으로 이어진다. 한국 민주주의를 독립운동에서 찾는 견해도 여기에 근거한다.(3장) 하지만 한국 헌정의 근간에 동아시아의 흔적과 지구적 흔적이 동시에 새겨져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삼균주의는 경제, 정치, 교육의 균등을 기조로 한 것으로, 조선말 토지제도 문란+일제수탈의 극복을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래서 권리 균등, 보통선거제, 토지국유화, 국내생산기관의 국유화를 거론하고 있고, 이를 통해 균형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목표였다. 아울러 균등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국가에 맞는 시민들을 교육하는 것을 중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견해에 당시 동아시아의 모순과 국제적 모순을 동시에 극복하려는 의지도 개입되어 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도 거부하고, 공산주의도 거부하면서 제3의 사회적 민주국가를 구상하려 했기 때문이다.<sup>23</sup>

한국의 건국정신에도 이처럼 동아시아적 모순과 국제적 모순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에는 동아시아만의 모순들이 있고, 이것을 그저 서양의 해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 아닐까. 동아시아에는 동아시아만의 민주적 해법이 있다. 앞서 보았듯 동아시아는 서구와 다른 동아시아만의 굴곡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역외 식민지를 경영했던 서구 제국주의와 달리, 동아시아는 역내 식민/제국주의의 경험을 갖고 있다. 아울러 유교 및 불교 그리고 한자 문화권에 오래 있었지만, 이것이 이후 서구와의 대결을 통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기도 했다.<sup>24</sup> 이런 상황 때문에 서구의 민주주의를 수입해서 그대로 이식하는 것으로 국가의 문제나 아시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제출된 민주시민교육에는 동아시아 단위의 민주시민교육을 고민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바라는 민주시민교육에도 동아시아 장소성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자.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은 지역과 지구적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할 퍼즐이다. 최근 동아시아 역사마저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사라진만큼(4장), 동아시아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민주적 시민성과 평화적 공존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동아시아성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및 연관성에 대해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는 아시아가 민주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이를 민주시민교육이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 부산의 민주시민교육도 이를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아시아 민주시민성과 연대를 위해서라도 동아시아의 평화적 연대와 시민성을 기본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다.

다소 거칠지만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을 유도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모순을 배태하고 있는 취약한 존재들을 신화적 폭력, 자본의 폭력, 신체적(생명) 폭력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분류해보았다.

#### 동아시아 서발터니티 1 : 인종-민족의 신화적 폭력

식민자(일본), 식민지민(대만, 조선), 반식민지민(중국), 소수인종(오키나와인, 아이누인, 대만 토착민, 만주족, 몽고족, 백색러시아인, 중국 내 소수민족)/ 주한미군(미군정), 주한소군(소군정), 유엔군, 중공군, 망명인, 이주민(디아스포라), 난민(비국적자, 무국적자), 피난민(이북), 월남민, 수복민, 탈북민, 포로(반공, 친공, 중립국), 빨갱이, 간첩, 스파이(제5열), 부역자, 좌익분자, 반동분자, 비전향 양심수, 외국인, 귀환자, 히키아게샤(인양자), 잔류민(중국 잔류 일본인, 러시아 잔류 일본인), 재만조선인(조선족), 재일조선인(자이니치, 오키나와의 조선인), 아시아 외 이주민과 난민(예멘 등), 소수종파 등

#### 서발터니티 2 : 자본적 폭력

하위 계급들(노동자-물질/비물질, 농민-자소작/빈농, 날품팔이, 일고, 단순노무자, 무직자), 하위 계층들(빈민층, 생활보호대상자, 흠

리스-노숙인, 녕마주이, 부랑인, 재활용품수집노인), 직업별 차별자들, 산업별 차별자들, 학력별 차별자들, 지방·지역 구분에 따른 산업별 차별자들(이주노동자) 등

### 서발터니티 3 : 신체적(생명) 폭력

젠더소수성(기생, 예창기, 작부, 가라유키, 카페여급, 주모, ‘군위 안부’, 윤락녀, 공순이, 차장, 비현모, 비건모, 비요조숙녀, 미혼모, 과부), 장애인과 병자(구체적인 장애별 그리고 원자병자와 한센병자), 정신병자(비정상인), 노인, 아이, 행려병자, 홈리스, 고아, 부랑아, 내선결혼·대내공혼·일만(일본사람과 만주사람)결혼 및 여성·혼혈아/인, 한미간 혼혈아/인(흑인 혼혈) 및 입양아/자, 미성년자 소년, 청년, 학생 등.

위와 같이 배제된 존재들은 오랫동안 없는 사람 취급 받거나 노골적인 혐오의 대상이었다. 부재 취급당한 취약한 존재들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장소성을 민주시민교육이 주체이자 주제로 적극 받아들이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민주적 가능성을 펴 올리는 일이다. 아시아의 민주시민교육은 이 빈칸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에 따라 완전히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앞으로 이 취약한 존재들을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환대하느냐에 새로운 아시아적 가치가, 그리고 새로 발명해야 할 아시아의 민주적 공공성이 잉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결과에 따라 아시아는 전혀 다른 장소 regional가 될 것이다.

서구의 기준으로 부재하던 것을 찾아 나가는 것, 아울러 동아시아

내부적 기준으로도 부재하던 것들을 찾아 나가는 다중적 발굴 작업이 민주시민교육에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이처럼 부재 취급받는 존재들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론하는 서발터니티는 바로 이 부재성과 취약성이 결합한 존재들의 특성이다. 그렇다면 서발터니티는 가시적으로 존재하지만 차별당하는 존재와 달리, 비가시적이면 부재하다고 간주하여 더 극심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명명하는 개념이 된다. 그런 점에서 서발터니티는 그냥 일상적으로 한두 번의 차별의 경험해본 내 옆의 평범한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취약성을 중시한 우리 연구가 최종적으로 서발터니티와 민주시민교육으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제안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서발터니티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서 출발하며, 이런 교육은 새롭고 다양하면서도, 동시에 통일적인 장소성과 시민성을 낳는다.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보편성을 우리는 앞서 구체적 보편성이라 부른 바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시민교육은 현실에 기반을 둔 구체적 보편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부산 안에도 동아시아성과 지구성을 갖춘 서발터니티가 존재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서발터니티 문제 역시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연대와 지구적 연대를 요청한다.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민주적 연대는 인간존재의 수준도 넘어선다. 예컨대 부산은 최근 대저 대교 건설문제로 시끄럽다.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음성을 살펴보면, 다리를 짓는 일이 인간만을 위한 일임을 알 수 있다.<sup>25</sup> 부산의 을숙도를 거쳐 가는 수많은 겨울 철새들도 자신들이 징검다리처럼 거쳐 가야 할 습지들 때문에 한국 지역 간 연대를 필

요로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시베리아나 몽골 습지까지 가는 철새들을 위해 동아시아 국가 간 연대를 필요로 한다. 철새의 안전한 이동은 지역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다. 가장 취약한 존재가 가장 크고 든든한 민주적 연대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가장 취약한 비인간 존재가 인간존재에 가하는 임계의 긴장은 새로운 민주적 연대를 요청하는 절박한 호소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response) 하지 못한다면, (인간존재와 비인간존재를 포함하여) 부재 처리된 존재는 생사여탈의 치명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치명성이 인간에게도 이를 것이다. 이는 결국 아시아 민주주의와 지구적 민주주의의 실패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소적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힘들의 길항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므로 동태적일 수밖에 없다. 누가 장소를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누가 장소를 폐쇄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장소성은인들의 삶과 의미가 공간으로 관철된 결과물이다. 그런 곳에 아직 의미를 갖지 못한 존재로 간주된 취약한 부재자, 즉 서발턴이 있다. 그런데, 장소의 정치가 이런 부재성을 드러내지 않는(부재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 아닌)다면, 민주시민교육은 추상적 보편성에 그치는 민주시민교육(서구 민주주의를 그대로 수입해서 가르치는 민주시민교육, 한국의 민주적 전통을 장소성 없이 모든 곳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시민교육)이 되고 말 것이며, 장소 없는 민주주의(unrooted democracy)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는 오만에 사로잡힌 유능한 민주시민교육에 불과하다. 이런 교육이 모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십상이다. 하지만 우리 연구가 보고 있듯, 이런 교육은 단지 특수한 사람들을 위한 특권적 민주시민교육에 불과하다. 감히 말하건대, 이런 전제로 출발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작 민주주의의 명패를 단 전체주의 교육의 새 이름일 뿐이다. 이와 달리 부산형-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은 부재와 취약성에 기반을 두고 출발하고자 하며, 이러한 시도에서 부산형-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은 새로운 동력과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 5. 서발터니티와 해방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각 지역마다 기록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와 역사가 있다. 부산의 취약한 존재, 즉 부산의 서발턴은 한국의 서발턴이자, 동아시아의 서발턴이며, 지구적 서발턴이다. 누가 이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되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자리를 돌려줄 것인가?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이에 응답하기 위한 한 방편이다. 취약성, 식민성, 장소성을 망각하고 작동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대답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응답한다고 하더라도 무해무익한 추상적 대답에 그칠 것이며, 기존 폭력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무능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것이다.

인간이 배고픔에서만 해방되면 정녕 그 인간은 해방된 것일까? 인간의 취약성은 배고픔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차별과 멸시와 혐오는 인간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요소이지만, 배고픔을 해결

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어쩌면 진정한 인간적 삶과 해방에 대해 감히 답하려고 하는 한 가지 방편 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민주시민교육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같은 주지주의적 수준을 과감히 넘었어야 한다.

“해방은 사회 분석에서 도출될 수 없습니다. 해방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sup>26</sup>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해방은 이성적 분석을 통한 논리적 귀결이 아니라는 말 아닐까. 통상 분석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분석이라는 것은 이미 고안된 기존 개념과 도식을 적극 활용하는 지적 활동에 다름 아니다. 그런 분석을 통해 얻는 해방은 이미 ‘기존’의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개량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새로운 것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해방은 이미 ‘과거’의 포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해방은 기존의 것<sup>existing</sup>, 이미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유-감정-감각의 실천이다. 이런 식의 해방을 통해 새로운 화해가 탄생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우리의 힘으로 이 화해를 창조해나가는 것이며,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답이 도출된다. 해방은 “존재하는 것(기존의 것) 너머를 사고하는 인민의 역량에서 탄생하는 것”이라고. 기존의 것을 넘어서기 위해 취약하다고 부재 처리된 부재자들을 존재자로 모시고,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그를 다시 모시는 것, 이를 통해 나의 폭력과 나의 무능을 인정하며,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 이 상상의 새로운 장소와 관계를 위해 과감히 내 자리조차 물리는 것이 해방이라면, 민주시민교육은 이런 확대와 해방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는 주권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교육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존의 것에 간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기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를 떨리게 하는 그 취약한 타자를 환대하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기존의 관성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외부로 배제되고 추방된 취약한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내가 떨리고 열리는 전율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해방은 너의 침입으로 내가 떨리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환대의 결과물이다. 진정한 지구적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위해서라도 부산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민주시민교육은 여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1. 김동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설문: 각 단체가 바라는 민주주의교육」,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 자료집』, 2019, 49-57쪽 참고.
2. 이 도식과 수렴형과 발산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동규, 5장 「부산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부산인재평생교육원, 2019, 89-90쪽. 이 보고서는 그 자체 민주시민교육의 수렴과 발산의 순환성을 위한 보고서이므로 매개형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교육사 양성과 기획사 양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개 인력 양성의 문제정도는 논의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사를 양성하는 데 그치지만, 이 연구는 교육을 기획하는 매개점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김동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설문: 각 단체가 바라는 민주주의교육」,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 자료집』, 2019, 49-57쪽 참고.
4. 김동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설문: 각 단체가 바라는 민주주의교육」,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 자료집』, 2019, 49-57쪽 참고.
6. 김동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설문: 각 단체가 바라는 민주주의교육」,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 자료집』, 2019, 49-57쪽 참고. 이러한 제안들 중 일부는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중장기 비전에 반영되었고, 현재 부산시에서 실행하고 있다.
7. 자세한 논의는 Jeffrey C. Alexander, *Trauma: a social Theory*, Polity, 2012, p. 20을 참고.
8. 각 지역조례의 공통내용 참고 지역.(경기도, 전라북도, 서울시,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성남시, 김해시,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도봉구)
9.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에 대해서는 김동규, 「장애와 역량적 접근 그리고 공공성의 변증법」, 『한국문학논총』 79, 2018, 20-23쪽 참고. 수 스웬슨과 찰리 스웬슨의 사례를 참고.
10. 홍윤기 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민주청서 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233쪽 참고.
11. 홍윤기, 「민주시민과 민주시민교육」,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정기 포럼 자료집』, 2018, 13쪽.
12. 홍윤기 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민주청서 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247쪽 참고.
13. 홍윤기 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민주청서 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251쪽 참고.
14. 여기서 언급하는 주지주의 교육이란, 지성 역량의 증대와 지식의 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또는 합리성과 이성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15. 이에 대해서는 「부산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9, 89쪽을 참고.
16. 미등록 이주민을 예전에는 불법체류자로 표현하였다. 하지만, 사람이 불법일 수 없다는 이의제기로 미등록 이주민으로 부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은 차별발언에 해당한다.
17. 김동규, 「부산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9, 105쪽, 107쪽, 116쪽 참고.
1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다양성 아카이브(<https://cda.or.kr/>)를 만들었고 여기서 무지개다리 사업을 주관한다.



19. Stacy Clifford, "Making disability public in deliberative democracy",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Vol. 11, 2, 2012, p. 222 참고. 또는 김동규, 「장애와 역량적 접근 그리고 공공성의 변증법」 『한국문학』 79집, 2018, 18쪽 참고.
20. 항구도시의 이러한 면면과 부산의 특징을 '임계' 그리고 '취약성'과 연결시킨 논문으로는 김동규, 「완월동과 항구 도시의 임계」,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참고..
21. 송호근,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11과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나남, 2013을 참고.
22. 아마트티아 센(이상환, 김지현 역), 『정체성과 폭력: 운명이라는 환영』, 바이북스, 2009, 103-103쪽, 140쪽, 263-268쪽 등을 참고.
23. 이에 대해서는 서희경, 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봄호 제30권 제1호 통권 10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85-86쪽 참고.
24. 김동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설문: 각 단체가 바라는 민주주의교육」,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 자료집』, 2019, 49-57쪽 참고.
25. 최근 이렇게 국가를 넘어선 접근, 그러나 지구적 접근보다는 협소한 접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복잡한 모순과 이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만의 해법, 그리고 서구와의 차이점을 월터 미놀로는 포스트 옥시덴탈리즘으로 축약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월터 미놀로(이성훈 역), 『로컬 히스토리 글로벌 디자인: 식민주의성, 서발턴 지식, 그리고 경계사유』, 예코리브르, 2013을 참고. 그리고 아시아라는 권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접근을 개념화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마루카와 데쓰시, 『리저널리즘 동아시아의 문화지정학』, 그린비, 2008을 참고. 푸코, 데리다, 하버마스, 테일러 등 서구 진보 이론들이 식민성에 맹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터 미놀로의 같은 책, 55쪽, 120쪽, 127쪽, 133쪽, 139쪽, 147-9쪽, 199쪽, 206쪽 참고.
26. 이와 관련된 영상은 다음을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pK8HrBMsP00>
27. 아사드 하이드(권순욱 역), 『오인된 정체성: 계급, 인종, 대중운동, 정체성 정치 비판』, 두번째판, 2021, 14쪽.



# 결론

---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안

이번 연구는 사실상 부산형 민주시민교육론의 기반을 만드는 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적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시민성의 기반을 만드는 일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이 결론의 부제가 ‘제안’이듯,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이 연구의 완성이 아니라, 연구의 출발선을 마련한 것으로 주시 좋겠다. 책의 제목도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모색과 전망이니, 필자들은 앞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촉구하며, 나아가 그 연구들이 하나의 체계로 종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선 내년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시민성 구현과 관련된 국제교류와 교육의 사례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성과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다음 해에는 1년 차의 연구와 2년 차의 연구를 종합하여, 초보적이더라도 『동아시아 시민성과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안)이라는 체계화된 연구가 제출되는 상상을 해본다.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서대 중국연구센터는 이런 바람을 위해 1차 연도 연구 개발을 맡아 진행하였는데, 이후 이어질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다.

- 1)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보편적 제안
- 2) 민주시민교육 방식을 위한 제안
- 3)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이 아시아 민주시민 연대와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를 놓는 제안
- 4)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이 제도화되어 안정적 체계를 갖출 수 있

## 기 위한 제안

우선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보편적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이 진정 모든 사람들의 통치가 되기 위해서라도 취약한 존재의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적 가치를 위해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구체적인 장소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역시 이러한 장소성과 그 장소에서 주권자로 귀환하는 취약한 존재의 주권성에서 출발한다. 셋째, 민주시민교육이 모든 사람들의 주권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약한 존재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자각하는 각성과 깨달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존 권리 주체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배제된 존재로 열리는 자기 트임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주권성과 시민 된 책임성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은 이성 중심주의 교육이라는 단편적 측면을 넘어 인간의 다양한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자신이 열리는 각성의 경험이 머리로만 이루어진다면, 주권자의 삶은 변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힘들다. 다섯째,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수평적 관계를 맺어야 하며, 장소의 위계와 식민성을 타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부산에서 출발하여 국가와 아시아를 넘어 지구에 이르는 수직적 장소성을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다.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수평적 장소성과 수직적 장소성을 모두 고려한 결절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서도 이전의 민주시민교육과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데,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첫째, 이성적 역량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아닌 다양한 역량에 초점을 맞춘 다양성 교육이어야 한다.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사람들의 역량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시행되어야 하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잘 수용되어 자신의 역량으로 최종 발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위해서 둘째,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권위적이거나, 주입식인 일방형 교육을 탈피해야 하며, 다양한 시민 참여의 통로와 방법이 개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일상의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단위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하며, 장소의 수직성과 수평성을 고려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든든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셋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공급하고 매개하고 수용하는 선순환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공고히 하되, 공급이 매개와 수용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전문가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하고 교육의 매체와 방법을 정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다. 배우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과정을 매개하는 기술도 배우는 사람이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넷째,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일상에 기반을 둔 활동가의 현장연구와 학술연구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 연구의 결과가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장의 상황이 연구에 반영되고, 연구의 결과가 현장에 개입하고 교육에 활용되는 순환구조의 창출과 공고화 역시 중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기획하고 축

진하는 활동가의 환경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도 풍부해질 것이다.

이어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론은 동아시아 민주시민 연대와 동아시아민주시민교육 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이 네트워크가 전국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활성화하여, 이 네트워크가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둘째, 현재 각 시민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운영형태를 조사하고 이를 더 체계화해야 한다. 이 연구가 취약한 존재에 주목하면서 그 연구의 비전으로 동아시아 시민성을 촉구했던 이유가, 동아시아 소속 국가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아시아적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세 번째로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동아시아 서발터니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의 민주적 평화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 가야 한다. 동아시아의 취약한 존재들을 환대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동아시아 시민의 민주적 연대가 진정한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활력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 모든 일을 위해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동아시아 민주시민 연대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담당하고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독립적-자율적 기구창설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반드시 동아시아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안에 상술한 제안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

산형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시민교육 제도의 입안, 운영, 개선과 관련된 결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형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둘째, 행정 우선이나 행정 편의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다양한 표현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성과주의, 정량적 측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의 안팎을 아우를 수 있는 주권자를 교육한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운영 주체인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참여가 가지는 활력이 성과를 통한 정량적 평가를 주로 하는 행정의 관성에 포획돼버리면, 민주시민교육은 원래의 자율성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경직되고 말 것이다.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그러한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약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한 존재들과 접촉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열어야 한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이 새로운 다양성(취약한 존재의 환대)을 통해 더욱 역동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활력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지속 가능하게 실행하고 운영(기획, 교육, 연구, 연대, 집행)할 수 있는 종합적 기구 마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 기구는 장차 동아시아 시민의 민주적 연대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부산만 살펴봐도, 부산에는 참으로 다양한 상흔이 새겨져 있다.



근대 초기 부산은 강제 개항을 당했으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되면서 혼종의 식민지 도시로 성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했다. 제국주의로부터의 고통이 치유될 시간과 여유를 찾기도 전에 한국전쟁의 발발로 부산은 수많은 피란민과 전쟁포로들을 받아야 했다. 이로써 부산은 이방인의 도시, 소위 서발턴의 도시로 근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러나 이후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로서 개발의 봄에 편승하는데 그 과정에서 도시의 빈민들이 혹독한 고통을 겪는 도시가 되었다. 성찰의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던 부산은 이방인과 서발턴을 받아내던 도시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듯, 취약한 존재에게 무척이나 가혹한 도시로 변모되었다. “크고 강한 부산”이라는 슬로건은 이러한 의심을 확증시켰던 셈이다. 작고 약한 존재들에게 부산은 어떤 모습일지 쉽게 상상이 간다.<sup>1</sup>

하지만, 이미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통과시킨 마당에 현시점부터라도 부산이 해야 할 일들은 이전의 관성과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제 부산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취약한 존재들을 주권자로 다시 모시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50대 남성 가부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부산에서 즐겁고 행복하며, 자신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제 몫을 해야 한다. 제국주의 시절 온 동아시아에서 부산으로 온 사람들, 해방 후 귀환한 사람들, 전쟁을 피해 온 사람들, 경제개발 시기에 부산에서 꿈을 펼치려 했던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정착하면서 어떤 방해도 없이 스스로 ‘부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국제도시 부산의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이 일을 민주시

민교육이 할 수 있다.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가혹한 도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산의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게 기여할 바가 있다. 지방 소멸의 시대, 노인과 바다라는 멸칭을 넘어서 부산이 작고 약한 존재들과ダイナミック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부산의 시민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되찾아 줄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부산에 절실하다. 이러한 부산형 민주시민교육이 만들어지면 동아시아 시민성 구현을 위한 동아시아 민주시민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 연구가 그 상상력에 작은 힘이나마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란다.

---

1. 실제로 부산의 민예총에서 부산시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크고 강한 부산의 슬로건에 반하여 작고 약한 문화예술인의 문제를 묻는 인터뷰 내용이 있다. 다음 영상의 10분 18초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youtube.com/watch?v=MtKTTyxK6ZQ>



## 참고문헌

- 게오르크 W. 프리드리히 헤겔, 『미학』 1권, 두행숙 역, 1997.
- 경상남도경찰부, 『고등경찰관계적록』, 1936.
- 곽귀병, 「총체적 기관 안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미시사회학: 부산 형제복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9-2, 2019.
- 구모룡, 「방법으로서의 부산」, 『한국학연구』 제19권, 2008.
- 구지영, 「동아시아 해항도시의 이문화 공간 형성과 변용」, 『석당논총』 제50집, 2011.
- 권숙진, 『유럽 연합의 능동적 시민성 연구』,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 승, 「근대식민도시 부산의 형성과 발전」, [https://www.cultureline.kr/webgear/board\\_pds/](https://www.cultureline.kr/webgear/board_pds/)
- 김남석, 「〈영도다리〉에 나타난 바다의
- 이미지와 부산의 로컬리티 연구」, 『어문논총』 제57호, 2012.
- 김동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설문: 각 단체가 바라는 민주주의교육, 『부산민주 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 자료집』, 2019.
- 김동규, 「상처받을 수 있는 주체: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윤리 사이에서」, 『철학연구』 158집, 2021.
- 김동규, 「완월동과 향구 도시의 임계」,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3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 김동규, 「장애와 역량적 접근 그리고 공공성의 변증법」, 『한국문학논총』 79, 2018.
- 김동규, 「호러리즘과 임계적 공공성」, 『대동철학』 제79집, 2017.
- 김동규, 5장 「부산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부산인재평생교육원, 2019.
- 김선미, 「부산지역 4.19 민주항쟁의 주도세력」,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2010.
- 김선욱, 「한나 아렌트의 ‘이해’ 개념 이해하기」, 『철학연구』 132, 2014.
- 김소연, 「부산학 담론으로 본 부산성의 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8호, 2008.
- 김영일, 「지역학으로서의 부산학과 시민의식」, 『OUGHTOPIA』 제27권 1호, 2012.
- 김일환, 「복지는 어떻게 ‘사업’이 되었는가: 한국 사회복지법인의 역사로 본 형제복지원」, 『민주주의와 인권』 19-1, 2019.
- 김정인, 「한국사 연구와 교육의 시민화 경로로서의 동아시아사」, 『史林』 47집, 2014.
- 김태만, 「부산성 · 주변성 · 해양성」, 『오늘의 문예비평』 2001년 가을호.
- 나종석 · 권용혁 · 이진원, 2009. 「동아시아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상과 전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리타 홍 핀체(저), 윤승리(역), 2020. 『빅브라더에 맞서는 중국 여성들』 (부산: 산지니)
- 마루카와 데쓰시, 『리저널리즘 동아시아의 문화지정학』, 그린비, 2008.
- 문성원, 「민주주의를 넘어서」, 『철학의 슬픔』, 그린비, 2019.
- 문헌병,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비판이론』, 동녘, 1993.
-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 수양』, 심세광 외 역, 동녘, 2016.
- 박선주 · 오경환, 홍양희 역음, 『고아, 족보 없는 자』, 책과 함께, 2014.
- 박성인 · 박명림, 「동아시아 시민성 교육의 구안」, 『글로벌교육연구』 12집 4호, 2020.
- 박승우,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 리뷰」, 『아시아리뷰』 제1권 제1호, 2011.

- 박해남, 「한국 발전국가 시기 사회정치와 부랑인의 사회적 배제」, 『민주주의와 인권』 19-4, 2019.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 통계연보 1955-1957』, 1958.
- 보건사회부, 『아동복지사업 4282~4291』, 1958.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1979부마로드』, 2021.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민주시민교육 연구보고서 2020, 부산지역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연구』, 민주화기념사업회, 2020.
- 부산문화재단, 「부산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을 통한 실태조사」, 2018.
-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부산시넷 출범식 자료집』, 2019.
-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부산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9.
- 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 2021.
- 부산민주운동사 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2』, 2021.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공원, 『제22회전국청소년농술토론회마당 지도교사 간담회』, 2021.
- 부산복지개발원, 「2020 부산광역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 2020.
- 서병훈 · 김비환 · 장현근 · 심승우 · 김현주, 『동서양의 통섭과 동아시아 시민주의의 이론적 토대』, (세종:경제 · 인문사회연구원), 2014.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형제복지지원연구팀 엮음, 『절멸과 갭생 사이, 형제복지원의 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서희경, 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봄호 제30권 제1호 통권 10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손인주,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29권1호, 2020.
- 송호근,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 변동』, 나남, 2013.
- 송호근, 『인민의 탄생: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11.
- 신철희, 「민 개념의 이중성과 민주주의의 기원」,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2호, 2013.
- 아마르티아 센, 『정체성과 폭력: 운명이라는 환영』, 이상환, 김지현 역, 바이북스, 2009.
- 아사드 하이다, 『오인된 정체성: 계급, 인종, 대중운동, 정체성 정치 비판』, 권순욱 역, 두번째테제, 2021.
- 악셀 호네프(문성훈 외 역), 『정의의 타자: 실천철학 논문집』, 나남, 2009.
- 안토니오 네그리(정남영 외 역), 『공통체』, 사월의 책, 2014.
- 양기대, 「동북아 군비경쟁과 지역통합의 대안모색」,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233호, 2013.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14612&c=1&m=11>
- 에드워드 쉘프 (김덕현 외 공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예지숙, 「일제시기 조선에서 부랑자의 출현과 행정당국의 대책」, 『사회와 역사』 102, 2015.
- 오지필름, 『오지필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1.
- 우양호, 「동아시아 해방도시의 전쟁과 식민지 유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2020.
- 윌터 미놀로, 『로컬 히스토리 글로벌 디자인: 식민주의성, 서발턴 지식, 그리고 경계사유』, 이성훈 역, 에코리브르, 2013.
- 위르겐 하버마스(홍윤기/이정원 역), 『이론과 실천』, 종로, 1981.

- 위르겐 하버마스, 『후기 자본주의의 정당성 문제』, 종로서적, 1983.
- 유승상, 『아시아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아시아교육연구』 17권 특별호, 2016.
- 윤해동, 「정치 주체 개념의 분리와 통합: 박명규, 박찬승의 개념사연구」, 『개념과 소통』 제6호, 한림과학원, 2010.
- 이기호, 「동아시아의 복합위기의 특성과 대응단위로서 평화도시의 가능성과 전략」, 『공간과 사회』 22권 3호, 2012.
- 이도흠, 「동아시아문학,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법론」, 『비교문학』 77집, 2019.
- 이동윤,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교훈: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글로벌교육연구』 12집 2호, 2020.
- 이은미, 「시민교육의 확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의의」, 『시민교육연구』 제46권 3호, 2014.
- 이종화, 「홍콩의 집단기억과 시위 그리고 정체성 정치」, 『중소연구』 42권 3호, 2018.
- 이푸투안, 『공간과 장소』, 윤영호 · 김미선 역, 사이, 2020.
- 이흥규, 「동아시아지역주의와 평화: 역사, 구조, 함의」, 『아시아연구』 23권4호, 2020.
- 이희옥, 「동북아 시민사회 교류와 공동체적 지역통합」, 한국동북아시아학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이희옥 · 김재관 · 주창환 · 양평섭 · 이흥규, 『한중 FTA와 동아시아지역주의』 (서울: 풀빛), 2009.
- 임마누엘 칸트, 『형이상학 서설』, 백중현 역, 아카넷, 2017.
- 임마누엘 칸트, 『칸트의 역사철학』, 이한구 편역, 서광사, 2005.
- 임우경, 「비판적 지역주의로서 한국 동아시아론의 전개」, 『중국현대문학』 40호, 2007.
- 임춘성, 「동아시아인의 정체성 형성, 장애와 출구: 비판적 동아시아담론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61호, 2010.
-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 지적 해방에 대한 다섯 가지 교훈』, 양창열 역, 궁리, 2008.
-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13.
- 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피어나, 2017.
- 장정아, 「홍콩의 법치와 식민주의: 식민과 토착의 뒤틀림」, 『한국문화인류학』 38권1호, 2005.
- 전성현, 「'양서'와 '금서' 사이」, 『부산교육』 제99호, 2021.
- 전성현, 「동아시아 시민성 확보를 위한 길고 먼 여정」, 『동서중국』 11호, 2021.
- 전성현, 「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 - 1920년대 초 의열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 2011.
- 전성현, 『1919, 그날의 기록 3, 경상도|전라도|충청도』, 국사편찬위원회, 2020.
- 정창조, 강해민, 최예륜, 홍은전, 김윤영 저 외 3명, 『유언을 만난 세계 장애해방열사: 죽어서도 여기 머무는 자』, 오월의봄, 2021.
- 정혜정, 「민주 사회를 위한 시민교육과 한국적 인문학: 동학·천도교를 중심으로」, 『Oughtopia』 32권 1호, 2017.
- 제점숙 · 송봉호, 「부산지역의 근대문화유산과 역사인식 문제」, 『항도부산』 제33호, 2017.
- 제프 말파스, 『장소와 경험』, 김지혜 역, 에코리브르, 2014.
- 조르조 아감벤, 『호모사케르: 주권과 벌거벗은 생명』,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 조수진 · 남상준, 「장소기반교육의 사회과교육적 의의 및 효과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23권 1호, 2015.

- 조일수, 「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성 형성 방안」, 『윤리연구』 제115호, 1권115호, 2017.
- 진시원 · 홍익표 · 오승호, 『시민주권과 민주시민교육』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 추지현, 「박정희 정권의 ‘사회악’ 호명: 형사사법의 효율성 확보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17, 2018.
- 칼 슈미트(김항 역), 『정치신학』, 그린비, 2010.
-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황가한 역), 『보이지 않는 여자들』, 웅진지식하우스, 2020.
- 캐시 박 흥, 『마이너 필링스: 이 감정들은 사소하지 않다』, 노시내 역, 마티, 2021.
- 표지영, 「1950년대 부산의 아동수용시설 연구 - 시설 급증의 계기와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21.
- 하남석, 「시진핑 시기 중국의 노동운동 탄압과 저항의 양상들」, 『도시인문학연구』, 12권 1호, 2020.
- 한나 아렌트(이진우 역),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6.
-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편),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서울: 한울), 2011.
- 함규진, 「전통 동아시아 사상의 민주주의적 가능성-정약용과 황종희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통권 63호, 2016.
- 허병식, 「식민지의 접경, 식민주의의 공백」, 『한국문학연구』, 제40권, 2011.
- 홍윤기 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 · 18기념재단, 『민주청서 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 홍은전, 『그냥, 사람』, 봄날의 책, 2020.
- Adriana Cavarero, *Horrorism: Naming contemporary violenc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1.
- EIU, *Democracy Index 2020: In sickness and in health?*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0.
- G. W. F. Hegel, *Vorlesung über die Ästhetik*, Suhrkamp, 1986.
- Gilbert Rozman, "Reshuffling Priorities for Northeast Asian Security: Revisionism, Regionalism, Reunification, and Realism," *Korea Observer*, Vol.38, No.2, Summer, 2007.
- Jeffrey C. Alexander, *Trauma: a social Theory*, Polity, 2012.
- Jürgen Habermas, "Arbeit und Interaktion"(1967), *Technik und Wissenschaft als Ideologie*, Suhrkamp, 1969.
- P. J. Katzenstein,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 Song, Gilsun, 「Shift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roadening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Global Events in China」, 『아시아교육연구』 17권 특별호, 2016.

## 참고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12190600035> 주자네 베어 독  
일 연방헌재 재판관 인터뷰 기사 경향신문, 2018.12.19 15:01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2100300005> 고병권의 목록, 〈죽은 사람  
들의 죽지 않은 말〉, 경향신문, 2021.12.10. 03:00

경향신문 2011년 9월 7일

연합뉴스 2021년 9월 1일

인천인(in) 2021년 6월 10일

부산시보 2021년 7월 30일

부산일보 2019년 11월 6일

황룡닷컴 2015년 3월 4일

건축사지 지역건축특집 시리즈② – 대담 “부산·경남 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2013년 12월.

“근대를 끌어안은 한국 제1항구도시”

<https://ncms.nculture.org/legacy/story/4546?jsi=>

「中·日역사왜곡 심해졌는데 ‘동아시아사’ 과목 폐지한다고?」, 『조선일보』 2021년 11월 24일.

「끼리끼리 뭉치는 세계…‘지역 통합’ 거센 바람」, 『한겨레』 2008년 7월22일.

「한-일 여성이 함께 쓴 ‘질곡의 여성사」, 『한겨레』 2005년 11월1일.

박민희, 「사라진 위구르인들…중국판 테러와의 전쟁」, 『한겨레』 2020년 9월 2일.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0277.html>

## 참고영상과 사이트

<https://e-gonghun.mpva.go.kr/>

<http://toron.demopark.or.kr/>

<http://buma1979.or.kr/>

John Huston, 〈Let There Be Light〉(1946)

<https://www.youtube.com/watch?v=uiD6bnqpJDE>

부산시장 인터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tKTTyxK6ZQ>

대저대교 건설문제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K8HrBMsP00>

박배일, 〈나비와 바다〉(2011)

플루이트 아이고 주택단지 폭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CAfACI7LBY>





## 동아시아 시민성을 향하여

2021년 12월 20일 발행

편저 |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펴낸이 | 박윤희

펴낸곳 | 도서출판 소요-You

디자인 | 윤경디자인 070-7716-9249

등록 | 2013년 11월 12일(제2013-000009호)

주소 | 부산시 중구 대청로137번길 11

전화 | 070-7716-9249

팩스 | 0505-115-5618

전자우편 | pyh5619@naver.com

ISBN 979-11-88886-15-9

비매품





비매품